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유보람 · 홍근석



저 자 유보람, 홍근석

연구책임자 **유보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구 진 **홍근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 국가(지역) 경제 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역할과 중요성 강조

- 소상공인 사업체의 지속적 규모 확대 및 경제 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독립성이 법률로서 보장됨
-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며,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및 조직설계 필요

- 소상공인 영업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환경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됨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2023년 사업비 기준 331,130백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운영·성과 및 사후 관리 체계 전반에 관한 통합적 관리가 어렵고, 일부 중복사업의 시행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상황임(인천광역시 내부자료¹⁾)
-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마련 필요

1) 2023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2. 연구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사무 책임 및 역할 검토

- 수혜대상자의 수요(설문조사) 측면, 법·제도적 측면, 현행 방식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무의 내용과 타 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무 책무 및 역할을 검토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 기구 설립방안 타당성 검토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검토 중인 두 개의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전담 기구 조직 유형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함
 - (1안) 현행조직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 위탁) 유지 및 확대
 - (2안) 독립재단법인 설립
- 지방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조직 유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며, 구체적 평가지표는 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평가(법·제도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 ② 설립 기대효과(주민복지증진에 미치는 효과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가 있음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구의 구성 방안별 특징의 종합적 평가

- 설립방안에 따른 추진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1안)과 (2안)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고, 유형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 범위 및 방법

□ 시·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재정 현황 및 소상공인 전담 지원조직 및 체계, 타 시·도 사례 분석 등 기본적인 사항은 2023년으로 설정하며, 시계열적 추이가 필요한 내용은 2017년 이후의 자료를 포함함
- (공간적 범위) 전국 광역자치단체: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조직 사례분석은 2023년, 인천광역시: 재정 여건 및 소상공인 지원 체계(조직) 분석

□ 연구 방법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분석
- 전국 소상공 사업체 현황 및 변화추이 및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재정 현황
- 소상공인 지원조직 운영방식에 따른 시·도 사례분석
-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구 설립방안별 타당성 평가

4. 전담기구 설립방안 검토

□ 타당성 검토 개요

- 타당성 검토에 앞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 조직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 사무의 유형을 크게 4개 분야로 선정함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노후상가 거리 활성화, 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전환 사업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 채무상당지원, 개인파산 및 면책지원, 개인회생 지원, 워크아웃 지원
 - 소상공인불공정거래지원: 불공정거래 피해상당, 불공정거래 및 상가임대차 피해 구제지원, 불공정거래 및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공정경제 토론회 개최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 연구개발: 인천시 관내 상권 분석, 인천시 관내 상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소상공인 지원 정책연구, 소상공인 지원 신사업 발굴 등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법·제도적 타당성 분석 결과 (2안) 별도의 독립재단 설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부적합 사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사무를 대상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자치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부적합사무 및 공공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부적합 사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지방출자·출연기관 수행 부적합 사무는 크게 5가지 기준으로 분류되며 이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부적합 사업에 해당하는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독립재단의 설립(2안)은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음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2안)재단 신설은 (1안)현행 조직 유지에 비해 최소 1.8에서 최대 2.0배까지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1-1)현행조직유지	4,230	4,645	5,115	5,648	6,252	25,891	
(1-2)현행조직유지+ 연구개발팀(신설)	5,084	5,563	6,105	6,718	7,412	30,881	
(2)재단신설	최소	7,066	8,318	8,921	10,798	11,581	46,684
	최대	7,935	9,309	10,050	12,084	13,046	52,424

주: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향후 5년 비용 추정(단위:백만원)

□ 설립의 기대효과

-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효과분석 결과 현재 지원사무인 자금지원, 홍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폐업 및 재기지원, 교육 지원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분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1안) 현행 조직 유지 및 확대, (2안) 독립재단 설치 모두 주민복리증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상공인 사업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와 마케팅, 자금지원(보증지원, 이차보전, 직접 자금 지원 등) 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안)으로 가는 경우 자금지원(보증지원 및 이차보전²⁾)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편의성·접근성 측면에서 (1안)의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2) 소상공인 사업자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고유사무 영역임. 또한 신규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기존기관과의 중복 사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금지원(보증지원 및 이차보전) 업무는 (2안) 신규 독립재단에서 수행할 수 없음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천광역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양호한 편으로 확인됨. 재정자주도는 특·광역시 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재정력이 강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유형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예산대비채무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유사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가용재원비율은 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가용재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근거하여 투자가용재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투자 가용재원보다 사업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본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경우 자원조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향후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유형별 특성 및 정책적 제언

- (1안)과 (2안) 모두 조직 유형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며, 유형 결정 이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1안) 현행 조직 유지는 다음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함
 -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 내 6개 지역 지점을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지원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금융·비금융의 통합 지원으로 비금융(경영지원) 지원사업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계약에 의한 사업 수행 및 시설 운영으로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며, 고유사무 외에 새로운 영역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이 부족할 수 있음
 - (2안) 재단 형태 출연기관 설립은 다음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함
 - 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만큼 전문성 높은 신규 인력 채용이 가능하며, 세부 추진 사업을 결정할 때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관한 고려 요소가 적으므로 사업의 다양성 및 자율성 확보가 가능함

- 다만 신규 기관의 설치로 임대료 및 기자재 구입 등의 비용이 소요되며, 사업 부서 외에 경영지원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정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이 수반되어 소요 예산 부담이 가중됨
-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설립 기간이 소요됨

□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유형의 조속한 의사결정 필요하며, 현장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한 대상 사무 및 세부 업무 내용을 확정할 것을 제안함

- 시의성·실효성 측면에서의 전담 기구 조직 유형 결정이 필요하며, 조속한 조직 유형 결정과 세부 지원사업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조직 유형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상 사무의 영역과 세부 사업내용은 인천광역시 소공인, 소상공, 전통시장 대표를 포함한 TF 결성을 통하여 진행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기를 제안함

목 차

제1장 |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제2장 | 인천광역시 기초환경 분석

제1절 인천광역시 기초현황	13
1. 일반 현황	13
2.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예산현황	19
3. 기초환경분석 종합	22
제2절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현황	23
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일반현황	23
2.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37

제3장 | 소상공인 지원 법규 검토 및 시·도 지원사례

제1절 소상공인 지원 법규 검토	41
1. 사무배분 일반론	41
2. 법률상 소상공인 사무 구분 현황	43
3. 법규 검토의 종합	51

제2절 소상공인 지원조직 운영 현황	52
1. 소상공인 지원조직 전국현황	52
2. 소상공인 지원조직 운영 사례 분석 결과의 종합	61

제4장 | 전담기구 설립방안 검토

제1절 타당성 검토 개요	65
1. 설립 타당성 검토 개요	65
2.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분석틀	66
제2절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83
1. 법·제도적 타당성	83
2. 경제적 타당성	88
제3절 설립의 기대효과	106
1. 주민복지증진에 미치는 효과	106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24

제5장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종합	143
제2절 정책적 제언	148

【참고문헌】 153

【부록】 155

부록 1. 시·도별 소상공인 지원조직 현황	155
부록 2.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지	221

표 목차


[표 2-1] 인천광역시 전체인구 현황	16
[표 2-2] 시도(분청) 출자·출연 기관 현황	19
[표 2-3] 인천광역시 출연기관 현황	20
[표 2-4] 시도 분청 출자·출연금 규모	21
[표 2-5] 시도별 기업규모별 기업수('20)	23
[표 2-6] 인천 구별 기업 규모별 기업수('20)	23
[표 2-7] 인천 구별 소상공인 기업수 변화('19~'20)	26
[표 2-8] 전국-인천 산업별 소상공인 기업수 변화 비교('19~'20)	27
[표 2-9] 인천 구별 소상공인 종업원수 변화('19~'20)	29
[표 2-10] 전국-인천 산업별 소상공인 종업원수 변화 비교('19~'20)	29
[표 2-11] 인천광역시 기업 신생 및 소멸 수('20)	31
[표 2-12] 인천광역시 신생기업 생존율('20)	32
[표 2-13] 인천광역시 업종별 신생률 및 소멸률('20)	32
[표 2-14]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매출액 변화('18~'20)	34
[표 2-15]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영업이익 변화('18~'20)	35
[표 2-16]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부채액 변화('18~'20)	36
[표 3-1]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현황(2023.5.1기준)	56
[표 3-2] 경기시장진흥원 주요 사업	58
[표 3-3]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주요 업무 현황(23년 기준)	60
[표 3-4] 지역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지원 주요 업무 현황(23년 기준)	61
[표 4-1]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대상사업	66
[표 4-2] (가칭)인천소상공인지원재단(사업본부) 대상사업 및 사업내용	69
[표 4-3] 현재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 업무	71
[표 4-4]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상사업 및 사업내용 수정(안) ..	72

[표 4-5] 지방출자출연법 지정 대상사업	74
[표 4-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74
[표 4-7]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75
[표 4-8]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2017)에 따른 부적합 대상 사무	77
[표 4-9]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	83
[표 4-10] 법적 대상사업 여부 검토	84
[표 4-11] 지방출자·출연기관 수행 부적합 사무에 대한 체크리스트	86
[표 4-12] 지방출자·출연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	86
[표 4-1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 조직 현행 유지시 직급별 인력(안)	89
[표 4-14] (가칭)인천소상공인지원재단 신설 시 직급별 인력(안)	90
[표 4-15]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 조직 현행 유지시 인건비 추정	92
[표 4-16] (가칭)인천소상공인지원재단 신설시 인건비 추정	93
[표 4-17]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향후 5년 인건비 추정	95
[표 4-18]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2022년 사업예산	96
[표 4-19]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요 사업 현황(2022년)	98
[표 4-2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연도별 사업비 세출 예산	100
[표 4-21]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상공인 현황(2020년)	100
[표 4-22] (가칭)인천소상공인지원재단 신설 시 사업비 추정	101
[표 4-2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향후 5년 사업비 추정	102
[표 4-24]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향후 5년 경상운영비 추정 ..	103
[표 4-25]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향후 5년 임대료 및 관리비 추정 ..	104
[표 4-26]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비용 추정	104
[표 4-27]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향후 5년 비용 추정	105
[표 4-28] 주요 설문조사 항목 개요	106
[표 4-29] 응답자 특성	107
[표 4-30] 응답자 특성(성별·연령별)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1순위)	111
[표 4-31] 응답자 특성(업종별)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1순위)	112
[표 4-32] 기참여 지원사업 중 매출증대 기여 사업	116

[표 4-33] 기참여 지원사업 중 경영 안정성 개선 기여 사업	117
[표 4-34] 향후 매출증대를 위한 필요 사업	118
[표 4-35] 향후 경영 안정성 개선을 위한 필요 사업	118
[표 4-36] 매출 증대를 위한 필요사업: 성별·연령별 기준(1순위)	119
[표 4-37] 매출 증대를 위한 필요사업: 업종별 기준(1순위)	120
[표 4-38] 경영 안정성 개선을 위한 필요사업: 성별·연령별 기준(1순위)	121
[표 4-39] 경영 안정성 개선을 위한 필요사업: 업종별 기준(1순위)	122
[표 4-40] 인천광역시 연도별 세입 예산 추이	124
[표 4-41] 세입 자원별 현황	125
[표 4-42]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	125
[표 4-43] 재정자립도 연도별 추이	127
[표 4-44] 재정자주도 연도별 추이	128
[표 4-45] 인천광역시 채무현황 연도별 추이	129
[표 4-46] 시도별 예산대비채무비율(2021년)	130
[표 4-47] 주요 재정지표	131
[표 4-48] 주요 재정지표 분석	134
[표 4-49] 사업계획 방안에 따른 소요 자원	136
[표 4-50] 사업계획 방안에 따른 향후 5년 소요 자원	137
[표 4-51] 인천광역시 가용자원 현황	138
[표 5-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대안별 특성	150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9
[그림 2-1] 인천광역시 위치도	13
[그림 2-2]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14
[그림 2-3] 인천광역시 구별 월평균 주거인구('22)	17
[그림 2-4] 인천광역시 구별 월평균 직장인구('22)	18
[그림 2-5] 인천광역시 구별 월평균 방문인구('22)	18
[그림 2-6] 전국-인천 소상공인 기업수의 산업별 비중 비교('20)	25
[그림 2-7] 전국-인천 산업별 소상공인 기업수 비중 비교('20)	26
[그림 4-1] 비용-효과분석 흐름	80
[그림 4-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직도	98
[그림 4-3] 전체 사업체 운영 기간	109
[그림 4-4] 현재 사업체 종사자 수	109
[그림 4-5] 연간 순이익	110
[그림 4-6] 경영 애로사항(1순위)	110
[그림 4-7]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핵심주체	113
[그림 4-8]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경험 여부	113
[그림 4-9] 기참여 소상공인 지원사업	114
[그림 4-10]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미참여 사유	114
[그림 4-11] 기참여 소상공인 지원사업 효과성 결과(그래프)	115
[그림 4-12] 기참여 지원사업의 사업체 매출증대 도움 여부	115
[그림 4-13] 기참여 지원사업의 사업체 경영 안정성 도움 여부	116
[그림 4-14] 주요 재정지표 변화	13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국가(지역) 경제 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역할과 중요성 강조

-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고용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소상공 사업체의 지속적 증가로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 24.6% 수준으로 38개 OECD 국가 중 6위, 주요 7개국(G7) 중 1위로 매우 높은 수준임(OECD³⁾, 2020)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 상황에서도 2019년 대비 2020년 소상공인의 수는 6.24%⁴⁾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규모 역시 2019년 대비 2020년 6.95%⁵⁾ 수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소상공인 사업체의 지속적 규모 확대 및 경제 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독립성이 법률로서 보장됨

3) Self-employment rate

4) 기업체 기준 소상공 수(개): 2019년(6,445,316), 2020년(6,842,959), 자료: 「소상공인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공표('22.07.28)

5) 인천 소상공사업체 수(개): 2019년(331,733), 2020년(354,547), 자료: 「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한 부류로 인식되어 「중소기업기본법」 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며,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각 지자체는 중앙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역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소상공인 생존을 관리 필요

- 소상공인 영업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환경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됨
 - 경기 침체 및 전염병 발생에 따른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은 내수시장 기반인 소상공 사업체 영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도영호 외, 2020)
- 전국 소상공 사업체(개인) 1년 생존율(78.9%), 3년 생존율(45.6%), 5년 생존율(31.4%)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10개의 창업 업체 중 3곳만이 5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임성희·김진옥, 2021)
- 급변하는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 사업체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서는 현장의 니즈와 환경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한계점 보완 필요

- 소상공인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에 따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수의 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기관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남부·북부센터)과 인천광역시 산하 인천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디딤돌센터) 및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시 위탁 운영)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해당 기관 외에도 인천광역시테크노파크,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관광공사 등의 조직에서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체계는 다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2023년 사업비 기준 331,130백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운영·성과 및 사후 관리 체계 전반에 관한 통합적 관리가 어렵고, 일부 중복사업의 시행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상황임(인천광역시 내부자료⁶⁾)
 - 2023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비 총 규모는 331,130백만원에 이르고 이 중 시비(262,122백만원), 구비(11,893백만원)으로 약 83%의 비용이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 필요

-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마련 필요함
- 인천광역시 기초 여건 분석 및 소상공인 전담 기구 설치 방안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기구 설치 방안 마련 필요

6) 2023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2. 연구목적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구성 필요성 검토

- 인천광역시 기초여건 분석 및 소상공 사업체 현황분석을 통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 기구 필요성 논의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사무 책임 및 역할 검토

- 소상공인 지원 법규 검토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소상공인 지원사무 책임 범위 논의
- 타 시·도 사례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무 영역 및 지원 방식 검토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기구 설립 계획 검토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무 범위 설정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 기구 설립 방안별 타당성 평가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구 설립 추진(안) 타당성 비교·분석
 - (1안) 현행조직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 위탁) 유지 및 확대
 - (2안) 독립재단법인 설립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 기구구성 방안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타당성 검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이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의 중점 사항은 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② 설립 계획의 적정성 ③ 설립의 기대효과로 구분됨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법·제도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설립 계획의 적정성(조직 및 인력 운영)’, ‘설립 기대효과(주민복지증진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됨(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2021)

- 현 수준에서 검토 가능한 타당성 평가 항목은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법·제도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과 “설립 기대효과(주민복지증진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가 있으며 두 개의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 유형별 타당성을 비교·분석함
 - 해당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두 개 유형의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출연기관 설립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구의 구성 방안별 특징의 종합적 평가

- 설립방안에 따른 추진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1안)과 (2안)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고, 유형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재정 현황 및 소상공인 전담 지원조직 및 체계, 타 시·도사례 분석 등 기본적인 사항은 2023년으로 설정하며, 시계열적 추이가 필요한 내용은 2017년 이후의 자료를 포함함

□ 공간적 범위

- 전국 광역자치단체: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조직 사례분석
- 인천광역시: 재정 여건 및 소상공인 지원 체계(조직) 분석

2. 연구방법

□ 정책 및 법률분석

- 중앙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법률
- 인천광역시 및 자치구(군) 조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현황분석

- 전국 소상공 사업체 현황 및 변화추이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재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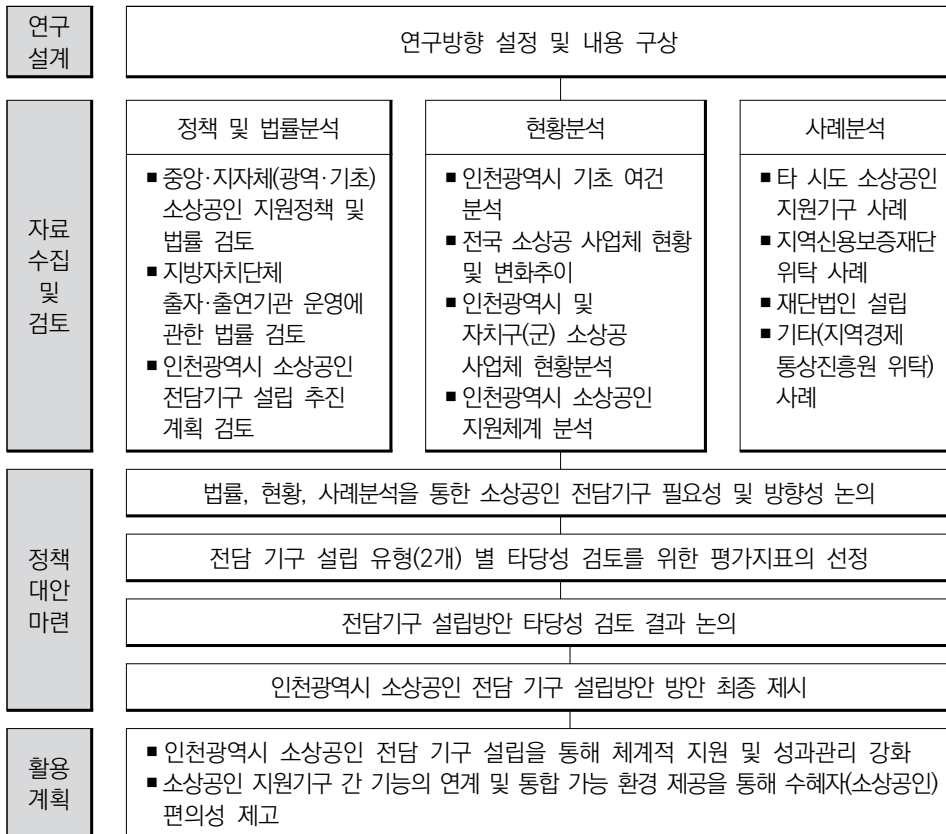
□ 사례분석


- 소상공인 지원조직 운영방식에 따른 시·도 사례분석
 - 소상공인 지원기구 운영방식: 지역신용보증재단 위탁방식, 독립재단, 기타 (지역경제통상진흥원 위탁)로 구분됨

□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구 설립방안별 타당성 평가

-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구 설립(안) 타당성 평가지표 마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지표 활용하여 분석지표 선정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제2장

인천광역시 기초환경 분석

제1절 인천광역시 기초현황

제2절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현황



제1절 인천광역시 기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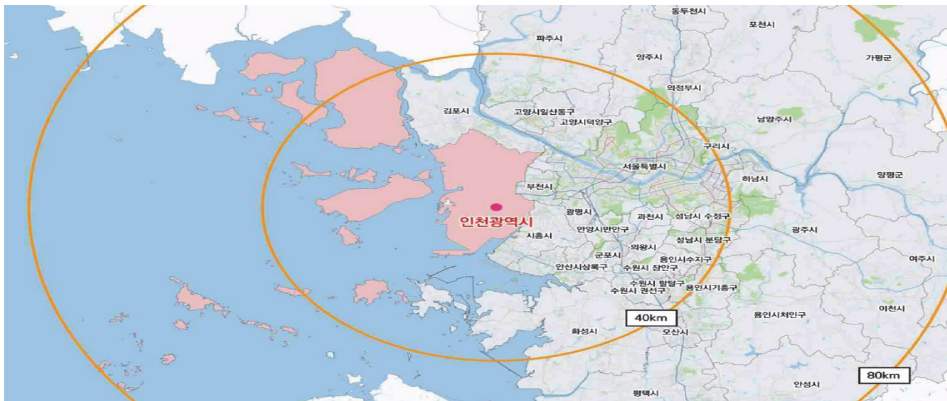
1. 일반 현황

1) 지리적 특성)

(1) 위치 및 면적

- 항구도시인 인천광역시는 한반도의 중앙부 서해안에 위치하였으며 동북아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행정구역은 서해안의 백령도, 덕적도, 연평도 등을 포함하여 동서 간 약 192.23km, 남북 간 117.6km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면적은 1,063.26㎢에 달함

[그림 2-1] 인천광역시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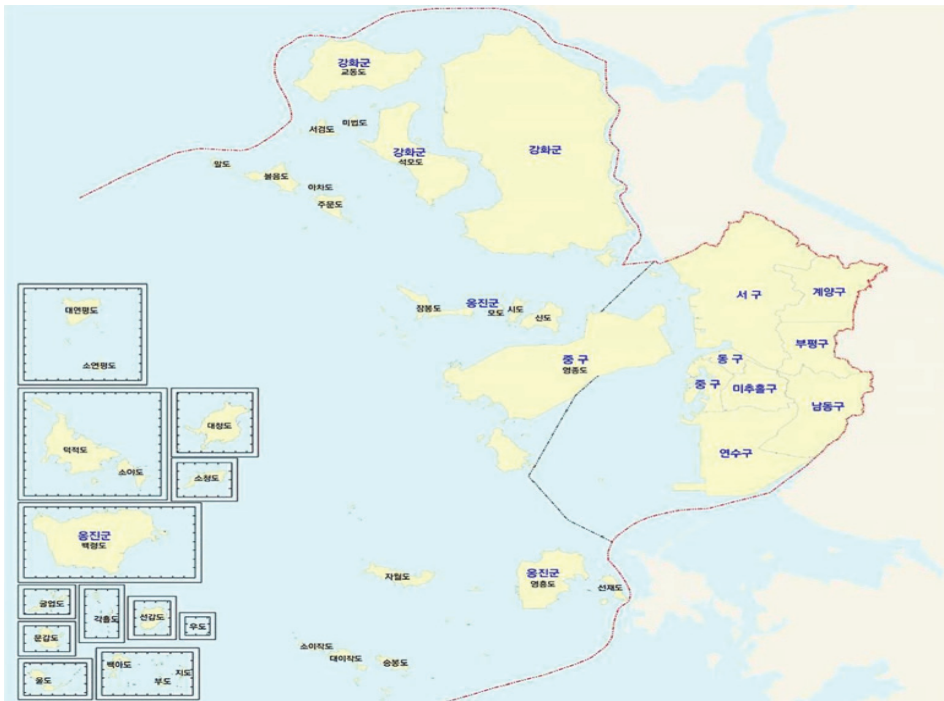
출처: 인천광역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2

7)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참조

(2) 행정구역

- 인천광역시는 1981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정부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 광역시로 명칭 변경,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광역시와 통합시켰음
- 2018년 ‘남구’를 ‘미추홀구’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2022년 12월 기준 행정 구역은 2군 8구 1읍 19면 135동으로 구성됨
-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권으로는 서울 서남부 지역과 경기도 김포시를 비롯해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와 형성되어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수도권 및 서해안권과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 2-2]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출처: 인천광역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2

2) 인구 특성

(1) 전체인구 비교

- 인천광역시 총인구는 2,957,04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인구이며 전국 대비 비중은 5.72%임
 - 인천 10개 구별 인구수는 서구가 551,026명(1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521,165명, 17.6%), 미추홀구(412,022명, 13.9%) 순임
 - 인구밀도는 2,773명/km²로, 미추홀구 16,590명/km², 부평구 15,455명/km², 동구 8,483명/km² 순으로 높았음
- 5년간('17~'21) 인구증가율은 0.26%로, 전국 평균(0.15%)보다 높은 4위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음
 - 10개 구 중 7번째로 인구가 많은 중구의 인구증가율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연수구(4.31%), 서구(1.96%), 강화군(0.81%)도 인구가 증가함
 - 반면 동구(-2.72%), 계양구(-2.20%), 부평구(-2.09%)는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 외국인 수는 100,379명이며 인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 구별 외국인 수는 부평구가 22,35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연수구 19,897명, 서구 16,378명 순으로 많았음
 - 구별 인구수 대비 외국인 비율은 연수구(5.0%), 부평구(4.5%), 중구(3.6%)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곳은 용진군(1.5%), 강화군(1.6%), 동구(1.9%)였음
- 65세 이상 인구수는 407,063명으로, 인천 전체인구의 13.8%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16.0%)보다 낮게 나타남
 - 총인구가 적은 강화군(32.3%), 용진군(27.5%), 동구(22.9%)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높았고, 연수구(9.7%), 서구(10.6%), 계양구(13.1%) 낮음

[표 2-1] 인천광역시 전체인구 현황

(단위: 명, %, 명/㎢)

	전체인구 ¹⁾	인구 밀도 ²⁾		인구 증가율 ³⁾	남	여	외국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		
		합계	비율					비율	비율	
인천	2,957,044	100.0	2,772.8	0.26	1,482,202	1,474,842	100,379	3.4	407,063	13.8
중구	141,758	4.8	1,009.9	5.33	73,095	68,663	5,151	3.6	19,769	13.9
동구	61,053	2.1	8,482.9	-2.72	30,640	30,413	1,190	1.9	13,989	22.9
연수구	399,594	13.5	7,111.2	4.31	198,779	200,815	19,897	5.0	38,710	9.7
남동구	521,165	17.6	9,071.8	-0.61	260,262	260,903	16,395	3.1	71,232	13.7
부평구	494,641	16.7	15,455.3	-2.09	244,210	250,431	22,352	4.5	72,446	14.6
계양구	290,967	9.8	6,385.4	-2.20	143,944	147,023	4,635	1.6	38,012	13.1
서구	551,026	18.6	4,650.4	1.96	279,909	271,117	16,378	3.0	58,443	10.6
미추홀구	412,022	13.9	16,590.4	-0.25	207,524	204,498	13,025	3.2	67,988	16.5
강화군	65,834	2.2	160.0	0.81	32,927	32,907	1,075	1.6	21,245	32.3
옹진군	18,984	0.6	109.8	-0.40	10,912	8,072	281	1.5	5,229	27.5

주: 1) 인구총조사 자료

2) 총인구(인구총조사) ÷ 행정구역면적(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3) 총인구(인구총조사) '17~'21년 연평균 증가율, 미추홀구는 '18~'21년 연평균 증가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통계청, 도시계획현황(한국국토정보공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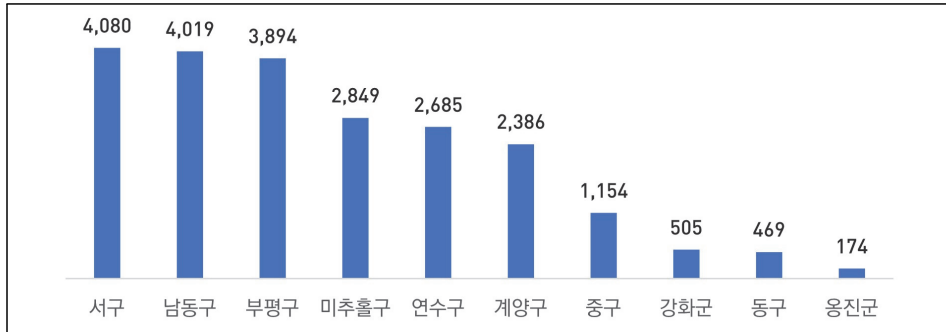
3) 자치구(군)별 인구 비교

(1) 주거인구⁸⁾

- 인천광역시에 야간에 체류하는 ‘주거인구’는 월평균 222만명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거인구 또한 많이 분포하는 모습을 보임
 - 서구(40.8만명), 남동구(40.2만명), 부평구(38.9만명)이 가장 많았으며 옹진군(1.7만명), 동구(4.7만명), 강화군(5.1만명)이 가장 적었음

[그림 2-3] 인천광역시 구별 월평균 주거인구(’22)

(단위: 백명)



출처: 인천디지털시정

(2) 직장인구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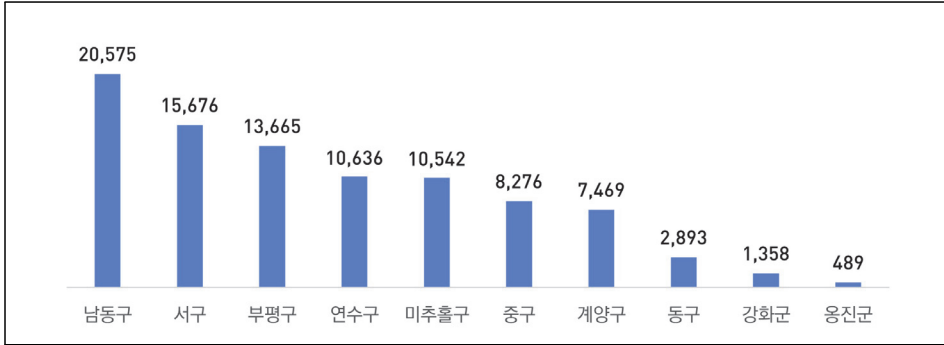
- 주간 체류인구인 ‘직장인구’는 월평균 916만명으로, 주거인구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임
 - 주거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157만명)보다 남동구(206만명)가 많았고, 연수구(106만명)가 미추홀구(105만명)보다 많았으며 계양구(75만명)보다 중구(83만명)가 많았음

8) 인천디지털시정의 2022년 월별 성연령별 주거인구(00시~06시 사이, 같은 행정동에 50% 이상 체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http://onsight.incheon.go.kr/ic/living_population.do)

9) 인천디지털시정의 2022년 월별 성연령별 직장인구(09시~18시 사이, 같은 행정동에 30% 이상 체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http://onsight.incheon.go.kr/ic/living_population.do)

[그림 2-4] 인천광역시 구별 월평균 직장인구('22)

(단위: 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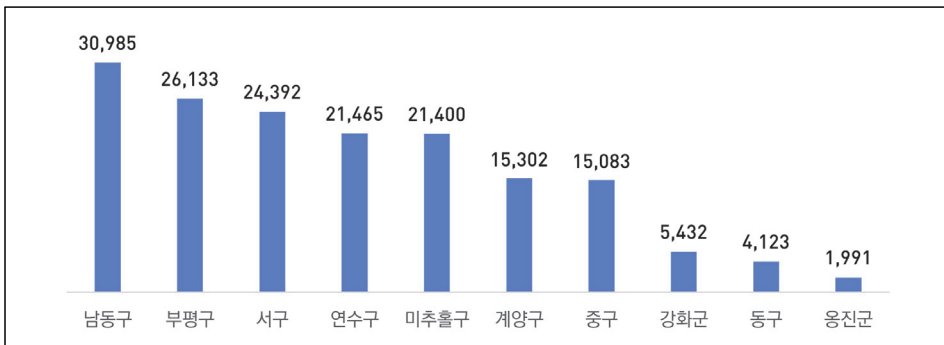
출처: 인천디지털시정

(3) 방문인구¹⁰⁾

- 주거인구와 직장인구를 제외한 순수 ‘방문인구’는 1,660만명으로, 남동구, 부평구, 서구가 가장 많았음
- 직장인구가 더 많은 서구(244만명)보다 부평구(261만명)이 많았으며, 동구(41만명)보다 강화군(54만명)이 많았음

[그림 2-5] 인천광역시 구별 월평균 방문인구('22)

(단위: 백명)



출처: 인천디지털시정

10) 인천디지털시정의 2022년 월별 성연령별 방문인구(주거, 직장인구를 제외한 순수 방문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http://onsight.incheon.go.kr/ic/living_population.do)

2.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예산현황

(1) 시도 본청 출자·출연기관 현황

- 시도 본청의 출자·출연기관은 '22년말 기준 총 28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13개소로 전체기관 중 4.6%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 시도(본청) 출자·출연 기관 현황

(단위: 개, %)

시·도	시도(본청) 출자·출연기관 현황			
	계	(비율)	출자기관	출연기관
총계	284	100.0	20	264
서울특별시	20	7.0	-	20
부산광역시	19	6.7	2	17
대구광역시	8	2.8	1	7
인천광역시	13	4.6	4	9
광주광역시	17	6.0	1	16
대전광역시	14	4.9	-	14
울산광역시	10	3.5	-	10
세종특별자치시	8	2.8	3	5
경기도	23	8.1	2	21
강원도	26	9.2	4	22
충청북도	13	4.6	-	13
충청남도	21	7.4	-	21
전라북도	15	5.3	-	15
전라남도	24	8.5	-	24
경상북도	23	8.1	1	22
경상남도	16	5.6	1	15
제주특별자치도	14	4.9	1	13

자료: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22.12.31.기준

-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총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출자기관은 4개 기관, 출연기관은 9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유형은 건설, 에너지, 문화, 복지, 의료, 신용보증, 장학, 연구 등이 있음

[표 2-3] 인천광역시 출연기관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기 관 명	설립일자 (통합일)	조 직	정원 (현원)	2023년 예산	감독부서
출연 기관 (9)	인 천 의 료 원	'85.07.01	1분원, 1본부, 1의학연구소, 2센터, 5실, 5부, 1처, 21진료과, 22팀, 19파트	635 (601)	864	보건의료정책과
	인 천 연 구 원	'95.08.18	2실 4부 3센터	106 (98)	166	정 책 기 획 관
	인천신용보증재단	'98.01.20	2본부, 1실, 1센터, 3부, 1팀, 7지점	86 (83)	1,758	소상공인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98.06.18 (*16.07.01)	1실, 5본부, 2단, 8팀, 21센터	223 (200)	3,052	산 업 정 책 과
	인 천 문 화 재 단	'04.12.01 (*17.03.01)	2실, 4본부, 12팀	104 (97)	461	문 화 정 책 과
	인천글로벌캠퍼스 운 영 재 단	'12.02.21	4본부, 9팀	162 (155)	328	경 제 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인천여성가족재단	'12.11.27	1실, 3부, 5수탁기관	67 (64)	77	여 성 정 책 과
	인 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85.01.07 (*13.01.17)	2실, 3부, 2센터	26 (22)	82	교육협력담당관
	인천사회서비스원	'18.04.24	4실, 1단, 2팀	58 (53)	155	복 지 정 책 과
출자 기관 (4)	인천스마트시티(주)	'12.05.24	3본부, 1연구소	85 (73)	250	경 제 청 스 마 트 시 티 과
	인천종합에너지(주)	'04.06.10	CSO직할 1팀, 3본부, 9팀	- (86)	3,341	에 너 지 산 업 과
	(주)인천투자펀드(2)	'13.10.07	-	-	-	경 제 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주)인천투자펀드	'21.06.30.	-	-	0.15	경 제 청 서비스산업유치과

(2) 최근 3년간 시도 본청 출자·출연금 규모

○ 인천광역시의 최근 3년간(2019~2021) 출자·출연금 규모는 결산액 기준 5천 627억원이며 서울 4조 3,852억원, 경기 7,396억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임

[표 2-4] 시도 본청 출자·출연금 규모

(단위: 억원, %)

시·도	시도 본청 출자·출연금 규모									
	총규모	출자기관					출연기관			
		(비율)	소계	2021	2020	2019	소계	2021	2020	2019
총계	103,071	100.0	26,071	8,461	10,458	7,152	77,000	29,343	25,780	21,877
서울특별시	43,852	42.5	21,321	6,176	8,723	6,422	22,531	8,225	8,161	6,145
부산광역시	4,392	4.3	1,319	930	366	23	3,073	1,222	1,015	836
대구광역시	2,220	2.2	24	-	-	24	2,196	925	797	474
인천광역시	5,627	5.5	606	67	259	280	5,021	1,790	1,769	1,462
광주광역시	3,872	3.8	-	-	-	-	3,872	1,107	966	1,799
대전광역시	3,954	3.8	100	100	-	-	3,854	1,473	1,222	1,159
울산광역시	854	0.8	64	12	30	22	790	299	287	204
세종특별 자치시	1,097	1.1	50	10	32	8	1,047	510	343	194
경기도	19,121	18.6	531	289	242	-	18,590	7,107	5,995	5,488
강원도	1,860	1.8	125	78	-	47	1,735	1,032	403	300
충청북도	782	0.0	52	22	10	20	730	360	214	156
충청남도	4,127	4.0	868	418	450	-	3,259	1,190	1,248	821
전라북도	2,806	2.7	114	38	21	55	2,692	1,016	904	772
전라남도	1,838	1.8	42	2	20	20	1,796	662	551	583
경상북도	2,737	2.7	629	191	228	210	2,108	943	642	523
경상남도	1,159	1.1	-	-	-	-	1,159	552	376	231
제주특별 자치도	2,773	2.7	226	128	77	21	2,547	930	887	73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시, 결산기준

3. 기초환경분석 종합

- 인천광역시는 수도권과 서해안의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로 총 10개의 행정구역을 구성하며, 자치구별 인구 구성과 특성, 시설 및 산업 분야의 발달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지리적·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는 지역별 소상공 사업체 주요 업종 분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소상공 사업체 지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거 밀집 지역인지, 근린 상업지역인지, 상업·업무 시설이 밀집한 지역인지와 같은 특성에 따라 주요 소비 대상층, 주요 소비 시간대, 소비 연령층, 배후 지역 특성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 사업체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함
-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정책 집행이 필요한 영역임을 고려했을 때 인천광역시 자치구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강구가 필요해 보임

제2절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현황

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일반현황

1) 소상공인 현황

(1) 기업수

-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나타난 인천광역시의 소상공인 기업 수는 354,547개로 전국대비 5.2%,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이 분포해있음

[표 2-5] 시도별 기업규모별 기업수('20)

(단위: 개)

지역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전국	7,295,393	6,842,959	338,865	104,199	7,286,023	9,370
인천	377,079	354,547	16,953	5,280	376,780	299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시군구별 기업수)

- 구별 소상공인 기업수 분포를 살펴보면 인구수와 비례한 모습을 보임
 - 서구(66,034개, 18.6%), 남동구(64,061개, 18.1%)가 가장 많았으며 옹진군(2,944개, 0.8%), 강화군(10,702개, 3.0%)이 가장 적었음

[표 2-6] 인천 구별 기업 규모별 기업수('20)

(단위: 개, %)

시군구	전체	소상공인	비율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구	29,321	27,717	7.8	1,066	489	29,272	49
동구	13,131	12,526	3.5	452	149	13,127	4
연수구	40,929	38,464	10.8	1,742	651	40,857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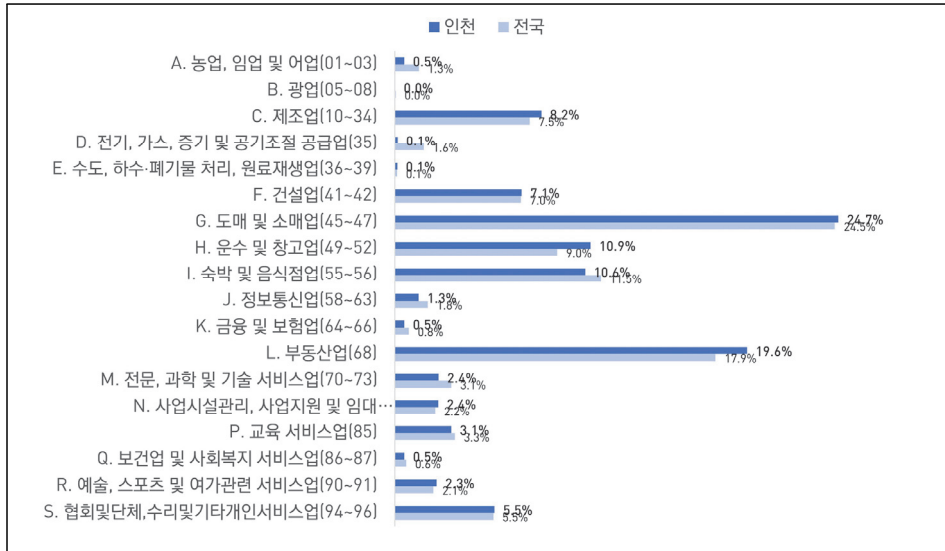
시군구	전체	소상공인	비율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남동구	69,212	64,061	18.1	3,961	1,124	69,146	66
부평구	55,987	53,081	15.0	2,238	640	55,959	28
계양구	32,624	30,891	8.7	1,313	413	32,617	7
서구	71,356	66,034	18.6	3,963	1,308	71,305	51
미추홀구	50,438	48,127	13.6	1,861	433	50,421	17
강화군	11,066	10,702	3.0	293	66	11,061	5
옹진군	3,015	2,944	0.8	64	7	3,015	-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시군구별 기업수)

- 인천 산업별 소상공인 기업수는 도매및소매업의 비중이 2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동산업(19.6%), 운수및창고업(10.9%), 숙박및음식점업(10.6%) 순으로 높았음
- 인천은 전국 평균 대비 부동산업과 운수및창고업의 비중이 높고 ‘전기,가스,증기 및공기조절공급업’, ‘농업·임업·어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편임
 - 전국 전산업 대비 ‘부동산업’ 비중은 17.9%, 인천은 19.6%로 1.7%p 높음
 - 전국 전산업 대비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비중은 1.6%이지만 인천은 0.1%의 적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2-6] 전국-인천 소상공인 기업수의 산업별 비중 비교('20)

(단위: 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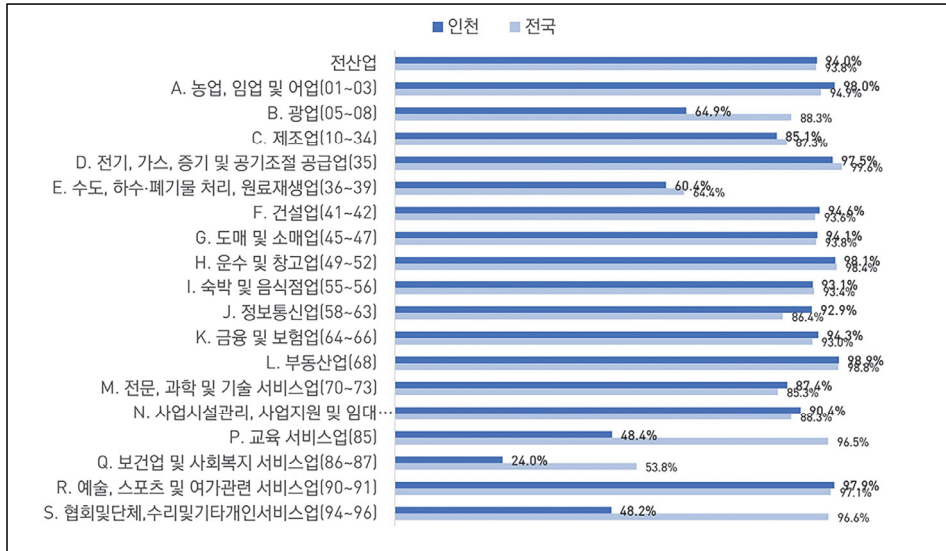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시도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기업수)

○ 전체 기업수 대비 소상공인 기업수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은 일부 업종이 전국 대비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 소상공인 기업수 비율은 ‘부동산업’(98.9%), ‘운수및창고업’(98.1%), ‘농업,임업및어업’(98.0%)이 가장 높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4.0%),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48.2%)가 가장 낮음
- 특히 전국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의 소상공인 비중은 96.6% 이지만 인천 내에는 48.2%에 불과하며, 전국 ‘교육서비스업’의 소상공인 비중은 96.5%이지만 인천 내에는 48.4%에 불과한 등 전국에 비해 비중이 매우 적은 모습을 보임

[그림 2-7] 전국-인천 산업별 소상공인 기업수 비중 비교('20)

(단위: 백명)



주: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은 대기업 수가 공개되지 않아 제외하고 계산함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시도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기업수)

○ '19~'20년 인천 소상공인 기업수는 6.9% 증가하며 전국 3위 수준을 기록
 - 연수구(13.9%), 서구(8.7%), 부평구(6.5%)가 가장 크게 증가함

[표 2-7] 인천 구별 소상공인 기업수 변화('19~'20)

(단위: 개, %)

지역	2019년	2020년	증가율
전국	6,445,316	6,842,959	6.2
인천	331,733	354,547	6.9
중구	26,371	27,717	5.1
동구	12,095	12,526	3.6
연수구	33,764	38,464	13.9

지역	2019년	2020년	증가율
남동구	60,478	64,061	5.9
부평구	49,838	53,081	6.5
계양구	29,268	30,891	5.5
서구	60,771	66,034	8.7
미추홀구	46,195	48,127	4.2
강화군	10,097	10,702	6.0
옹진군	2,856	2,944	3.1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시군구별 기업수)

-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19.1%)이며, 다음으로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14.7%), ‘정보통신업’(14.5%)이 크게 증가함
- 특히 전국 대비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숙박및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했으며 ‘전기,가스, 증기및 공기조절공급업’, ‘농업,임업및어업’의 증가량이 적었음

[표 2-8] 전국-인천 산업별 소상공인 기업수 변화 비교('19~'20)

(단위: 개, %)

산업분류	전국			인천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전산업	6,445,316	6,842,959	6.2	331,733	354,547	6.9
농업, 임업 및 어업	83,950	90,686	8.0	1,746	1,841	5.4
광업	2,357	2,292	-2.8	24	24	0.0
제조업	504,101	513,192	1.8	28,221	28,909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3,934	110,194	17.3	460	501	8.9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7,188	7,834	9.0	382	438	14.7

산업분류	전국			인천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건설업	451,572	480,293	6.4	23,290	25,006	7.4
도매 및 소매업	1,551,768	1,675,994	8.0	80,276	87,562	9.1
운수 및 창고업	606,040	618,115	2.0	37,840	38,644	2.1
숙박 및 음식점업	752,478	784,621	4.3	35,332	37,588	6.4
정보통신업	108,142	125,071	15.7	4,083	4,677	14.5
금융 및 보험업	50,401	52,522	4.2	1,772	1,834	3.5
부동산업	1,154,308	1,221,800	5.8	64,468	69,557	7.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8,326	214,761	14.0	7,636	8,610	12.8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0,792	152,957	16.9	7,149	8,511	19.1
교육 서비스업	215,552	228,345	5.9	10,543	11,119	5.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1,379	42,777	3.4	1,789	1,848	3.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0,586	146,116	3.9	7,812	8,212	5.1
협회및단체,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62,442	375,389	3.6	18,910	19,666	4.0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시도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기업수)

(2) 종업원수

- '19년 대비 '20년 소상공인 종업원수 변화를 살펴보면, 인천의 소상공인 종업원 수 증가율은 3.7%로 전국 평균(2.6%)을 상회한 3위 수준을 기록함
 - 연수구(11.0%), 서구(4.7%), 강화군(4.4%) 소재 기업의 종업원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옹진군(-0.6%), 미추홀구(0.9%), 동구(1.2%)의 증가율이 가장 적었음

[표 2-9] 인천 구별 소상공인 종업원수 변화('19~'20)

(단위: 명, %)

지역	2019년	2020년	증가율
전국	9,223,529	9,461,073	2.6
인천	473,619	491,124	3.7
중구	35,037	36,062	2.9
동구	18,146	18,363	1.2
연수구	45,080	50,058	11.0
남동구	92,026	94,240	2.4
부평구	69,497	71,703	3.2
계양구	40,950	42,289	3.3
서구	91,926	96,279	4.7
미추홀구	62,960	63,549	0.9
강화군	13,823	14,430	4.4
옹진군	4,174	4,151	-0.6

출처: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시군구별 종사자수)

- 업종별로는 기업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17.5%)과 정보통신업(14.9%) 종사자수의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1.3%), '숙박및음식점업'(-0.5%)은 감소하였음
- 전국과 비교해서는 '광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종사자수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전기,가스,증기 및공기조절공급업'은 전국 종사자수 증가율에 크게 못미침

[표 2-10] 전국-인천 산업별 소상공인 종업원수 변화 비교('19~'20)

(단위: 명, %)

산업분류	전국			인천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전산업	9,223,529	9,461,073	2.6	473,619	491,124	3.7
농업, 임업 및 어업	92,301	98,637	6.9	1,907	2,021	6.0

산업분류	전국			인천		
	2019	2020	증감	2019	2020	증감
광업	4,501	4,447	-1.2	52	59	13.5
제조업	1,199,092	1,185,919	-1.1	72,126	72,350	0.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5,045	112,303	18.2	472	523	10.8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12,473	13,559	8.7	728	804	10.4
건설업	798,515	832,288	4.2	38,551	40,873	6.0
도매 및 소매업	2,186,682	2,241,545	2.5	110,394	114,739	3.9
운수 및 창고업	677,003	695,696	2.8	43,576	44,822	2.9
숙박 및 음식점업	1,269,325	1,234,538	-2.7	60,147	59,834	-0.5
정보통신업	140,596	160,883	14.4	4,964	5,702	14.9
금융 및 보험업	57,329	60,044	4.7	2,076	2,156	3.9
부동산업	1,231,315	1,297,323	5.4	68,039	73,159	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4,356	306,392	11.7	10,548	11,777	11.7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0,252	194,738	14.4	9,022	10,602	17.5
교육 서비스업	268,534	280,729	4.5	13,081	13,550	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641	117,506	1.6	5,044	5,193	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86,008	181,848	-2.2	10,137	10,005	-1.3
협회및단체,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444,561	442,678	-0.4	22,755	22,955	0.9

출처: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시도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2) 소상공인 생멸현황

- 인천은 세종에 이어 전국 2번째로 신생기업의 등장이 활발한 편이지만 소멸 또한 많은 지역임
- 신생기업은 '18년 52,435개에서 '20년 62,574개로 연평균 9.2% 증가하며 전국에서 5번째로 창업이 활발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 소멸기업 또한 3년간 연평균 8.1% 증가하며 전국평균(4.9%) 대비 매우 높은 2위 수준의 폐업수를 보임
 - '20년 신생률은 17.1%로 전국에서 2위였으며 소멸률은 12.0%로 4위 수준을 기록

[표 2-11] 인천광역시 기업 신생 및 소멸 수('20)

(단위: 개, %)

구분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전국	활동	6,249,784	6,526,544	6,820,850	4.5
	신생	919,752	996,779	1,058,842	7.3
	(신생률 ¹⁾)	(14.7%)	(15.3%)	(15.5%)	-
	소멸	692,083	736,393	761,221	4.9
	(소멸률 ²⁾)	(11.1%)	(11.3%)	(11.2%)	-
인천	활동	321,747	349,166	365,175	6.5
	신생	52,435	66,264	62,574	9.2
	(신생률)	(16.3%)	(19.0%)	(17.1%)	-
	소멸	37,431	44,121	43,775	8.1
	(소멸률)	(11.6%)	(12.6%)	(12.0%)	-

주: 1) 신생률 = 신생 ÷ 활동 × 100

2) 소멸률 = 소멸 ÷ 활동 × 100

출처: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산업별 지역별 기업수)

- '20년 현재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1년~7년 생존율 모두 전국평균보다 낮은 10~14위 수준을 기록

[표 2-12] 인천광역시 신생기업 생존율('20)

(단위: %)

지역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6년 생존율	7년 생존율
전국	64.8	53.6	44.3	38.5	33.8	28.6	25.1
인천	63.8	52.4	43.9	37.8	32.3	27.1	23.5

주: 생존율 - 기업의 신생 이후, 경과년까지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속한 비율
출처: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지역별 신생기업 생존율)

- '20년 업종별 신생률은 소멸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과 '부동산업', '정보통신업'은 소멸률보다 신생률이 월등히 높았음
 - 창업이 가장 활발한 업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23.5%)과 '부동산업(23.3%)', '정보통신업'(22.0%)이었음
 - 창업이 가장 저조한 업종은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5.3%), '수도, 하수 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7.1%), '제조업'(7.6%)이었음
 - 소멸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7.4%)와 '광업'(17.4%), '숙박및음식점업'(15.3%)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 '전기,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4.4%), '제조업'(5.7%)으로 나타남

[표 2-13] 인천광역시 업종별 신생률 및 소멸률('20)

(단위: 개, %)

산업분류	활동	신생	신생률		
			신생률	소멸	소멸률
전산업	365,175	62,574	17.1	43,775	12.0
광업	23	3	13.0	4	17.4
제조업	32,945	2,517	7.6	1,877	5.7

산업분류	활동	신생	신생률		
			신생률	소멸	소멸률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85	67	17.4	17	4.4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634	45	7.1	38	6.0
건설업	24,256	3,340	13.8	1,886	7.8
도매 및 소매업	76,415	13,214	17.3	9,952	13.0
운수 및 창고업	38,543	3,382	8.8	2,561	6.6
숙박 및 음식점업	42,534	8,314	19.5	6,502	15.3
정보통신업	3,747	824	22.0	462	12.3
금융 및 보험업	842	152	18.1	120	14.3
부동산업	91,945	21,438	23.3	13,898	15.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890	1,456	18.5	778	9.9
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768	1,828	23.5	1,173	15.1
교육서비스업	8,803	1,651	18.8	1,112	12.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768	200	5.3	113	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493	1,373	18.3	1,304	17.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184	2,770	16.1	1,978	11.5

출처: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산업별 지역별 기업수)

3) 소상공인 경영현황

(1) 매출액

- 소상공인실태조사(조사기반)에 나타난 2020년 기준 산업중분류별에 따른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약 289만개이며, 인천에는 142,388개가 분포되어 있음
- 인천의 소상공인 매출액은 '18년 34조 1,648억원에서 '20년 35조 4,246억원으로 연평균 1.8% 증가하면서 전국 평균(1.3%)보다는 소폭 높으나 17개 시·도 중 11위의 낮은 증가율을 보임

- 2020년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을 살펴보면 ‘도매및소매업’이 15조 1,538 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제조업’(10조 951억원), ‘건설업’(2조 9,397억원) 순으로 컸음
- ’18~’20년 3년간 ‘정보통신업’(21.3%)과 ‘부동산업’(16.2%)의 매출액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4.8%), ‘제조업’ (-0.7%), 순으로 매출액이 가장 크게 하락함

[표 2-14]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매출액 변화(’18~’20)

(단위: 억원, %)

지역	산업분류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전국	전산업	644,296,794	650,424,913	660,855,744	1.3
인천	전산업	34,164,803	34,338,575	35,424,588	1.8
	제조업	10,243,440	9,846,495	10,095,112	-0.7
	건설업	2,468,714	2,523,907	2,939,709	9.1
	도매 및 소매업	14,808,611	15,108,189	15,153,770	1.2
	숙박 및 음식점업	4,023,584	4,147,288	4,364,480	4.2
	정보통신업	81,988	98,182	120,653	21.3
	부동산업	375,671	380,031	507,247	16.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46,122	271,586	283,377	7.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60,750	346,824	414,992	7.3
	교육 서비스업	391,479	457,642	404,551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3,351	414,928	347,542	-4.8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81,093	743,503	793,155	0.8	

출처: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조사기반) (시도/산업중분류별/매출액규모별 사업체수 비율)

(2) 영업이익

- 인천의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18년 4조 7,537억원에서 '20년 2조 8,454억원으로 연평균 22.6% 감소하면서 전국 10위의 낮은 증가율을 보임
 - '19년부터 코로나19 관련 서비스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년 현재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및소매업', '숙박 및음식점업' 순으로 영업이익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9%)과 '부동산업'(6.0%)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예술,스포츠및 여가 관련서비스업'(-65.9%), '교육서비스업'(-40.3%), '숙박및음식점업'(-35.7%)의 감소폭이 가장 컸음

【표 2-15】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영업이익 변화('18~'20)

(단위: 백만원, %)

지역	산업분류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전국	전산업	92,743,312	90,993,305	58,005,064	-20.9
	전산업	4,753,724	4,638,302	2,845,373	-22.6
	제조업	1,186,528	1,221,075	1,067,188	-5.2
	건설업	254,813	218,946	143,913	-24.8
	도매 및 소매업	1,638,185	1,716,825	789,353	-30.6
	숙박 및 음식점업	961,684	817,225	397,963	-35.7
	정보통신업	8,265	5,793	5,771	-16.4
인천	부동산업	105,882	97,956	119,014	6.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4,884	42,929	63,872	7.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2,537	30,619	40,397	-2.5
	교육 서비스업	108,839	131,733	38,734	-4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3,507	130,937	14,375	-65.9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68,600	224,264	164,793	-21.7

자료: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조사기반) (시도/산업중분류별/영업이익규모별 사업체수 비율)

(3) 부채액

- 인천의 산업중분류별 소상공인 부채액을 살펴보면, '18년 9조 9,635억원에서 '20년 13조 6,687억원으로 연평균 17.1% 증가하면서 전국 6위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개별사업규모가 큰 '제조업'의 부채가 5조 486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전산업의 36.9%를 차지함. 이어 '도매및소매업'(23.6%), '부동산업'(10.7%) 순으로 부채액이 크게 나타남
 - 대부분 업종에서 부채액이 증가한 가운데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119.6%), '정보통신업'(102.5%)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도매 및소매업'(4.2%), '제조업'(6.7%)의 증가율이 가장 적었음

[표 2-16]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부채액 변화('18~'20)

(단위: 백만원, %)

지역	산업분류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전국	전산업	239,850,861	246,697,131	278,711,071	7.8
	전산업	9,963,486	12,101,038	13,668,707	17.1
	제조업	4,434,870	5,662,861	5,048,610	6.7
	건설업	709,260	1,946,529	1,032,738	20.7
	도매 및 소매업	2,975,187	2,462,842	3,227,420	4.2
	숙박 및 음식점업	653,707	570,712	1,262,874	39.0
	정보통신업	39,882	46,036	163,595	102.5
인천	부동산업	603,270	627,947	1,467,093	55.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4,446	82,237	91,685	19.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1,406	214,890	488,954	119.6
	교육 서비스업	85,855	127,601	247,061	69.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7,682	144,757	312,949	45.6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47,921	214,626	325,729	48.4

자료: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조사기반) (시 시도/산업중분류별/부채유무별 사업체수)

2.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1) 지원사업

- 2023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고, 세 가지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분석함
- 첫째. 지원 영역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분류하면 크게 창업지원, 경영지원, 폐업 및 재기지원, 종합(창업 및 경영) 지원, 금융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창업지원은 창업교육 프로그램, 현장체험교육, 상권입지분석, 창업절차 안내, 창업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며, 경영지원은 시설개선, 역량강화 교육, 판로 지원, 경영컨설팅, 홍보 지원, 세무 및 법률 상담, 재기전략 컨설팅, 상권지원 등을 포함함. 폐업 및 재기지원은 폐업 지원 및 재기 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금융지원은 정책자금 지원과 신용보증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둘째. 지원 단계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분류하면 창업 준비 및 초기 단계, 성장기, 재도전기, 창업 및 성장기, 전(全)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창업 준비 및 초기 단계’는 지원 영역 중 창업지원 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성장기’는 경영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며 ‘재도전기’는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하는 사업임. ‘창업 및 성장기’는 창업 준비·초기·성장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전(全)단계’는 창업 준비~ 폐업, 재기지원 사업 전체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의미함
- 셋째. 지원대상자는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로 구분되며, 예비 창업자는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 이상의 세 가지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경영지원 사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창업지원 사업(2건)은 창업준비 및 초기단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관련 교육사업(리더십 교육, 온라인마케팅교육, 외식트렌드 교육, 예비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유튜버 아카데미 등)과 창업 클라우드펀딩 지원(스토리컨설팅, 콘텐츠제작비, 스타트패키징)이 있음

- 경영 지원(37건) 기창업자의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주로 면단위(상권, 시장 전체) 지원사업으로 주변 환경 개선사업, 결제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점단위(개별상점가 및 개별 시장) 사업은 주로 상인회, 상인연합회, 신보 위탁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법규 검토 및 시·도 지원사례

제1절 소상공인 지원 법규 검토

제2절 소상공인 지원조직 운영 현황

제1절 소상공인 지원 법규 검토

1. 사무배분 일반론

- 행정사무는 소속권자를 기준으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집행권자를 기준으로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임

	구분 기준	유형	정의
행정 사무	소속권자	국가사무	해당 사무에 관한 각종 권한과 자율·책임이 국가에 속해 있는 사무
		자치사무 (고유사무)	해당 사무에 관한 각종 권한과 자율·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사무
	집행권자	중앙사무	국가사무 및 공동사무 중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
		지방사무	자치사무(고유사무) 및 공동사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처리하는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주민의 복지증진,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국제교류 및 협력

-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는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법 제13조제2항 단서 규정은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함
-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인지 기초인지에 따라 사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 경우에도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사무 처리 시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열거*함으로써 국가사무 처리 제한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2. 법률상 소상공인 사무 구분 현황

1)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는 소상공인 사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법률상 소상공인의 개념이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섭*됨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관한 사항 중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다만,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에 관한 사항이 비록 예시적 규정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소상공인 사무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가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의 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 사무 귀속 주체가 결정되므로 소상공인 사무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의 검토가 필요함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카. 중소기업의 육성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계획 수립 2)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 실의 설치·운영 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 계획의 수립·추진 2)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3)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 실의 설치·운영 4)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5)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6)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급 8)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정·추천

2)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시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로 구체적인 정책의 추진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시책의 정당성이나 정책의 방향성 등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음
- 기본법의 특성상 관련 규정도 소상공인 관련 시책 실시에 관한 근거 정도의 내용만 포함되며, 구체적인 정책, 사업 등은 개별 소상공인법령을 통해 구체화 되는 형태임
- 「소상공인기본법」은 관련 시책의 추진 주체를 거의 정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등 집적지역, 복지 수준 향상,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등 일부 시책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그 추진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 소상공인 시책의 특성에 따라 그 추진 주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적절히 분배되는 것이 적합하나, 정책 현실과 법규정이 부합하는지는 불명확한 부분인 있음
 - 예를 들면, 「소상공인기본법」 제24조제2항은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법률	중앙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기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제7조)	○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제8조)	○	○ (지역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제9조)	○ (통계 작성· 관리 위탁 가능)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구성·운영(제10조)	○		
창업촉진 및 성장 시책 실시(제11조)	○		
인력 확보 지원 시책 실시(제12조)	○		
직무능력 향상 지원 시책 실시(제13조)	○		
판로 확보 시책 실시(제14조)	○		
디지털화 지원 시책 실시(제15조)	○		
혁신 촉진 시책 실시(제16조)	○		
사업장 환경 개선 시책 실시(제17조)	○	○	○
국제화 촉진 시책 실시(제18조)	○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시책 실시(제19조)	○		
업종별 지원 시책 실시(제20조)	○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제21조)	○	○	○
구조고도화 지원 시책 실시(제22조)	○		
경영안정 지원 시책 실시(제23조)	○		
사회안전망 확충 시책 실시(제24조제1항)	○		
복지 수준 향상 시책 실시(제24조제2항)	○	○	○
폐업 및 재기 지원 시책 실시(제25조)	○		
공제제도 확립 시책 실시(제26조)	○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시책 실시 (제27조)	○	○	○

법률	중앙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기초
사업 영역 보호 시책 실시(제28조제1항)	○	○	○
창업예정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28조제2항)		○	○
재난 피해 지원 시책 실시(제29조)	○	○	○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제30조)	○		
조세 감면(제31조)	○	○	○
전문연구평가기관 설치(제32조)	○		
소상공인 지원기관 설치(제35조)	○	○	○

음영 표시: 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사무의 수행 주체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3) 소상공인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함)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무에 관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 소상공인법은 시책 실시에 관한 추상적인 근거가 아닌 구체적인 사업실시에 관한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기본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런 이유로 소상공인 사무의 주체가 대부분 정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주체로 되어 있는 것은 조세 감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및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밖에 없음
- 또한 소상공인법에 따른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손실보상과 관련된 일부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각종 지원사업의 수행은 거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음

법률	중앙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기초
창업 지원 사업(제8조)	○		
경영안정 등 지원 사업(제9조)	○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제10조)	○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사업(제11조)	○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제1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제12조의2)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제12조의4)	○		
손실보상 전담조직 설치(제12조의6)	○		
고용보험료 지원(제12조의7)	○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13조)	○		
조세 감면(제14조)	○	○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제15조)	○	○	○
디지털화 지원 사업(제15조의2)	○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 지정(제15조의3)	○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운영(제15조의4)	○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제15조의5)	○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제15조의6제5항)	○		
플랫폼 활성화 지원(제15조의7)	○		
소상공인 기금 활용 보조금 지급(제21조제2항)	○		
소상공인연합회 경비 보조(제25조의2)	○	○	○
소상공인연합회 지도·감독 및 행정명령(제26조 및 제27조)	○		

* 음영 표시: 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사무의 수행 주체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4) 생계형적합업종법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적합업종법”이라 함)은 소상공인이 생계 영위에 적합한 업종에 대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규제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생계형적합업종법은 규제법의 특성상 관련 사무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특징임
- 다만, 동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실조사 및 의견수렴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법률	중앙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 계획의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의 반영(제5조)	○ (기본/시행계획)	○ (지역별 시행계획)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제6조)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제7조)	○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에 대한 인수·개시 또는 확장 승인(제8조)	○		
시정명령(제9조)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제10조)	○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제11조)	○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제14조)	○		

* 음영 표시: 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사무의 수행 주체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5) 전통시장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은 전통 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소상공인을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골목형상점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검토대상에 포함함
 - *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
- 전통시장법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비교적 적절하게 분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중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음
- 특히, 골목형상점가와 같이 소상공인 점포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의 경우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시행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음
- 다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그 추진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사무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전통시장법 제71조제2항은 지원사업의 효과 평가 및 실태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	중앙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		
시·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제6조)		○	

법률	중앙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기초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제7조)			○
지원사업의 효과 평가 및 계획 반영(제8조)	○	○	○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실시(제9조)	○	○	○
상점가 활성화 지원(제11조)	○	○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제11조의2)	○	○	○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제13조)			○(지정)
	○ (육성 지원)	○ (육성 지원)	○ (육성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해제(제13조의2)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제19조의2)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해제 고시 및 보고(제19조의3)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제19조의4)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	
상권활성화 지원(제19조의7)	○	○	○
상권관리기구의 설치(제19조의8)		○	○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제19조의9)	○	○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제20조)	○	○	○

* 음영 표시: 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사무의 수행 주체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3. 법규 검토의 종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 구분은 「지방자치법」에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나, 다른 법령으로 달리 정하는 바가 있으면 해당 법률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 구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현행 소상공인 관련 법률의 규정은 소상공인 사무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사무라 할 수 있음
- 다만, 사무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만 지방정부의 사무로 규정을 하되,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극소수에 불과함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시책 수립·시행,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안정적 확보에 관한 책무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 혹은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사업을 공동으로 재정분담만 하고 실제 수행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현실임
-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영역임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 구분이 체계적·효율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제2절 소상공인 지원조직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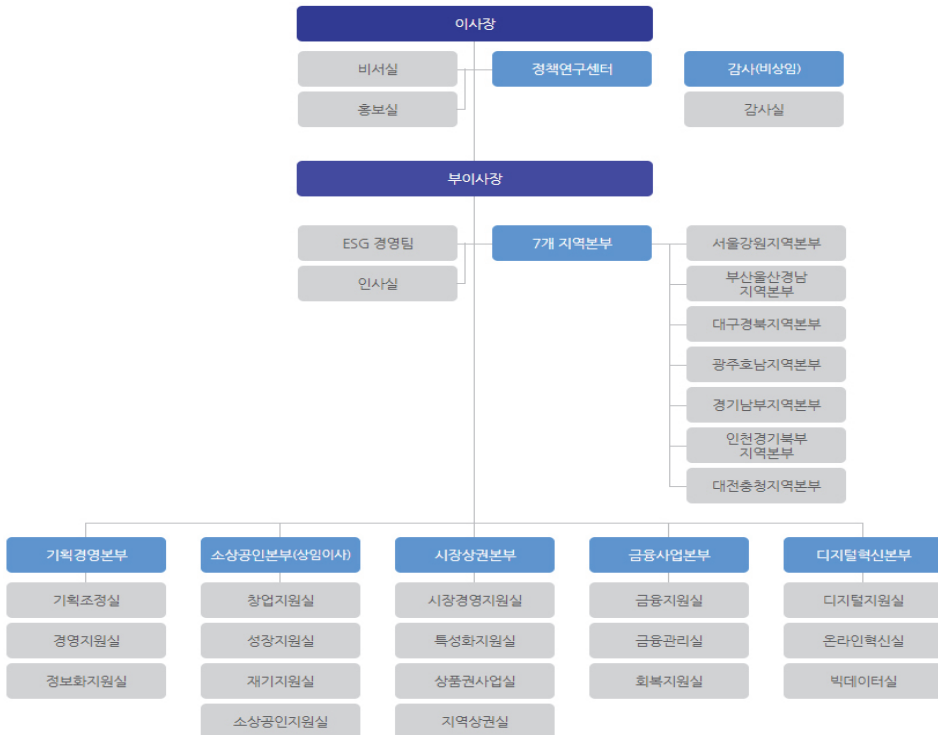
1. 소상공인 지원조직 전국현황

1) 중앙부처 소상공인 지원조직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월 ‘(구)소상공인진흥원’과 ‘(구)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출범

(1) 운영현황

□ 조직 및 인력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총 인력은 약 922명으로 임원 3명, 일반직 740명, 전문직 36명,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22명, 무기계약직 67명, 비정규직 54명 등으로 구성

□ 주요 업무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자금·교육·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지원
- 전통시장별 특색에 맞는 시설 및 경영 지원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정보 제공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사, 정책개발 등

(2) 사업내용¹¹⁾

□ 소상공인창업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창의·혁신적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
생활혁신형창업지원	•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발굴·멘토링하고, 성공률 용자 지원하며 성실 실패 시 부분 상환면제로 실패부담 최소화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개방과 협력·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

□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 비대면·디지털화 등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경영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가진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11)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요 사업 현황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 공동마케팅 지원, 물류운영혁신, 유통정보제공 등 사업운영인프라 지원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 유망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의 성장과 가맹본부·가맹점간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 지원
소상공인협업활성화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창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공동사업, 판로 지원, 아카데미(교육) 등 협업사업 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수하는 소상공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발굴하고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 소공인특화지원

판로개척지원	•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
클린제조환경조성	•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해 분진·소음 제거 등 작업환경 개선 지원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소공인 집적지 내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 특화 프로그램 운영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소공인 집적지 내에 스마트 제조장비를 구축하고 기획·디자인부터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일괄 지원

□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기존 소상공인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상권정보시스템, 지능형서비스, 소상공인포털)
소상공인 주간 활성화	•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주간'에 다양한 행사 추진 지원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매월),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소상공인 정책조사 및 연구, 불공정상담센터운영, 정책연구센터 운영 등

정책자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전산인프라 고도화 및 지원업체에 사전진단·사후관리 강화, 비대면(온라인) 디지털 금융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제로페이)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는 결제수수료를 인하

□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혁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상점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 보급 지원

□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구축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AI 기반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서비스 및 정책 분석 서비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창출 지원
-----------------	--

□ 시장경영 혁신 지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등급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인 주도로 선택·추진하는 마케팅, 상인교육 등 시장경영혁신 사업 지원
전통시장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언론·방송사, 박람회, 전시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및 고객 증대를 위한 홍보 실시
온누리상품권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기반 확대
특성화시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입지, 역량 등을 감안하여 문화관광형·첫걸음·디지털전통시장 등 유형별 맞춤형 특성화사업 지원 및 방문객 유입 촉진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복합청년몰 활성화, 청년 상인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및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상점가의 건축물 및 소방·전기·가스시설의 위험요인 파악, 화재 알림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
조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의 시설·영업 및 상인조직 등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지원시책 수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상권 활성화

상권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다양한 상권의 지원 및 민간주도의 상권 개발을 위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설계·운영, 특화상품 개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권 개선 아이디어 도출 등 종합지원
-------	--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및 집중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

2) 시·도별 소상공인 지원조직 현황

□ 종합적 검토

- 시도별 소상공인 지원기구 유형은 크게 ‘지역신용보증재단 위탁방식, 독립법인 설립 방식, 지역경제통상진흥원 위탁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지역 차원에서 독립법인 형태의 출자기관 설립은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이 유일함
 - 지역신용보증재단 위탁방식을 채택한 시도 지역으로는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경남, 전남으로 확인되며 조직구성, 인력, 주요 업무, 운영체계는 지역 별로 상이함
 -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통상진흥원 등 기타 기관의 위탁(부서)방식을 채택한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제주가 있음

[표 3-1]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현황(2023.5.1기준)

운영방식	시도	명칭	인력 규모	개소일	소상공인규모(개) (전국대비 비중, %)
독립법인	경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0명	2019. 10	1,721,961 (25.2)
지역신용 보증재단	인천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14명	2018. 04	354,547 (5.2)
	서울	서울자영업지원센터	37명	2016. 07	1,440,174 (21.0)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20명	2019. 06	

운영방식	시도	명칭	인력 규모	개소일	소상공인규모(개) (전국대비 비중, %)
		상권지원센터	15명	2023.	
		지역본부(경영지원 25개팀)	(약)25명	2022~23	
	대구	기업성공지원센터	8명	2017. 11	303,507 (4.4)
	울산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5명	2019. 02	124,769 (1.8)
	경남	기업지원부	11~12명	-	420,479 (6.1)
	전남	자영업종합지원센터	5명	2018. 08	256,386 (3.7)
기타 ³⁾	부산 ¹⁾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19명	2022. 07	433,684 (6.3)
	광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 지원부	8명	1984. 04	178,978 (2.6)
	대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본부	13명	-	176,294 (2.6)
	강원	강원도상권활성화센터	7명	2017. 05	211,240 (3.1)
	충북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	7명	2021. 07	203,779 (3.0)
	충남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8명	2019. 04	278,066 (4.1)
	경북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팀	5명	-	345,037 (5.0)
	전북 ²⁾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8명	2020. 12	247,728 (3.6)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	6명	2011. 07	
	제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6명	2019. 06	110,162 (1.6)

- 주: 1) 부산신용보증재단 위탁 소상공인희망센터와 부산경제진흥원 부서 민생경제팀 통합
 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팀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소상공인육성팀에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 위탁
 3) 각 지역 경제통상진흥원 등

○ 소상공인 규모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지원조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가 유일하게 독립법인 형태의 출자기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상위 40%에 포함되는 서울, 인천, 대구, 전남 지역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위탁 형태를 채택하고 있었음

-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의 규모가 작은 지역인 광주, 대전, 제주, 강원 등의 지역에서 지역경제통상진흥원 내의 부서 형태로 소상공인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산은 기존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였던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여 통합하였음
 - 부산의 경우 기존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였으나 2022년 7월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통합됨
- 인천광역시와 소상공인규모가 유사한 대구, 경남, 부산, 경북과 비교 하였을 때,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오히려 많은 편에 속함

□ 유형별 사례 검토(독립재단)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시도별 소상공인 규모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지자체 유일의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8년 8월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2019년 9월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출범함
- 경기도시장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무를 살펴보면 상권정책 연구(시스템 운영, 골목상권 지원사업 운영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소상공인 생애단계별 지원사업 및 통합교육), 시장상권지원(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관할 구역별 주요 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 3-2]와 같음

[표 3-2] 경기시장진흥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 내용
골목상권공동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 조직 및 발달 단계별 지원 • 지역대학+임대인+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 “노후-희망” 등 상권공동체 중심 특성화 지원 • 정관 개정을 통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근거마련
소상공인 단계별 종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역량 강화로 실패 없는 성공 창업 유도 • 소상공인 실질소득 증대와 비용 절감 등 단계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 숙련기반의 우수 소공인 발굴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구분	주요 사업 내용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대표 브랜드 시장 육성, 상권 회생을 견인하는 특성화 지원 지역특화 콘텐츠 연계 등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사업추진 지원(경기시장매니저)
자영업자 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업 및 폐업예정자 충격완화 및 성공적 재기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재창업 성공률 향상
‘코로나 19’ 극복 지속가능 모델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소비습관 고착화 대응을 위한 고객편의 플랫폼 운영 교육콘텐츠(비대면·온라인) 확대운영 온라인 등 디지털 판로지원 확대
상권현황 연구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연구 조사기능 강화로 지역경제 컨트롤 타워 구축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영향 분석 시스템을 활용 → 과학적인 상권분석 정보 제공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및 경제 선순환 구축 경기지역화폐 내실화를 위한 홍보다각화 및 사용자 인식 개선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간편결제 도입 및 확대(장기)
현장 중심의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촘촘한 현장지원 강화 권역별 상인회의소 운영 등 상인 간 거버넌스 거점 구축 지역별 특색을 감안한 상인 주도형 사업 모델 마련
선진 경영인프라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내외 협력 및 홍보 기능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회계 및 관리 구현 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사후평가 강화 등 외부고객만족도 제고 윤리 및 투명경영 내실화

자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

□ 유형별 사례 검토(지역신용보증재단 위탁)

- 서울시는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06년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최초로 위탁하면서 재단의 고유사무인 신용보증업무와 위탁사업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고유 업무인 신용업무보증 업무 외에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업무를 살펴보면 진입기(소상공인 교육, 창업컨설팅), 성장기(자영업클리닉, 소상공인동행프로젝트), 퇴로기(재기컨설팅, 사업정리비용지원)로 구분됨(기획경제위원회, 2021)

- 서울신용보증재단 내에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로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상권지원센터, 25개 지점 경영지원팀으로 구성됨
- 타 시도와 비교하여 특이한 점은 위탁사무로 시작한 소상공인종합지원 사무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일반직·전문직 구성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주로 보증업무와 같은 재단 고유사무를 담당하였던 일반직 인력을 자영업 지원센터, 상권지원센터, 25개 지점 경영지원팀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일반직원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연구를 비롯한 상권분석시스템 운영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분야를 별도로 신설하여 전문직 인력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는 경영지원 사업은 신보 보증수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연구센터를 통해 재단 내부에서 시행하는 경영지원 사무 및 보증 지원 업무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외에도 대구, 울산, 경남, 전남 지역에서 지역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내용은 아래 [표3-3]와 같음
 - 다만, 투입인력이나 상세 업무 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함

[표 3-3]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주요 업무 현황(23년 기준)

구 분	서울	대구	울산	경남	전남
창업지원	○	○	○	○	-
경영지원	○	○	○	○	○
폐업 및 재기지원	○	○	-	○	-
금융지원	○	○	-	○	○
연구(상권분석) 지원	○	-	-	-	-

주: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부록 참조

□ 유형별 사례 검토(지역경제통상진흥원 위탁)

-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제주 지역에서 지역경제통상진흥원 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산(19명)과 대전(13명)의 조직규모가 가장 큼
- 지역경제통상진흥원 위탁 형태의 소상공인 지원사무는 대부분 경영지원업무로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조직규모가 큰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상권분석 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3-4] 지역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지원 주요 업무 현황(23년 기준)

구 분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제주
창업지원	0	-	-	-	0	-	-	-	-
경영지원	0	0	0	0	0	0	0	0	0
폐업 및 재기지원	0	-	-	-	-	0	-	0	0
금융지원	-	0	0	-	-	-	-	-	-
연구(상권분석) 지원	-	-	0	-	-	-	-	-	-

주: 지역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부록 참조

2. 소상공인 지원조직 운영 사례 분석 결과의 종합

- 타 시·도 사례를 통하여 지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무를 살펴보면 조직 유형별, 조직 규모별 그 내용이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창업지원, 경영지원, 폐업 및 재기지원, 금융지원, 연구(상권분석)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의 규모가 크고,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창업, 성장, 폐업·재기 전 과정에 대한 경영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자금지원 등의 금융사업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인천광역시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4대 추진 전략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경영 안정화, 상권 활성화, 디지털 기반 판로구축에 관한 것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인천시에서 계획하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은 서울시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위탁 형태와 경기도의 독립법인 형태 모두 수행 가능함
 -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서비스로 창업지원(창업 컨설팅 및 창업 지원, 강소 소상공인육성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경영지원(소상공인 판로지원, 상권 활성화 지원 등), 폐업 및 재기지원(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재무상담 등 채무조정 지원 등), 금융지원(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융자지원)이 있음
- 결론적으로 인천시에서 계획하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조직 유형의 고려하기보다 실효성·타당성 측면에서 적합한 조직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1안) 인천신용보증재단 위탁 업무의 확대·조정 방안과 (2안) 독립재단 설립 방안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보다 적합한 전담 조직 형태를 살펴보고자 함

제4장

전담기구 설립방안 검토

제1절 타당성 검토 개요

제2절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3절 설립의 기대효과

제1절 타당성 검토 개요

1. 설립 타당성 검토 개요

□ 설립 타당성 검토 기준

- 본 연구는 ‘지방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인천광역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두 개 유형의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설립 유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설립 타당성 검토 중점 사항은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법·제도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설립 계획의 적정성(조직 및 인력 운영)’, ‘설립 기대효과(주민복지 증진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로 구분됨(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2021)
- 해당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두 개 유형의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출연기관 설립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타당성 평가지표를 적용했을 때, 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가 가능한 타당성 평가 항목을 선정함
- 현 수준에서 검토 가능한 타당성 평가 항목은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정법·제도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과 “설립 기대효과(주민복지증진에 미치는 효과,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가 있으며 두 개의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 유형별 타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1안) 시 출연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 위탁
- (2안) 출연기관 형태의 독립재단법인 설립

2.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분석틀

1)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1) 대상사업

- 두 개 대안에 대한 ‘투자 및 사업 적정성 평가’ 비교·분석을 위하여 대상사업 선정 필요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지원, 연구개발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확정함
- 수혜대상자의 수요(설문조사) 측면, 법·제도적 측면, 현행 방식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무의 내용과 타 시·도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직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사무를 최종적으로 확정함

[표 4-1]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대상사업

(1안) 시 출연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 위탁		(2안) 출연기관 형태의 독립재단법인 설립		최종
현행	수정(안)	계획	수정(안)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지원	사업본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지원
서민금융 복지지원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공정거래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연구개발	연구개발	연구개발	연구개발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직속 센터로 위탁 사무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인천신보 고유 업무 외의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가. (출연기관 형태의 독립재단법인 설립) 대상사업 검토 개요

- **현 단계에서 재단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중인 조직(안)의 대상사업 적합성 검토 필요하며, 수혜대상자의 수요 측면, 법·제도적 측면, 현행 대상사업과의 비교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수혜대상자 수요 측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참여자와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무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홍보 및 마케팅, 금융지원,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에 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독립재단 계획(안)의 대상 사무를 비교하였을 때, 수요가 높았던 지원사무인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법·제도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복지 수준 향상 시책 실시, 사업장 환경개선 시책 실시, 상권 등 집적 지역의 지원,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시책 실시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독립재단 계획(안)의 대상 사무를 비교하였을 때, 소상공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법률적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사무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사무로 보아야 함.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영역임을 고려하였을 때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복지 수준 향상 시책 실시, 사업장 환경개선 시책 실시,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시책 실시, 사업영역 보호 시책 실시, 창업 예정자에 대한 정보 제공, 재난 피해 지원 시책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소상공인기본법」상 수행 주체 기준)
 - (법·제도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현재 지원 중인 공정거래지원 주요 업무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부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공정거래지원 업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업무로 한정하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된 피해상담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
- (현행 대상 사업과 비교) 현행 방식으로 지원 중인 대상사업과 독립재단 계획(안)의 대상사무를 비교하였을 때, 금융복지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독립재단 형태의 대상 사업과 현재 운영·지원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무 간 용이한 비교를 위하여,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비교하고자 함. 비교 결과 현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상사업은 크게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복지 지원, 공정거래지원으로 구분됨. 독립재단 계획과 비교하였을 때 서민금융복지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해당 사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신설되는 재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서민금융복지 지원 업무는 소상공인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음
- (종합) 수혜대상자의 수요 측면, 법·제도적 측면, 현행 대상 사업과의 비교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독립재단 계획(안)의 대상사무를 비교하였을 때, 금융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무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지원 사무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업무로 특화하여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상 사업별 사무 내용에 있어서는 소상공인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고, 법률상 수행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포함하되, 거시적 차원에서 점단위 사업과 선단위 사업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선단위 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체 상권정보 데이터 관리, 이론과 실습이 연계된 체계적 교육과 인턴십의 제공, 안정적 자금지원과 부채관리, 컨설팅, 창업후 사후관리, 공정거래 지원 체계 수립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全) 과정을 선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점단위 사업의 경우 사업별 지원대상의 구체화 필요(소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지원 특성별 사업 추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원 및 협업체계 구성(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과 지자체(기초) 간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 및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지원)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업무로 특화하여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지원이라는 포괄적 명칭이 아닌,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지원으로 조정하여 소상공인 전담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종적으로 초기(도약기) 단계에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진흥재단 조직구성(안)은 사업지원부서(22명)와 경영지원부서(10명)를 포함하여 총 5개 부서, 총 인원 33명¹²⁾(원장 1명 포함)으로 설계할 수 있음

- 사업지원부서는 4개 부서로 구분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5명,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3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지원 10명, 연구개발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사업지원부서의 사업내용과 세부적인 인력 배치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4-2】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사업본부) 대상사업 및 사업내용

대상사업	사업내용	담당 부서	인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불공정거래 및 상가임대차 피해 구제지원 • 불공정거래 및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 공정경제 토론회 개최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5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상담지원 • 개인파산 및 면책지원 • 개인회생 지원 • 워크아웃 지원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3

12) 사업지원부서와 경영지원부서의 총 인원수는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분석 및 추진방안(2022, 92쪽)에 제시된 도약기 인원”을 적용하였음

대상사업	사업내용	담당 부서	인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노후상가 거리 활성화 • 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전환 사업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지원	10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관내 상권 분석 • 인천시 관내 상권 통계 작성 및 관리 • 소상공인 정책연구 수행 • 소상공인 지원 신사업 연구 수행 	연구개발	4

자료: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분석 및 추진방안(2022, 92쪽)을 기초로 보완함

주: 1) [표 4-2]는 경영지원부서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사업지원부서만을 포함하고 있음

2) 표에 제시된 인원수는 최초 재단 설립(도약기)에 따른 인원임에 유의하기 바람

나. (시 출연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 위탁) 대상사업 검토 개요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인천신용보증재단 내의 소상공인 디딤돌센터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음

[표 4-3] 현재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 업무

구분	업무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컨설팅 • 재기지원(특례보증 등) • 무방문 기한연장 • 센터사업 관련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위탁업무 • 기타 소상공인 지원 다각화 업무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 소공인 스마트공방 보급 지원사업 •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이행실태 점검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활성화(신규·성장) 지원사업 •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소상공인 교육사업 • 소상공인 성공 컨설팅 사업 •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및 동구 송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관리 •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서민금융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상담 지원사업 • 개인파산·면책 지원사업 • 개인회생·워크아웃 지원사업 • 경제금융교실 • 희망아카데미 금융교육 • 금융복지지킴이 및 채무상담사 양성교육 •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및 1:1 재무코칭
	공정거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피해상담 및 피해구제지원 • 불공정실태조사 • 사전예방교육 및 토론회 개최 • 상가임대차분쟁상담 및 피해구제지원 •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
신설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관내 상권 분석 • 인천시 관내 상권 통계 작성 및 관리 • 소상공인 정책연구 수행 • 소상공인 지원 신사업 연구 수행

- (법·제도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현행 소상공인지원 업무 대상을 검토했을 때 창업예정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권 등 집적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소상공인기본법」, 제28조, 제21조), 인천시 관내 상권분석 및 상권 통계 작성과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함
- (독립재단 대상 사업과 비교) 독립재단에서 계획 중인 대상사업과 비교했을 때, 상권에 관한 데이터 분석·관리, 소상공인 정책연구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업무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1안)의 현행제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연구개발’ 사업 업무가 추가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종합) 현행 조직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연구개발팀 인력 충원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현행조직 유지시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1-1) 단기: 현행 조직 유지(대상 사업 중, 서민금융복지지원 업무는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업무로 조정하여 소상공인 집중 지원 필요)
 - (1-2) 장기: 현행 조직 유지+ 연구개발팀 신설

[표 4-4]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상사업 및 사업내용 수정(안)

대상사업	사업내용	담당 부서	인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불공정거래 및 상가임대차 피해 구제지원 • 불공정거래 및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 공정경제 토론회 개최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종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	3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상담지원 • 개인파산 및 면책지원 • 개인회생 지원 • 워크아웃 지원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서비스 지원 -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소상공인 금융·복지 지원	3

대상사업	사업내용	담당 부서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세무 및 노무 상담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경영교육 계획수립 및 지원 • 유망 소상공인 육성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홍보 계획수립 및 지원 • 상권 활성화 계획수립 및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수립 및 지원 •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주요 사업 발굴·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 시장지원 (공통지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공인 단계별 종합지원 • 소공인 지원사업 발굴 	소상공인 및 전통 시장지원 (소공인 전담지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단계별 종합지원 • 소상공인 지원사업 발굴 	소상공인 및 전통 시장지원 (소상공인 전담지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콘텐츠 연계 등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사업추진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 시장지원 (전통시장 전담지원)	1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관내 상권 분석 • 인천시 관내 상권 통계 작성 및 관리 • 온라인 등 디지털 판로지원 방안 연구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정책연구 수행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신사업 발굴 • 지역별 특색을 감안한 상인 주도형 사업 모델 발굴 	연구개발	4

주: 인천신용보증 재단 위탁 사무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업무만을 포함하였으며, 신보 내부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업무를 포함하지 않음

(2) 법제도적 타당성

□ 법적 대상사업 여부

① 「지방출자출연법」 상 대상사업 여부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우선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지정한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함
 -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표 4-5] 지방출자출연법 지정 대상사업

검토항목	비고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여부

-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사무를 나누어두었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설립되는 만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도 사무와 시·군·자치구 사무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검토함
-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정한 시·도 사무와 시·군·자치구 사무로서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표 4-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구분	항목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서 정한 특별시·광역시 처리 사무는 다음과 같음

[표 4-7]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구분	항목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직장교육은 제외한다)
	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가.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
	4. 청소·오물에 관한 사무 가.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나. 일반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5. 지방토목·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다.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라.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6.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나. 도시계획지역의 입안 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라. 도시계획용도지구의 입안 마.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사.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 아.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제외)
	7.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가. 종로(12미터 이상)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관리

구분	항목
	8.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 나. 상수도 공채 발행 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라.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9.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가.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나.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10.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나.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라. 공원·유원지·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무 마. 공설운동장·체육관·박물관·도서관·미술관·시민회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사무(특별시·광역시 조례로 결정)
	11. 지방궐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궐도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나. 지방궐도사업의 설치·운영 다. 지방궐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12.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가. 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 이용에 관한 행정 나. 시내버스·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다. 대중교통수단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무
	13.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가.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나. 공설시장·도축장·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다. 유통단지의 지정신청·조성 및 운영 관리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14.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2023.1.19.)에 따른 부적합 사무·사업

-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
-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은 가능하나, 순수 민간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업
-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
-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
- 순수 민간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업
-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표 4-8]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2017)에 따른 부적합 대상 사무

구분	항목	비고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적합 대상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부적합)	법령과 관련 기준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은 가능하나, 순수 민간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업(부적합)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부적합)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부적합)	
	순수 민간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업(부적합)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부적합)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부적합)	

(3) 경제적 타당성

□ 경제성 분석 방법

- 추진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절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
 - 비용-편익의 구조가 명확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 그 자체가 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수행

- 비용-편익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의 추진 여부보다는 사업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수행

□ 비용편익분석 방법

- 경제성 분석은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과정이며,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사용함
 - 순현재가치(NPV): 순편익을 사회적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양(+)의 값이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함

$$NPV = \sum_{t=0}^n \frac{B_t - C_t}{(1+r)^t}$$

B_t : t기의 편익
 C_t : t기의 비용
 r : 사회적 할인율

- 편익비용비율(B/C): 편익 및 비용의 현재가치 비율(B/C)이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함

$$B/C = \sum_{t=0}^n \frac{B_t}{(1+r)^t} \Bigg/ \sum_{t=0}^n \frac{C_t}{(1+r)^t}$$

-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할인율(IRR)이 기준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해당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함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R : 내부수익률(IRR)

- 경제성에 대해 NPV, B/C, IRR은 대체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NPV와 B/C에 의한 평가가 IRR에 의한 평가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세 가지 지표를 모두 검토함

-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세 가지 지표 중 NPV를 가장 적합한 지표로 평가함
- NPV와 B/C에 의한 평가가 IRR에 의한 평가와 불일치할 경우 NPV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함

□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전제

- 대상사업의 개발과 운영에 의해 유발되는 부담과 혜택들 중 측정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거나 실질적이지 않은 이전적(transfer) 성격의 항목들은 제외함
-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조성공사만 진행할 경우 운영비·수선유지비는 사업 추진 주체의 입장에서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무성 분석의 비용 항목에 포함하지 않지만 국민경제 측면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경제적 비용에 포함함
-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개발 이후 건축물 등을 실제 운영할 경우(임대 등) 재무성 분석에도 운영비·수선유지비를 포함함
- 토지잔존가치는 사업 추진 주체의 입장에서 수입과 비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여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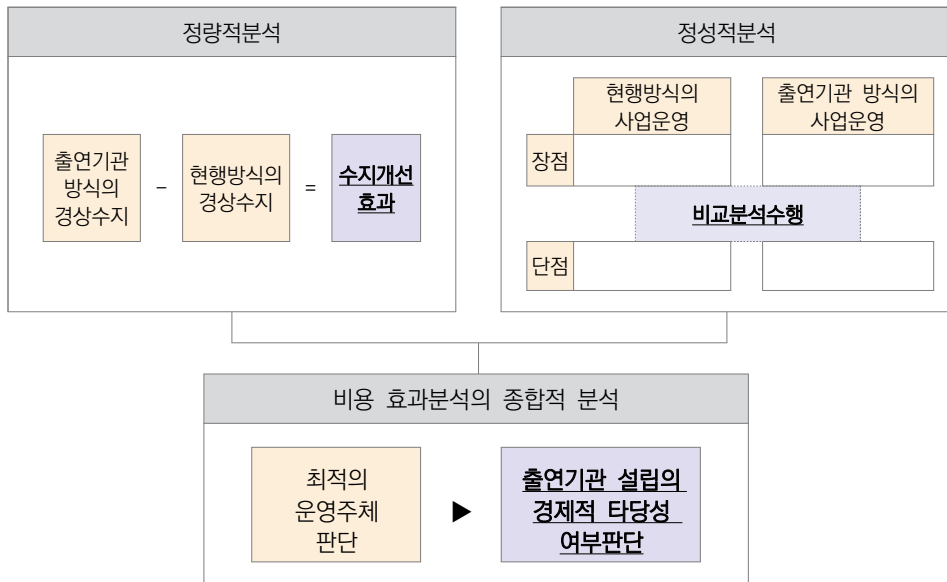
□ 비용 및 편익의 현재가치 측정 기준

- 비용과 편익은 발생시점에 따라 시간가치가 다르므로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 척도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 불변가격 가치로 계산한 비용과 편익을 기준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함
- 분석기준연도 이후 가격지표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불변가격지표를 적용하여 연도별 비용과 편익의 불변가격 가치를 추정함
- 이는 장기간에 걸쳐 비용과 편익에 미치는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고 수량 지표 변화가 비용과 편익에 미치는 실질 변화만을 추정하기 때문임
-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함

□ 비용-효과분석 방법

- 비용-효과분석은 사업의 비교대상이 되는 대안의 결과물이 현행방식과 비교하여 어느 대안이 더 효율적일지를 분석하게 됨
 - 지방출연기관의 경우 사업의 특성 (기관의 전문성, 홍보 효과)에 따라 향후 수요 및 수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한계가 존재함
 -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은 동일하게 가정하고 있으며, 현행방식과 향후 재단방식 수입구조 차이가 명확할 때에는 차이를 다르게 가정하게 됨
- 본 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과정에서는 수지개선효과를 통한 정량적 분석과 기관설립에 정성적인 효과분석을 이루어 출연기관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그림 4-1] 비용-효과분석 흐름



주: 현행 방식은 (1안)에 해당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위탁 운영에 해당함
 출처: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공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매뉴얼”. 2021.12

2) 설립의 기대효과

(1) 주민복지증진에 미치는 효과

□ 분석 방법

- 주민복지증진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위하여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정량적·정성적 문항 구성을 통하여 현 지원시스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의 유형을 검토함
 - 해당 결과를 통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사업을 살펴 보고, 정책 수혜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있어, (1안) 과 (2안) 조직 유형 간 차별점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 조사설계¹³⁾
 - '23. 6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사업체 대표자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모집단: 2020년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사업체[354,547개]
 -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시군구별 기업수 중, 소상공인)
 - 표집방법: 층화추출법(사업체 소재 자치구, 업종(대분류) 등을 고려)
 - 최소 표본 크기: 384명(사업체 1개당 대표자 1명으로 가정)
 - 모집단 크기가 354,547명이라고 했을 때, 설문조사 결과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신뢰수준 95%, 허용 오차 5%에서 최소 표본 크기를 계산함

13) 인천광역시 협조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사설계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우나, 조사 설계 기준에 맞추어 사후 조정 예정(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체 소재지, 업종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함)

- 표본 크기는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됨(N 은 모집단 크기, e 는 오차 한계, z 는 z 점수)

$$\frac{\frac{z^2 p(1-p)}{e^2}}{1 + \frac{z^2 p(1-p)}{e^2 N}}$$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방문 조사
- 조사설문 항목 주요 내용: 소상공인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경험 및 효과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 기대효과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별 효과성 및 확대 필요 검토를 통하여 사업 우선순위 도출
- 전담 기구의 유형(독립재단 또는 출연기관 위탁)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무 내용의 확인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 제언

(2)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분석 방법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재정현황, 재정여건, 주요 재정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재정상황의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독립재단의 설립이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수준인지에 대해 판단하고자 함

제2절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1. 법·제도적 타당성

1) 법·제도적 타당성

□ 소상공인지원 대상사업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사업 부서는 ①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사업, ② 소상공인 금융·복지 지원사업, ③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지원 사업, ④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함

□ 「지방출자출연법」상 대상사업 검토

- 해당 세부사업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서 제시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여부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 규정한 사무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해당하는 사무라고 판단됨

[표 4-9]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23. 7. 7.>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5) 지역상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6)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7)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4) 지역상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	---	---

○ 해당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에 제시된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의 시도 사무 3) 지역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에 해당하므로 지자체 적정사무(시도)에 적합함

[표 4-10] 법적 대상사업 여부 검토

대상분야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무	
세부사업	①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사업	
	② 소상공인 금융·복지 지원사업	
	③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④ 연구개발 지원사업	
검토 1	「지방출자출연법」상 대상사업 검토	
	검토 항목	검토결과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O	
검토 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여부	
	검토 항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 관련) 구분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시·도사무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5)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6)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7)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검토결과	
단위사업	시 도사무
①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사업	0
② 소상공인 금융·복지 지원사업	0
③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0
④ 연구개발 지원사업	0

2) 수행 부적합 사무 여부 검토

- 지방출자출연법, 동법 시행령, 동법을 기반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부적합 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부적합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사업은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가 아니며, 순수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며,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님
 - 다만,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현재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위탁 형태로 소상공인 지원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만약 인천소상공인지원 조직을 별도의 독립재단으로 신설할 경우, 현재 인천 신용보증재단 위탁 사무의 유지가 어려움

[표 4-11] 지방출자·출연기관 수행 부적합 사무에 대한 체크리스트

대상분야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무	
세부사업	①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사업	
	② 소상공인 금융·복지 지원사업	
	③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④ 연구개발 지원사업	
검토항목		해당 여부
아래의 기준 중 1개 이상 만족 시 부적합 사업에 해당		
①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		×
②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은 가능하나, 순수 민간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업		×
③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		×
④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⑤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

3) 공공성,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 검토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공공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경제 발전, 지역사회 개발 활성화, 지역발전, 지역사회 고용(일자리 창출)의 기준을 만족함

[표 4-12] 지방출자·출연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

대상분야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무	
세부사업	①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사업	
	② 소상공인 금융·복지 지원사업	
	③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④ 연구개발 지원사업	

검토항목	결과 (O, X)
각 항목별 기준들 중 1개 이상 만족 시 적정사업에 해당	
①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 복지,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수행함	X
②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 -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자원봉사 등의 영역	X
③ 지역사회 교육, 장학, 학사 활동 -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지원 및 인프라 개선 활동을 수행함 - 지역사회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 - 기타 교육 지원 및 장려 활동을 수행함	X
④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활성화 및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지역사회 경제활동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는 공익 우선의 인프라를 구축 -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활동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 - 신용보증, 연구원, 중소기업 및 산업 진흥, 박람회, 축제 등	O
⑤ 지역사회 보건(의료원 포함) -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품 제공 및 보건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 - 보건 및 질병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함	X
⑥ 지역사회 안전 및 환경 - (안전)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환경)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X
⑦ 지역사회 고용(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고용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및 활동 - 지역사회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O

4) 결과의 종합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사무를 대상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자치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부적합사무 및 공공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부적합 사무에 해당사항이 있음
- 지방출자·출연기관 수행 부적합 사무는 크게 5가지 기준으로 분류되며 이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부적합 사업에 해당함
 - 즉,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독립재단의 설립은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현재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사무를 수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경제적 타당성

1) 분석개요

-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실시함
 - 국가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대부분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업의 직접적·경제적 편익추정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게 됨(김정권 외, 2017)
 - 해당 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뚜렷한 사업의 수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 앞서 대상사무에서 검토하였듯이 (1안) 인천신용보증재단 위탁 방식은 현행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과 확장 하는 방법이 있음
 - (1-1) 단기: 현행 조직 유지
 - (1-2) 장기: 현행 조직 유지+연구개발팀 신설 및 부서 명칭 변경
- 현행 조직 유지시 인력을 살펴보면, 총 21명으로 연구개발팀이 신설될 경우는 25명임¹⁴⁾
 - 연구개발팀 인력은 재단 설립시와 동일하게 1개팀에서 팀장, 과장, 대리급의 인력 4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함

14) 소상공인디딤돌센터는 인천신보 직속 부서이며,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비금융지원 사무를 수행하고는 있으나 인천신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인천 신보에서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짐. 또한 센터장의 경우에도 인천 신보 직원이 센터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인천 신보에서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현행조직에 대한 인건비 산정 시, 소상공인디딤돌센터 인력과 센터장 인건비는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람

【표 4-1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 조직 현행 유지시 직급별 인력(안)

(단위: 명)

구분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인천신보 직속부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인천신보 위탁)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연구개발 (신설)
총원		21(25)			
센터장	-	1			
팀장	1	1	1	1	1
과장	-	2	1	1	1
대리	3	2	1	1	2
사원	3	2	-	-	-

주: 현행조직(인천신보) 인력은 인천신보 직속 부서와 위탁부서를 모두 포함하여 인력을 기재함

-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신설의 경우 발전단계별로 (2-1)도약기, (2-2)성장기, (2-3)성숙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발전단계별 조직 인원은 도약기 총원 33명, 성장기 40명, 성숙기 51명으로 함
 - 도약기에는 원장1명,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5명,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3명, 경영기획 10명,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및 연구개발 14명임
 - 성장기에는 다른 부서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및 연구개발 인원을 7명 더 충원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및 연구개발 총원을 21명으로 함
 - 성숙기에는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및 연구개발 인원을 11명 충원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및 연구개발 총원이 32명이 됨

[표 4-14]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신설 시 직급별 인력(안)

(단위: 명)

(2-1) 도약기

구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경영기획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및 연구개발
총원	33			
원장	1			
소계	5	3	10	14
1급(본부장)	-	-	-	-
2급(차장)	1	1	3	3(2~3급)
3급(과장)	1	1		4(3~4급)
4급(대리)	3	1	7	3(4~5급)
5급이하(사원)		-		4

(2-2) 성장기

구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경영기획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및 연구개발
총원	40			
원장	1			
소계	5	3	10	21
1급(본부장)	-	-	-	-
2급(차장)	1	1	3	3(2~3급)
3급(과장)	1	1		7(3~4급)
4급(대리)	3	1	7	6(4~5급)
5급이하(사원)		-		5

(2-3) 성숙기

구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경영기획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및 연구개발
총원	51			
원장	1			
소계	5	3	10	32
1급(본부장)	-	-	-	-
2급(차장)	1	1	3	4(2~3급)
3급(과장)	1	1		11(3~4급)
4급(대리)	3	1	7	10(4~5급)
5급이하(사원)		-		7

2) 인건비

□ (1안) 현행 유지 또는 연구개발팀 확대

- 현행 조직 유지시 인건비 산정 대상 인력은 총 13명(2급 3명, 3급 4명, 4급 4명, 5급 2명)이며, 연구개발팀을 확대할 경우 3~4급 4명이 추가되어 총 17명임
 - 소상공인디딤돌센터의 경우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속으로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의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속으로 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 인건비는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현행 조직 인력에 직급별 급여기준을 곱하여 산정함
 - 직급별 급여기준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직급별 급여기준 호봉 평균으로 산정하였음
 - 기본연봉과 수당을 각각 추정하여 그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 수당에는 직책수행비, 특정업무비, 통근보조비, 중식비,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었음
- 현행 조직 유지시 인건비는 총 11.4억원, 연구개발팀을 신설할 경우 인건비는 14.9억원으로 추정되었음

[표 4-15]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 조직 현행 유지시 인건비 추정

(단위: 백만원)

(1-1) 현행 조직 유지

구분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연구개발 (신설)
1급(센터장)	-	-	-	-	-
2급(팀장)	-	111	111	111	-
3급(과장)	-	189	95	95	-
4급(대리)	-	158	79	79	-
5급이하(사원)	-	109	-	-	-
합계			1,135		

(1-2) 현행 조직 유지+연구개발팀(신설)

구분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연구개발 (신설)
1급(센터장)	-	-	-	-	-
2급(팀장)	-	111	111	111	111
3급(과장)	-	189	95	95	95
4급(대리)	-	158	79	79	158
5급이하(사원)	-	109	-	-	
합계			1,499		

□ (2안) 독립재단법인 설립

-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신설시 인건비는 직급별 인력에 급여기준을 곱하여 산정하였음
 - 직급별 급여기준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직급별 급여기준 호봉 평균으로 산정하였음
 - 해당 업무에 직급이 2급(차장) 또는 3급(과장), 3급(과장) 또는 4급(대리), 4급(대리) 또는 5급(사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직급별 급여기준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음

- 원장의 경우,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에 따른 인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을 적용하였음
 - 2022년 기준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종합에너지, 인천의료원 등 11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5,500만원임¹⁵⁾
- 재단 신설시 인건비는 도약기에 26.9억원, 성장기에 32.1억원, 성숙기에 40.3억원으로 추정되었음

[표 4-16]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신설시 인건비 추정

(단위: 백만원)

(2-1) 도약기

구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경영기획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및 연구개발
원장	155			
1급(본부장)	-	-	-	-
2급(차장)	111	111	308	308
3급(과장)	95	95		347
4급(대리)	200	79	467	200
5급이하(사원)		-		218
합계	2,693			

(2-2) 성장기

구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경영기획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및 연구개발
원장	155			
1급(본부장)	-	-	-	-
2급(차장)	111	111	308	308
3급(과장)	95	95		608
4급(대리)	200	79	467	400

15)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클린아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1206521>)

5급이하(사원)		-		272
합계	3,208			

(2-3) 성숙기

구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	소상공인 금융·복지지원	경영기획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및 연구개발
원장	155			
1급(본부장)	-	-	-	-
2급(차장)	111	111	308	411
3급(과장)	95	95		956
4급(대리)	200	79	467	667
5급이하(사원)		-		381
합계	4,034			

□ 향후 5년 인건비 추정

- 향후 5년 인건비를 추정해보면, 현행조직 유지시 2024~2028년 5년 간 약 58.8억원 소요, 연구개발팀을 신설할 경우, 77.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 인건비 상승률은 2019~2023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평균 1.72%¹⁶⁾를 적용하였음
 - 연구개발팀을 신설할 시 현행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때보다 인건비가 약 18.8억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칭)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신설시에는 2024~2028년 인건비가 178.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 재단 발전단계에 따라 2023~2024년은 도약기, 2025~2026년은 성장기 2027년 이후는 성숙기를 달성한다고 가정함
 - 재단 설립 도약기와 현행 조직 유지시를 비교하였을 때, 재단을 설립할 경우 5년 간 소요되는 인건비는 3.0배, 연구개발팀 신설시보다 2.3배 높은 수준임

16)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을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표 4-17】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향후 5년 인건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1-1)현행조직유지	1,135	1,155	1,175	1,195	1,216	5,876
(1-2)현행조직유지+ 연구개발팀(신설)	1,499	1,524	1,551	1,577	1,604	7,756
(2)재단신설	2,693	3,263	3,319	4,245	4,318	17,839
(2-1)재단신설: 도약기	2,693	2,739	2,786	2,834	2,883	13,935
(2-2)재단신설: 성장기	3,208	3,263	3,319	3,376	3,434	16,601
(2-3)재단신설: 성숙기	4,034	4,103	4,174	4,245	4,318	20,874

주: 1) 소수점 절사

2) 재단신설 인건비는 도약기(2023~2024년), 성장기(2025~2026년), 성숙기(2027년 이후)로 구분

3) 사업비

□ (1안) 현행 유지 또는 연구개발팀 확대

- 현행 유지시 사업비는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사업예산으로 볼 수 있음
 - 소상공인디딤돌센터의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속으로 별도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 2022년 기준으로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업예산은 총 28억원임
 - 소상공인 스마트공방 기술 보급 지원 사업에 5.0억원(17.8%),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4.4억원(15.7%), 동구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4.1억원(14.7%),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동구) 3.8억원(13.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4-18]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2022년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명	사업예산
소상공인 성공 컨설팅 지원	200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34
창업 클라우드펀딩 지원	45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동구)	375
동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414
강소 소공인 육성지원	291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441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65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240
우리 마을상인회 활성화 지원	205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 보급 지원	500
합계	2,810

출처: 인천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

- 여기에 연구개발팀을 신설한다고 하면, 팀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 될 수 있을 것임
- 연구개발팀에서 여타 연구사업을 통한 연구용역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정도만 추가되지만, 수탁사업을 할 경우 연구용역비가 소요될 것임
 - 연구개발팀의 사업 규모를 어떠한 수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사업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유사한 조직 형태의 유사한 업무를 하는 팀의 사업비 예산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임
 - 신설하고자 하는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인 경기도상권진흥원의 경우 상권정책팀에 5명의 인력이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2022년 기준으로 연구관련 예산이 4.2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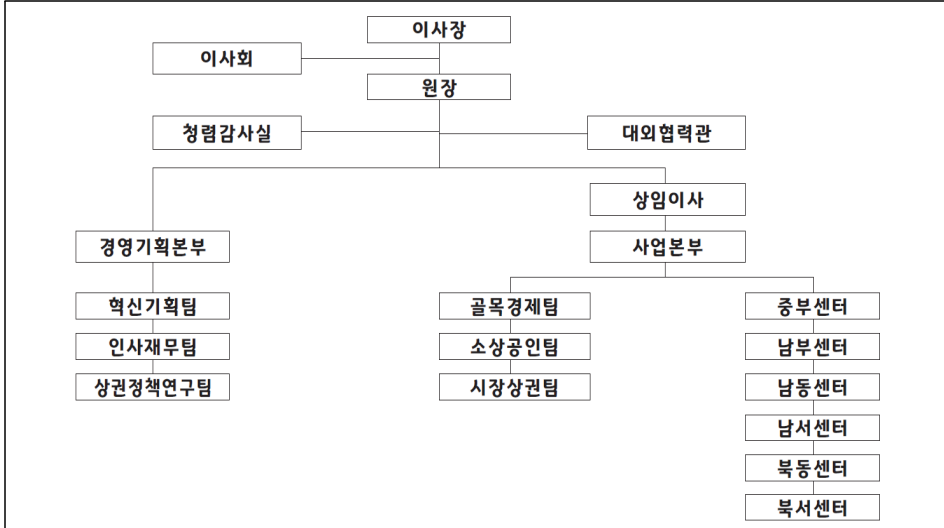
- 이를 통해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의 연구개발팀 4명의 인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는 4억원 내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규모임
- 정리하면 현행 조직을 유지하거나 연구개발팀을 신설하여 인력을 확충할 경우 소요 예산은 28~32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 (2안) 독립재단법인 설립

- 재단 신설시 사업비는 유사한 형태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관의 사업비 규모를 토대로 추정하고자 함
- 주요 시도의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 신용보증재단 또는 지역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는 형태로 현재 인천광역시의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유일하게 독자법인으로 지방 출자한 곳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19년 9월 설립되었으며,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과 조직을 이관 받았음
 - 현재(23. 1. 31.) 2본부 구성으로 경영기획본부에 3팀, 사업본부에 3팀 6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정원은 80명임

17) 출처: 인천연구원(2022),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 분석 및 추진방안 p.58 (표 4-7)에서 경상원 주요사업 운용평가 연구 0.38억원, 지역상권 과밀업종 모형설계개발 및 소상공인 경제동향 조사 분석 연구용역 3.80억원으로 나타남

[그림 4-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직도



출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

- 경기도상권진흥원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신설하고자 하는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의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표 4-19]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요 사업 현황(2022년)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고객센터설치) •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청정계곡) •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조직화(1년차) • 골목상권 공동체 성장지원(2,3~4년차) •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고객센터설치)
경기지역화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지원 • 온라인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 • 전문기술교육(전문인력양성) •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 혁신 소상공인 육성 지원 • 푸드트럭 사업화 지원 • 푸드트레일러 임대 지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진공) •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구분	세부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 푸드트럭 공동사용시설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 푸드트럭 공동사용시설 •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 지원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 상인회 및 연합회 매니저 육성 •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 지원 • 경기도 혁신시장 육성 •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 •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 • 시설분야 컨설팅 및 실태조사 • 상권영향분석시스템운영 • 종합 콜센터 및 컨설팅 운영 •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육성 • 전통시장 혁신형마케팅 공모사업 • 경기도 상인동아리 지원사업 • 경기도 청년 푸드창업 허브공간 구축 • 중장기 발전계획 컨설팅 지원 • 경기도형 감성디자인 전통시장 육성

출처: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내부자료; 민규량·강민근(2022) [표 4-6] 재인용¹⁸⁾

- 따라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비 예산을 토대로 (가치)인천소상공인 진흥재단의 사업비를 추정하였음
- 사업비는 최근연도인 2023년 예산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인 2020~2023년 예산 평균값 2가지 기준을 활용하였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연도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등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217억에서 2021년 159억원까지 감소하였다가 2022년 279억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 다시 165억으로 감소하였음
 - 따라서, 어느 한 시점의 예산을 기준으로 활용할 시 추정의 오차가 클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전체 평균값도 기준으로 활용하였음

18) 민규량·강민근. (2022). (가치)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분석 및 추진방안. 인천연구원 정책연구

[표 4-2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연도별 사업비 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결산)	2023년
사업비	39,202	33,738	51,638	30,227
고유목적사업	21,710	15,939	27,912	16,541
수탁사업	17,252	17,699	20,633	13,266
경영지원센터운영 (자체사업)	110	-	2,793	20
정산반납	130	100	300	400

출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공시 예산현황 각 년도

-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예산 대비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의 예산 비율은 지역별 소상공인 비율을 활용하였음
 - 소상공인 기업 및 종사자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지원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였음
 - 2020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기업수는 인천이 35.5만개, 소상공인 기업 종사자 수는 49.1만명으로 이는 경기도 소상공인 규모의 20% 수준임

[표 4-21]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상공인 현황(2020년)

구분	소상공인 기업수(만개)	소상공인 종사자수(만명)
인천	35.5	49.1
경기	172.2	241.6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통계(<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AreaSubStat.do>)

- 이를 토대로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신설시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33.6~42.3억원 수준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0~2023년 평균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상공인 기업수 비중으로 추정한 예산은 42.3억원이며, 종사자 수 비중으로 추정한 예산은 41.7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3년 예산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소상공인 기업수 비중으로 추정한 결과 34.1억원이며, 종사자수 비중은 33.6억원으로 다소 낮게 추정되었음

[표 4-22]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신설 시 사업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 기준	2020~2023년 평균 예산 기준
소상공인 기업수 기준	3,410	4,231
소상공인 종사자수 기준	3,362	4,171

□ 향후 5년 사업비 추정

- 향후 5년 사업비를 추정해보면, 현행 조직 유지시 2024~2028년 5년 간 약 185.4억원 소요, 연구개발팀을 신설할 경우, 211.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 됨
 - 사업비 상승률은 2019~2023년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본 사업비 연평균 증가율 13.91%¹⁹⁾를 적용하였음
 - 연구개발팀을 신설할 시 현행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때보다 사업비가 약 26.4억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신설시에는 2024~2028년 사업비는 추정 기준에 따라 221.8억원~279.2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현행조직을 유지했을 때와 36.4~93.8억원 정도 차이이며, 연구개발팀을 신설했을 때와는 10.0~67.4억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음

19)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본사업비는 2019년 1,411백만원, 2020년 1,541백만원, 2021년 1,488백만원, 2022년 2,065백만원, 2023년 2,376백만원임

[표 4-2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향후 5년 사업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1-1)현행조직유지		2,810	3,201	3,646	4,154	4,732	18,543
(1-2)현행조직유지+ 연구개발팀(신설)		3,210	3,657	4,165	4,745	5,405	21,183
소상공인	'23년 예산기준	3,410	3,885	4,425	5,041	5,742	22,503
기업수 기준	'20~'23년 평균예산 기준	4,231	4,820	5,491	6,255	7,125	27,923
소상공인	'23년 예산기준	3,362	3,829	4,362	4,969	5,661	22,183
종사자 수 기준	'20~'23년 평균예산 기준	4,171	4,752	5,413	6,166	7,024	27,527

주: 소수점 절사

4) 운영비

□ 경상운영비

- 경상운영비는 인건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운영·관리 주체가 변경된다고 해도 사업 본연의 기능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현행방식과 재단설립 방식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3년 예산을 보면, 인건비 81.2억원, 일반운영비가 20.3억원²⁰⁾으로 경상운영비의 비중이 25%를 차지함
 - 따라서 해당 사업 업무의 경상운영비는 인건비의 25%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현행유지의 경우와 재단 신설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하였음
- 경상운영비 추정 결과, 현행조직 유지시 2.8억원, 연구개발팀을 신설할 시 3.8억원, 재단 신설시 발전단계별로 6.8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향후 5년간 소요될 경상운영비는 현행 조직 유지시 14.7억원, 현행 조직을 유지하고 연구개발팀을 신설할시 19.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재단을 신설할시 44.7억원으로 분석되었음

20) 출처: 인천신용보증재단(https://www.icsinbo.or.kr/home/content.do?menu_cd=000034)

[표 4-24]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향후 5년 경상운영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1-1)현행조직유지	284	289	294	299	305	1,472
(1-2)현행조직유지+ 연구개발팀(신설)	375	382	388	395	402	1,943
(2)재단신설	675	817	832	1,064	1,082	4,469
(2-1)재단신설: 도약기	675	686	698	710	722	3,491
(2-2)재단신설: 성장기	804	817	832	846	860	4,159
(2-3)재단신설: 성숙기	1,011	1,028	1,046	1,064	1,082	5,229

주: 소수점 절사

□ 임대료

- 현행 조직을 유지할 경우 인천광역시소상공인지원센터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재단을 신설할 경우 기관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임대료가 발생하게 됨
- 임대료의 추정은 현행조직인 인천광역시소상공인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였음
 - JST 제물포스트마트타운 6층 임대료는 평당 150,000원이고, 월 관리비는 평당 20,000원(일반관리비, VAT별도)임
 - 1인당 업무공간 전용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을 7~17m²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1인당 전용면적을 최대 5평으로 계산하였음
- 재단신설시 연간 임대료 및 관리비는 3.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2024~2028년 향후 5년간 임대료 및 관리비 총액은 21.9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인천광역시 상업용부동산 임대료 인상률을 보면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볼 때 전분기대비 0.3%, 전년동기대비 0.2%, 전년말 대비 0.1%로 인상률이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조직인원 확충으로 인한 공간확장에 따른 임대료 상승분만 반영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0%로 가정하여 분석하였음

[표 4-25]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향후 5년 임대료 및 관리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1-1)현행조직유지	-	-	-	-	-	-
(1-2)현행조직유지+ 연구개발팀(신설)	-	-	-	-	-	-
(2)재단신설	337	408	408	520	520	2,193
(2-1)재단신설: 도약기	337	337	337	337	337	1,683
(2-2)재단신설: 성장기	408	408	408	408	408	2,040
(2-3)재단신설: 성숙기	520	520	520	520	520	2,601

5) 결과종합

- 현행 조직을 유지했을 때와 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했을 때 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현행 조직을 유지할 시에는 총 비용이 42.3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기에 연구개발팀을 신설할 경우 약 50.8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단을 신설할 경우 비용은 70.7~79.4억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4-26]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비용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사업비	경상경비		합계
			운영비	임대료	
(1-1)현행조직유지	1,135	2,810	284	0	4,230
(1-2)현행 조직 유지+ 연구개발팀 신설	1,499	3,210	375	0	5,084
(2)재단 신설	2,693	3,362~4,231	675	337	7,066~7,935

주: 사업비의 최솟값은 소상공인 종사자수, 2023년 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경우이며, 최댓값은 소상공인 기업수 2020~2023년 평균 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경우임

- 향후 5년간 소요예정 비용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 현행 조직을 유지할 시 2024~2028년 총 소요비용은 258.9억원, 연구개발팀을 신설할 경우 308.8억원이 소요됨
 - 재단을 신설할 경우에는 최소 466.8억원에서 최대 524.2억원까지 소요될 수 있음

[표 4-27]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별 향후 5년 비용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1-1)현행조직유지	4,230	4,645	5,115	5,648	6,252	25,891	
(1-2)현행조직유지+ 연구개발팀(신설)	5,084	5,563	6,105	6,718	7,412	30,881	
(2)재단신설	최소	7,066	8,318	8,921	10,798	11,581	46,684
	최대	7,935	9,309	10,050	12,084	13,046	52,424

- 재단을 신설할 경우 현행조직 유지시에 비해 최소 1.8에서 최대 2.0배까지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정량적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현행 조직을 유지할시 연구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성적 측면에서 재단설립에 비해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
 - 현행조직을 유지하되 연구개발팀을 신설하여 연구분야의 업무는 수행하도록 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제3절 설립의 기대효과

1. 주민복지증진에 미치는 효과

1) 설문개요

- 주민복지증진 영향력 검토를 위하여 '23. 6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사업체 대표자를 대상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으나, 응답오류를 제외한 350명의 응답 결과를 최종적으로 활용함
- 설문조사 항목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경험 및 효과성, 향후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됨

[표 4-28] 주요 설문조사 항목 개요

구분	항목
인구 특성	성별, 연령, 사업체 소재지, 업종
소상공인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사업체 운영 기간
	사업체 규모 및 영업이익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애로사항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경험 및 효과성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경험
	지원사업(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
	지원사업(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효과
	지원사업(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및 이유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및 필요 영역	매출 증대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표 4-29]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자	174	50.4
	여자	171	49.6
연령*	만19~29세	16	4.6
	만30~39세	69	20.0
	만40~49세	105	30.4
	만50~59세	96	27.8
	만60세 이상	59	17.1
사업체 소재지	강화군	9	2.6
	옹진군	12	3.4
	중구	37	10.6
	동구	2	0.6
	미추홀구	59	16.9
	연수구	67	19.1
	남동구	68	19.4
	부평구	21	6.0
	계양구	9	2.6
	서구	66	18.9
사업체 업종	제조	25	7.2
	도매	26	7.5
	소매	62	17.8
	외식	136	39.1
	숙박	2	0.6
	운수 및 창고	2	0.6
	정보통신	6	1.7
	개인서비스업(이·미용, 세탁업 등)	35	10.1
	교육서비스업(어린이집, 학원 등)	12	3.4
	의료서비스업(병원, 의원, 약국 등)	2	0.6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17	4.9
	기타	23	6.6

*성별미상 5명, 연령 미상 5명

- 응답자 특성을 성별, 연령별, 사업체 소재지별, 사업체 업종별로 구분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 (성별) 남성과 여성의 비율 50.4%: 49.6%로 거의 같음
 - (연령) 40대(30.4%) > 50대(27.8%) > 30대(20.0%) 순으로 많음
 - (사업체 소재지) 남동구(19.4%) > 연수구(19.1%) > 서구(18.9%) 순으로 사업체 분포와 유사한 비율을 보임
 - (사업체 업종) 외식(39.1%) > 소매(17.8%) > 개인서비스업(10.1%)이 가장 많으며 숙박(0.6%), 운수 및 창고(0.6%), 의료서비스업(0.6%)은 매우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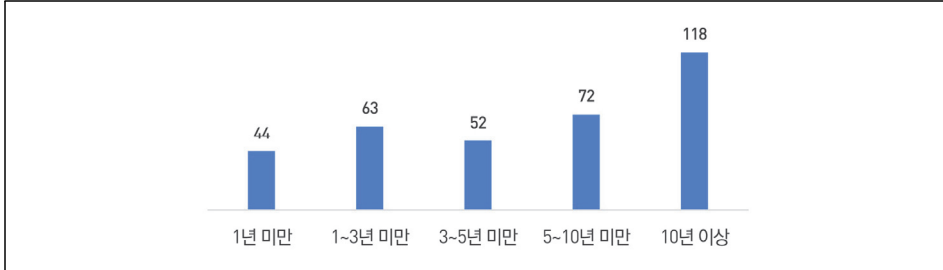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

(1) 소상공인 경영현황 인식

□ 소상공인 경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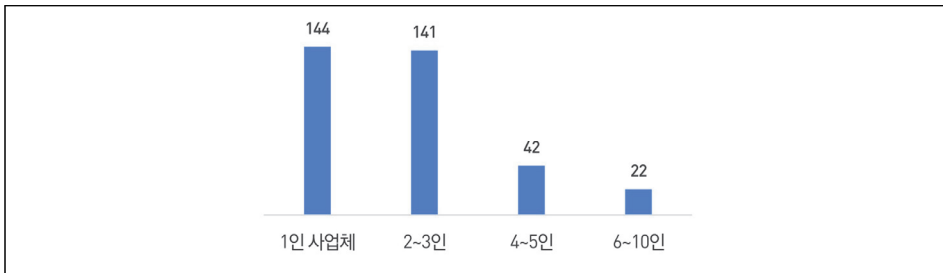
- (종합)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사업체 경영현황 분석 결과, 대부분 1~3인의 소규모로 운영되며 10년 이상의 업력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3천만원 이하의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사업체 운영 기간을 단기(5년 미만), 중기(5~10년 미만), 장기(10년 이상)로 구분했을 때 단기(5년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45.6%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33.8% 수준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주요 질문 내용인 경영 애로사항 및 지원사업 확대 필요 영역에 관한 사항은 사업체 운영 기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전체 표본의 사업체 운영 기간이 특정 기간으로 편중되지 않아 설문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4-3] 전체 사업체 운영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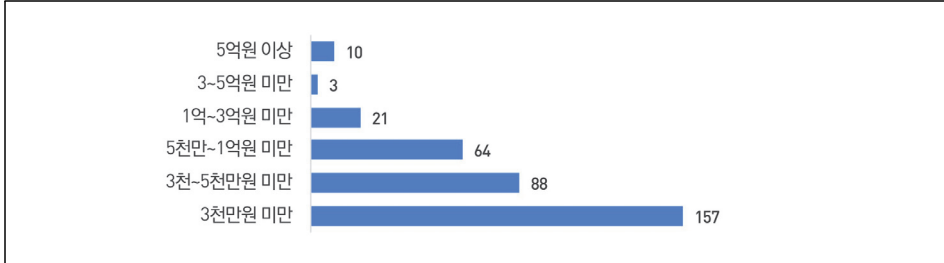
- 응답자들이 운영 중인 사업체는 대부분 1~3인의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사업체 종사자 수는 1인 사업체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2~3인 사업체 (40.4%)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 현재 사업체 종사자 수



- 연간 순 이익(만원)의 규모는 3천만원 미만인 사업체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3천~5천만원 미만인 사업체(25.7%)도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통상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간이과세사업자 중, 세무검증에서 제외된 영세자영업자 매출액은 △도·소매업 등 6억원 미만(직전연도 수입금액) △제조업 등 3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에 해당됨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 위의 영세자영업자 분류 기준이 매출액을 감안하더라도 본 조사에 응답한 대다수의 사업체는 영세자영업자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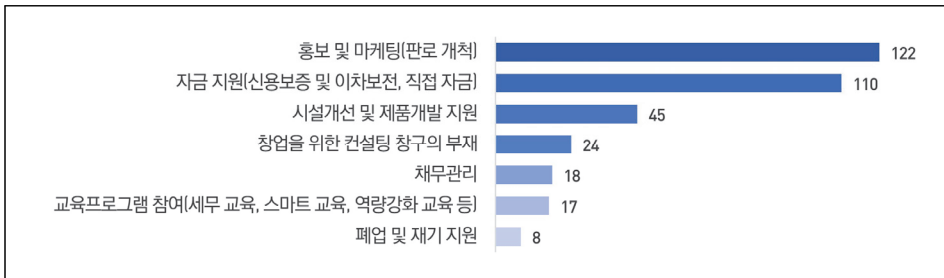
[그림 4-5] 연간 순이익



□ 소상공인 지원 애로사항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사업체 대상 소상공인으로서 겪는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홍보 및 마케팅(35.6%), 자금지원(31.8%)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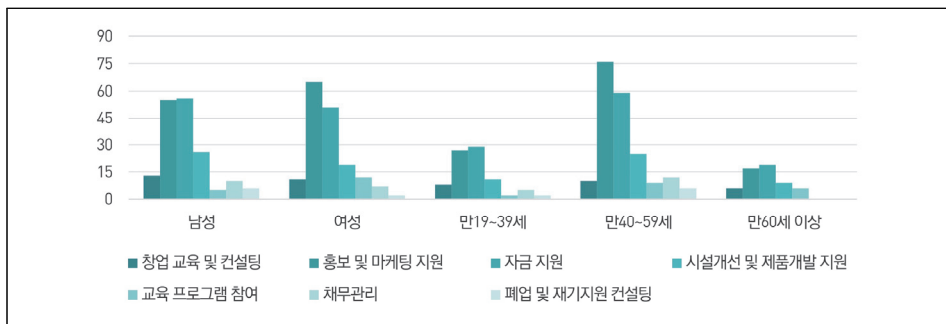
[그림 4-6] 경영 애로사항(1순위)



- 성별·연령별 경영상 애로사항을 분석해 보면
 - 남성은 여성보다 자금지원에, 여성은 남성보다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40, 50대는 타 연령대보다 홍보 및 마케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0] 응답자 특성(성별·연령별)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1순위)

지원사업	성별			연령별			
	사례수 (명)	남성	여성	사례수 (명)	만19세~ 39세	만40세~ 59세	만60세 이상
창업 교육 및 컨설팅(창업을 위한 컨설팅 창구의 부재)	24	3.8%	3.3%	24	2.4%	3.0%	1.8%
홍보 및 마케팅(판로 개척)	120	16.3%	19.2%	120	8.0%	22.5%	5.0%
자금지원(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직접 자금)	107	16.6%	15.1%	107	8.6%	17.5%	5.6%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	45	7.7%	5.6%	45	3.3%	7.4%	2.7%
교육프로그램 참여(세무 교육, 스마트 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17	1.5%	3.6%	17	0.6%	2.7%	1.8%
채무관리	17	3.0%	2.1%	17	1.5%	3.6%	0.0%
폐업 및 재기지원 컨설팅	8	1.8%	0.6%	8	0.6%	1.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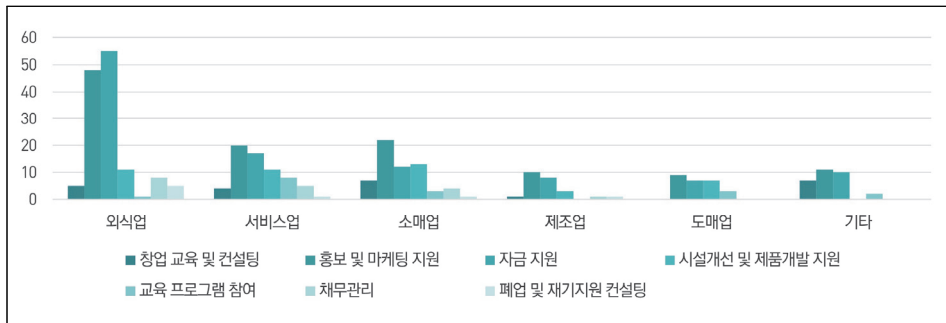


- 업종별 경영상 애로사항을 분석해 보면 3가지 유형(① 외식업, ② 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업 ③ 도매업)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① 외식업은 자금지원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② 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업과 ③ 도매업은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이 많았음

[표 4-31] 응답자 특성(업종별)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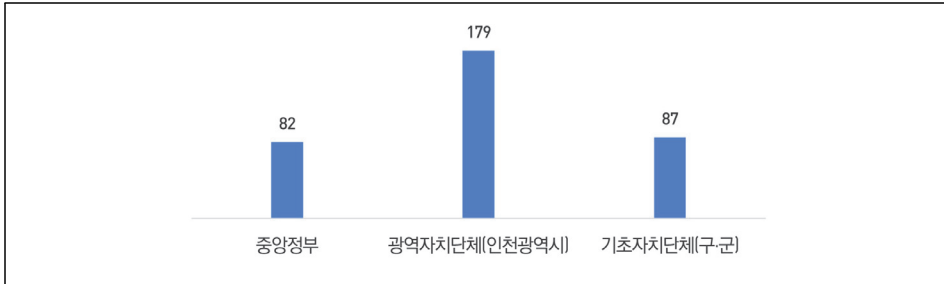
지원사업	사례수 (명)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도매업	기타
창업 교육 및 컨설팅(창업을 위한 컨설팅 창구의 부재)	24	1.5%	1.2%	2.1%	0.3%	0.0%	2.1%
홍보 및 마케팅(판로 개척)	120	14.1%	5.9%	6.5%	2.9%	2.6%	3.2%
자금지원(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직접 자금)	109	16.1%	5.0%	3.5%	2.3%	2.1%	2.9%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	45	3.2%	3.2%	3.8%	0.9%	2.1%	0.0%
교육프로그램 참여(세무 교육, 스마트 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17	0.3%	2.3%	0.9%	0.0%	0.9%	0.6%
채무관리	18	2.3%	1.5%	1.2%	0.3%	0.0%	0.0%
폐업 및 재기지원 컨설팅	8	1.5%	0.3%	0.3%	0.3%	0.0%	0.0%

주: 1) 서비스업은 미용,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포함
 2) 기타는 정보통신, 운수 및 창고, 기타를 포함



○ 경영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인천광역시 차원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그림 4-7]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핵심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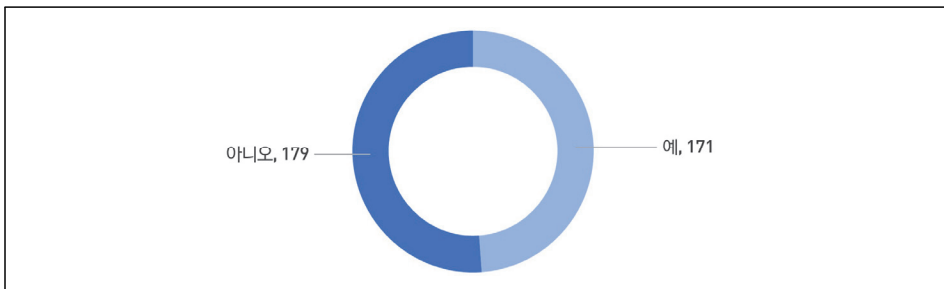


(2)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정책 효과성에 관한 인식

□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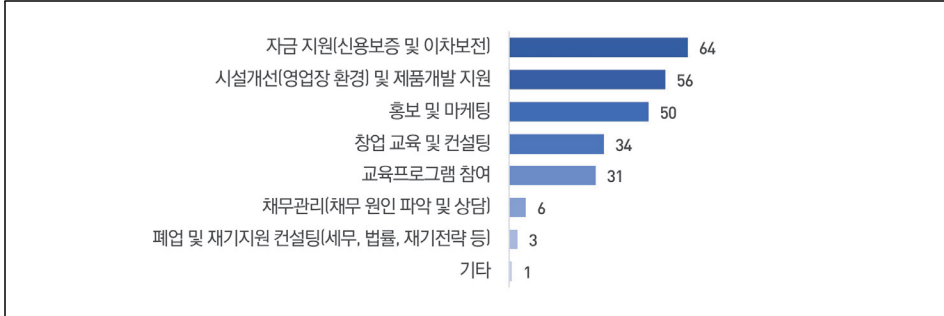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8]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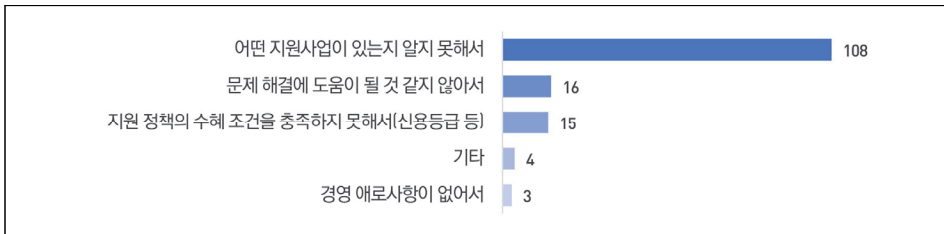
-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은 주로 ‘자금지원’,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9] 기참여 소상공인 지원사업



-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한 결과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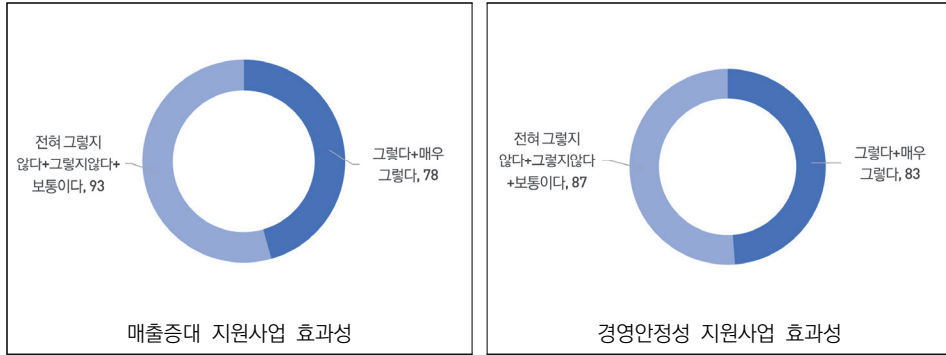
[그림 4-10]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미참여 사유



□ 소상공인 지원사업 효과성 (기참여자 대상)

- 기참여자 대상, 지원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출 증대 45.6%, 경영 안정성 48.8%로, 경영 안정성 지원사업의 효과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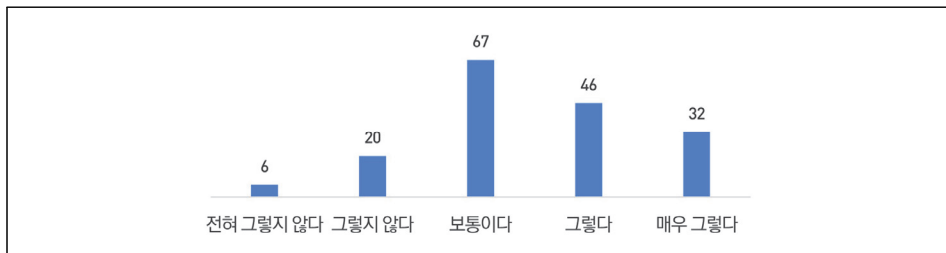
[그림 4-11] 기참여 소상공인 지원사업 효과성 결과(그래프)



□ 매출증대 효과

- 기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출증대(수익구조 개선, 비용 절감, 고객 유입 증가 등)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매우그렇다’ 18.7%, ‘그렇다’ 26.9%로 ‘그렇지않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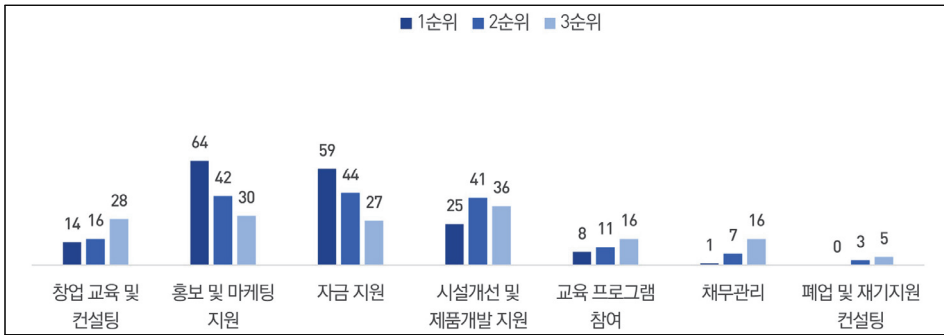
[그림 4-12] 기참여 지원사업의 사업체 매출증대 도움 여부



- 특히, 사업체 매출증대(수익구조 개선, 비용 절감, 고객 유입 증가 등)에 도움이 된 사업은 1순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순위 ‘자금지원’, 3순위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이었음

[표 4-32] 기참여 지원사업 중 매출증대 기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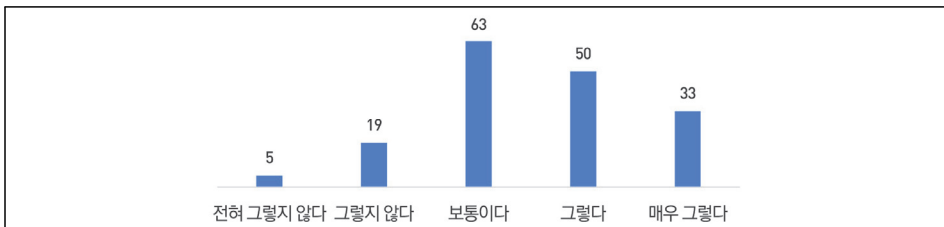
지원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창업 교육 및 컨설팅	14	8.2%	16	9.8%	28	17.7%
홍보 및 마케팅 지원	64	37.4%	42	25.6%	30	19.0%
자금지원	59	34.5%	44	26.8%	27	17.1%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	25	14.6%	41	25.0%	36	22.8%
교육프로그램 참여	8	4.7%	11	6.7%	16	10.1%
채무관리	1	0.6%	7	4.3%	16	10.1%
폐업 및 재기지원 컨설팅	0	0.0%	3	1.8%	5	3.2%



□ 경영 안정성 개선 효과

- 기참여자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성 개선(사업체 영위, 폐업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매우 그렇다’ 19.4%, ‘그렇다’ 29.4%로 ‘그렇지않다’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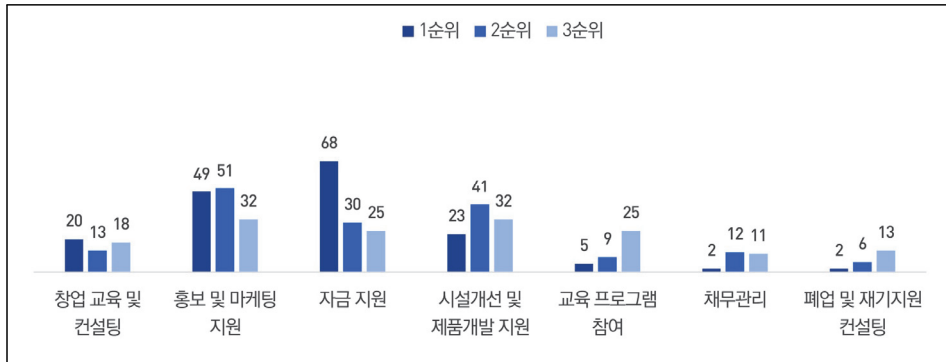
[그림 4-13] 기참여 지원사업의 사업체 경영 안정성 도움 여부



- 특히, 사업체 경영 안정성 개선(사업체 영위, 폐업 예방)에 도움이 된 사업으로는 1순위 ‘자금지원’, 2순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순위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이 선정됨

[표 4-33] 기참여 지원사업 중 경영 안정성 개선 기여 사업

지원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창업 교육 및 컨설팅	20	11.8%	13	8.0%	18	11.5%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9	29.0%	51	31.5%	32	20.5%
자금지원	68	40.2%	30	18.5%	25	16.0%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	23	13.6%	41	25.3%	32	20.5%
교육프로그램 참여	5	3.0%	9	5.6%	25	16.0%
채무관리	2	1.2%	12	7.4%	11	7.1%
폐업 및 재기지원 컨설팅	2	1.2%	6	3.7%	13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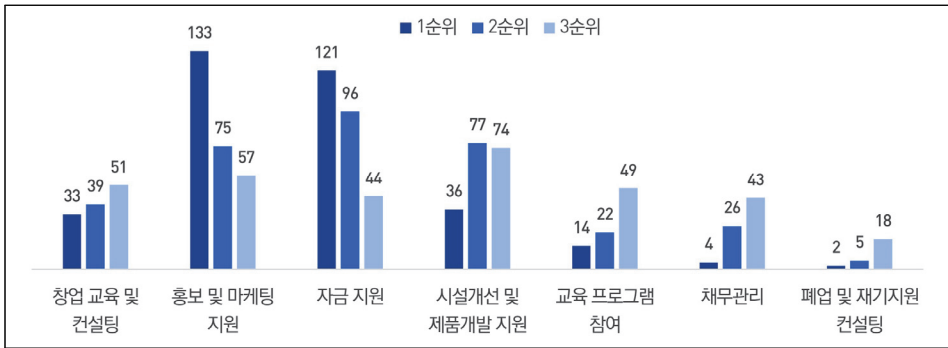
(3) 소상공인 지원사업 필요성에 관한 인식

□ 소상공인 지원사업 필요성(기참여자와 미참여자 공통)

- 향후 매출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살펴보면 1순위 ‘홍보 및 마케팅’, 2순위 ‘자금지원’, 3순위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으로, 기참여 사업 효과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남

[표 4-34] 향후 매출증대를 위한 필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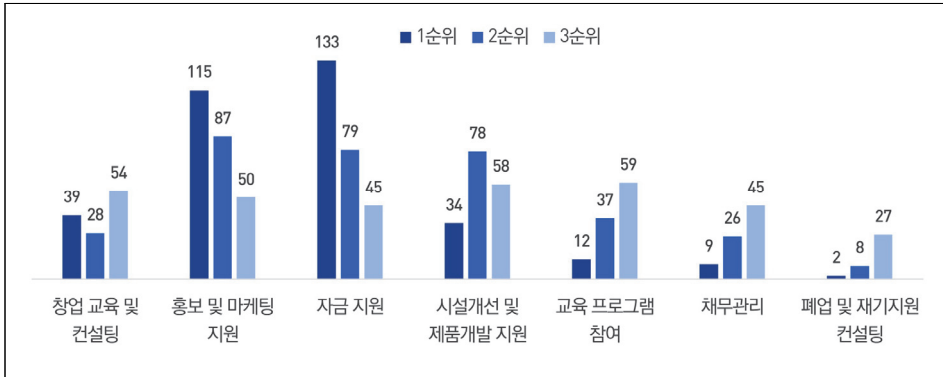
지원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창업 교육 및 컨설팅	33	9.6%	39	11.5%	51	15.2%
홍보 및 마케팅 지원	133	38.8%	75	22.1%	57	17.0%
자금지원	121	35.3%	96	28.2%	44	13.1%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	36	10.5%	77	22.6%	74	22.0%
교육프로그램 참여	14	4.1%	22	6.5%	49	14.6%
채무관리	4	1.2%	26	7.6%	43	12.8%
폐업 및 재기지원 컨설팅	2	0.6%	5	1.5%	18	5.4%



○ 소상공인들은 향후 경영 안정성 개선(사업체 영위, 폐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1순위 '자금지원', 2순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순위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선정하였음

[표 4-35] 향후 경영 안정성 개선을 위한 필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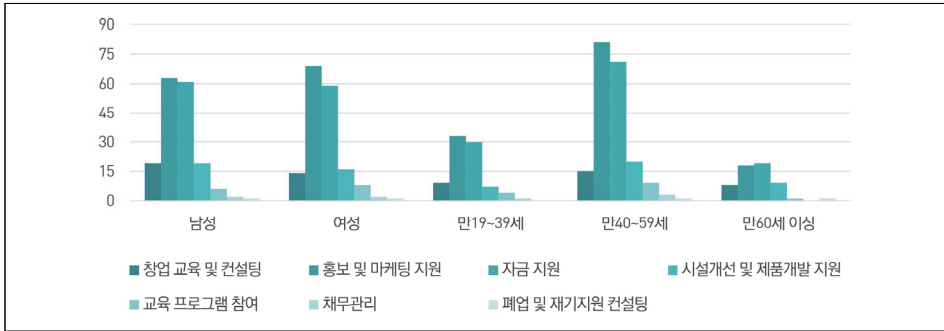
지원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창업교육 및 컨설팅	39	11.3%	28	8.2%	54	16.0%
홍보 및 마케팅 지원	115	33.4%	87	25.4%	50	14.8%
자금지원	133	38.7%	79	23.0%	45	13.3%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	34	9.9%	78	22.7%	58	17.2%
교육프로그램 참여	12	3.5%	37	10.8%	59	17.5%
채무관리	9	2.6%	26	7.6%	45	13.3%
폐업 및 재기지원 컨설팅	2	0.6%	8	2.3%	27	8.0%



- 매출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성별·연령별·업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 남성과 여성은 '홍보 및 마케팅'을 1순위로 선정하여 유사한 의견을 보였으나 여성은 타 사업보다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음
 - 60대 이상은 20~50대보다 '자금지원' 희망비율이 높았으며, 40~50대는 타 연령대보다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음

[표 4-36] 매출 증대를 위한 필요사업: 성별·연령별 기준(1순위)

지원사업	성별			연령별			
	사례수 (명)	남성	여성	사례수 (명)	만19세 ~39세	만40세 ~59세	만60세 이상
창업교육 및 컨설팅	33	5.6%	4.1%	32	2.6%	4.4%	2.4%
홍보 및 마케팅 지원	132	18.5%	20.3%	132	9.7%	23.8%	5.3%
자금지원	120	17.9%	17.4%	120	8.8%	20.9%	5.6%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	35	5.6%	4.7%	36	2.1%	5.9%	2.6%
교육프로그램 참여	14	1.8%	2.4%	14	1.2%	2.6%	0.3%
채무관리	4	0.6%	0.6%	4	0.3%	0.9%	0.0%
폐업 및 재기지원 컨설팅	2	0.3%	0.3%	2	0.0%	0.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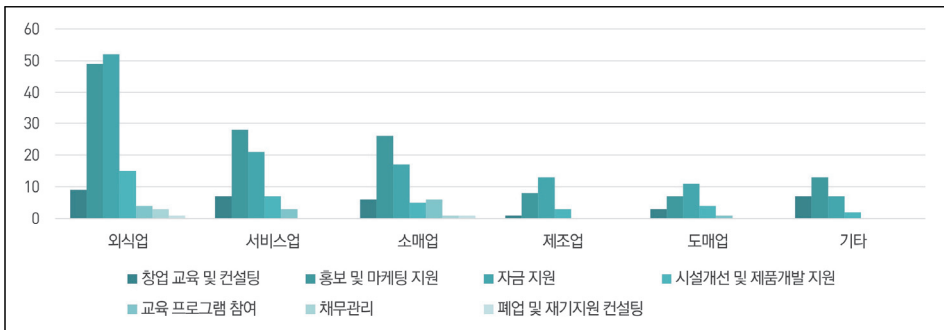


- 외식업, 제조업, 도매업은 ‘자금지원’을 1순위로 선정했으며 서비스업, 소매업, 기타업은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1순위로 선정함

[표 4-37] 매출 증대를 위한 필요사업: 업종별 기준(1순위)

지원사업	사례수 (명)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도매업	기타
창업 교육 및 컨설팅	33	2.6%	2.1%	1.8%	0.3%	0.9%	2.1%
홍보 및 마케팅 지원	131	14.4%	8.2%	7.6%	2.3%	2.1%	3.8%
자금 지원	121	15.2%	6.2%	5.0%	3.8%	3.2%	2.1%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	36	4.4%	2.1%	1.5%	0.9%	1.2%	0.6%
교육 프로그램 참여	14	1.2%	0.9%	1.8%	0.0%	0.3%	0.0%
채무관리	4	0.9%	0.0%	0.3%	0.0%	0.0%	0.0%
폐업 및 재기지원 컨설팅	2	0.3%	0.0%	0.3%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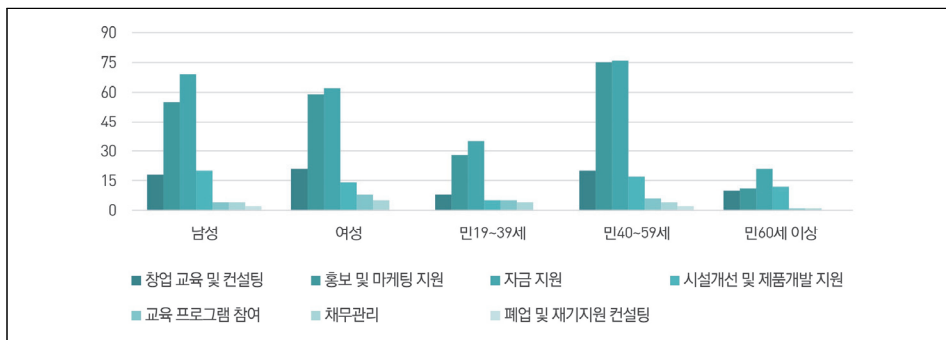
주: 1) 서비스업은 미용,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포함
 2) 기타는 정보통신, 운수 및 창고, 기타를 포함



-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성별·연령별·업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 남성과 여성 모두 '자금지원'을 1순위로 선정하였으며 남성이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음
 - 모든 연령대가 '자금지원'을 1순위로 선정했으나 40~50대는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대한 희망비율도 높았음

[표 4-38] 경영 안정성 개선을 위한 필요사업: 성별·연령별 기준(1순위)

지원사업	성별			연령별			
	사례수 (명)	남성	여성	사례수 (명)	만19세 ~39세	만40세 ~59세	만60세 이상
창업교육 및 컨설팅	39	5.3%	6.2%	38	2.3%	5.9%	2.9%
홍보 및 마케팅 지원	114	16.1%	17.3%	114	8.2%	22.0%	3.2%
자금지원	131	20.2%	18.2%	132	10.3%	22.3%	6.2%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	34	5.9%	4.1%	34	1.5%	5.0%	3.5%
교육프로그램 참여	12	1.2%	2.3%	12	1.5%	1.8%	0.3%
채무관리	9	1.2%	1.5%	9	1.2%	1.2%	0.3%
폐업 및 재기지원 컨설팅	2	0.6%	0.0%	2	0.0%	0.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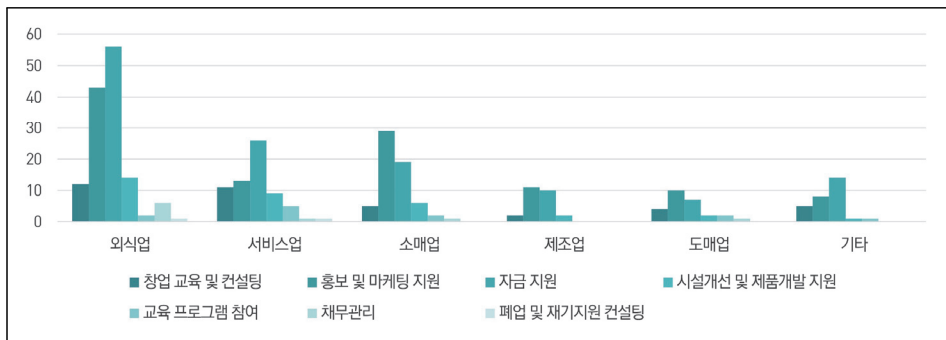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외식업, 서비스업, 기타업이 1순위로 ‘자금지원’을, 소매업, 제조업, 도매업은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1순위로 선정하였음

[표 4-39] 경영 안정성 개선을 위한 필요사업: 업종별 기준(1순위)

지원사업	사례수 (명)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도매업	기타
창업교육 및 컨설팅	39	3.5%	3.2%	1.5%	0.6%	1.2%	1.5%
홍보 및 마케팅 지원	114	12.6%	3.8%	8.5%	3.2%	2.9%	2.3%
자금지원	132	16.4%	7.6%	5.6%	2.9%	2.0%	4.1%
시설개선 및 제품개발 지원	34	4.1%	2.6%	1.8%	0.6%	0.6%	0.3%
교육프로그램 참여	12	0.6%	1.5%	0.6%	0.0%	0.6%	0.3%
채무관리	9	1.8%	0.3%	0.3%	0.0%	0.3%	0.0%
폐업 및 재기지원 컨설팅	2	0.3%	0.3%	0.0%	0.0%	0.0%	0.0%

주: 1) 서비스업은 미용,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포함
 2) 기타는 정보통신, 운수 및 창고, 기타를 포함



(4) 결과의 종합

-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실시의 목적은 인천광역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무의 영역과 내용을 확인하고, 현재 지원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임

- 먼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와 마케팅, 자금지원(보증지원, 이차보전, 직접 자금 지원 등) 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성 부분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
 - 홍보와 마케팅에 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그룹의 특성을 살펴보면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종사 직군에서 크게 나타남
 - 자금지원에 관한 어려움은 특히 40, 50대 연령층에서 크게 느끼고 있었고, 외식업 종사 직군에서 크게 나타남
 - 정성적 측면에서 지원 확대 필요 영역을 확인한 결과 자금지원(대출 이자 지원), 홍보 영역 외에 교육(직군을 확대한 소상공인 양성 교육, 업종별 측정 교육 등)과 재기 지원 및 폐업지원에 관한 지원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향후 소상공인 지원조직을 확대 또는 신규 설립하는 경우, 현재 지원사무인 자금지원, 홍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폐업 및 재기지원, 교육 지원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지자체 재정현황 분석

□ 세입 및 세출현황 분석

- 인천광역시의 2023년 예산규모는 15조 3,790억원(기금 포함)으로 전년도 14조 3,971억원과 비교하여 9,819억원(6.82%) 증가함
 - 2023년 일반회계예산은 10조 425억원, 특별회계예산은 3조 8,732억원, 기금은 1조 4,633억원임
 - 연도별 세입예산을 살펴보았을 때 인천광역시의 세입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9.33%의 증가율을 보임

[표 4-40] 인천광역시 연도별 세입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입예산(기금 포함)	10,768,929	11,920,554	12,950,013	14,397,053	15,379,014
- 일반회계	7,177,427	9,069,051	8,586,378	9,326,396	10,042,511
- 특별회계 및 기금	3,591,502	2,851,503	4,363,635	5,070,657	5,336,503

출처: 인천광역시 재정공시(2023),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2023)

- 일반회계 기준 세입 재원별로 볼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지방세(48.76%)이며 이전 재원인 보조금(33.13%)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2022년과 비교하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와 보조금이 각각 11.99%, 9.1% 증가하였으며, 낮은 비중이지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40.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체 재원인 지방세 비중이 높고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인천광역시의 세입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4-41] 세입 자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2023)	비중	전년도 예산액 (2022)	증감액	증감률
계		10,042,511	100	9,326,396	716,115	7.68
자체 자원	지방세	4,896,254	48.76	4,372,222	524,032	11.99
	세외수입	372,322	3.71	589,889	△217,567	△36.88
이전 자원	지방교부세	855,733	8.52	893,500	△37,767	△4.23
	보조금	3,326,863	33.13	3,049,379	277,484	9.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91,339	5.89	421,407	169,932	40.32

출처: 인천광역시 재정공시(2023)

- 인천광역시의 세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세출규모 구체적으로 분석함
 - 2023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서 전체 세출예산의 42.66%이며, 다음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2.72%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 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 반면, 그 외 분야가 차지하는 개별 비중은 크지 않음(예를 들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19년에 비해 세출예산액이 385.39% 증가하였으나, 2023년 현재 전체 세출예산의 3.26% 수준임)

[표 4-42]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2023)	비중	전년도 예산액 (2022)	증감액	증감률
계	10,042,511	100	9,326,396	716,115	7.68
일반공공행정	1,277,685	12.72	1,224,172	53,513	4.37
공공질서 및 안전	479,127	4.77	446,724	32,403	7.25
교육	840,834	8.37	805,771	35,063	4.35
문화 및 관광	440,012	4.38	442,214	△2,202	△0.5

	예산액 (2023)	비중	전년도 예산액 (2022)	증감액	증감률
환경	505,677	5.04	407,628	98,049	24.05
사회복지	4,284,055	42.66	3,766,901	517,154	13.73
보건	69,394	0.69	60,148	9,246	15.37
농림해양수산	178,232	1.77	190,009	△11,777	△6.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27,771	3.26	349,919	△22,148	△6.33
교통 및 물류	865,023	8.61	882,322	△17,299	△1.96
국토 및 지역개발	291,305	2.9	302,948	△11,643	△3.84
과학기술	44,539	0.44	43,313	1,226	2.83
예비비	33,460	0.33	18,233	15,227	83.51
기타	405,395	4.04	386,093	19,302	5.00

출처: 인천광역시 재정공시(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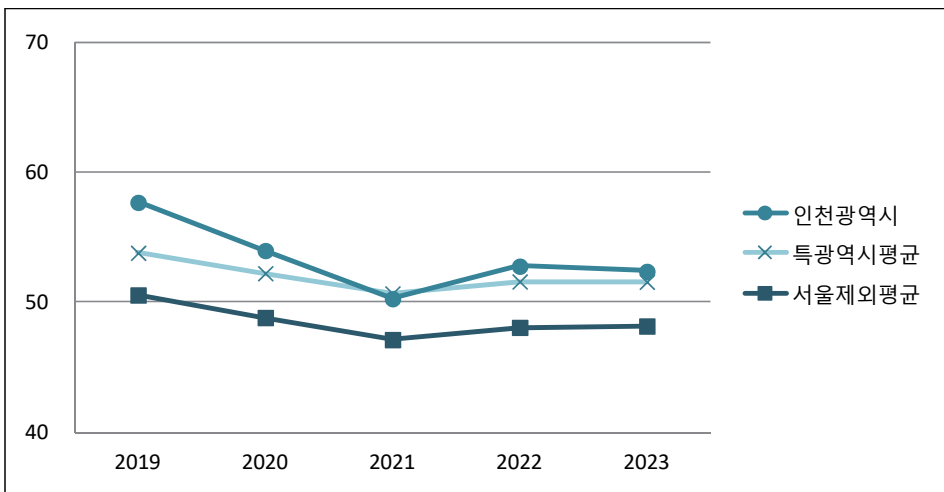
□ 재정 여건 분석

- 인천광역시의 재정 여건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방채무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함
 - 2023년 당초예산 기준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52.4%로 나타나며 이는 전년 대비 0.4%, 2019년 대비 5.3% 감소한 것임
 - 유사 지방자치단체인 특·광역시 2023년 평균(51.6%)과 비교할 때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특·광역시 평균의 경우 서울시의 높은 재정자립도(75.4%)로 인해 평균값이 높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음
 -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 평균과 비교할 때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을 기점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표 4-43] 재정자립도 연도별 추이

(단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천광역시	57.7	54.0	50.3	52.8	52.4
특·광역시 평균	53.8	52.3	50.7	51.6	51.6
서울 제외 평균	50.6	48.9	47.2	48.1	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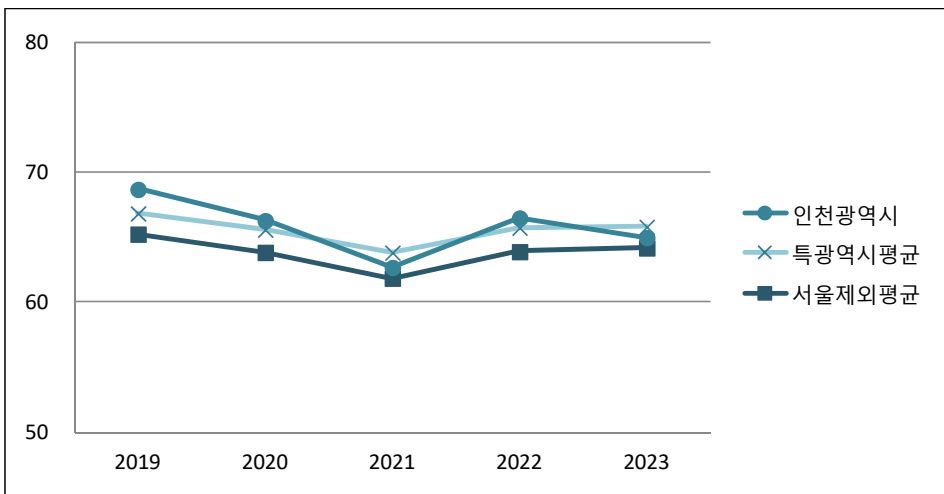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kr)

-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로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함
 - 2023년 당초예산 기준 인천광역시의 재정자주도는 65%로 나타나며 이는 전년 대비 1.5%, 2019년 대비 3.7% 감소한 것임
 - 유사 지방자치단체인 특·광역시의 2023년 평균(65.8%)과 비교할 때 재정자주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재정자주도(77.2%)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서 기인함
 -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 평균과 비교할 때 인천광역시의 재정자주도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4-44] 재정자주도 연도별 추이

(단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천광역시	68.7	66.3	62.7	66.5	65.0
특·광역시 평균	66.9	65.6	63.8	65.8	65.8
서울 제외 평균	65.3	63.9	61.9	63.9	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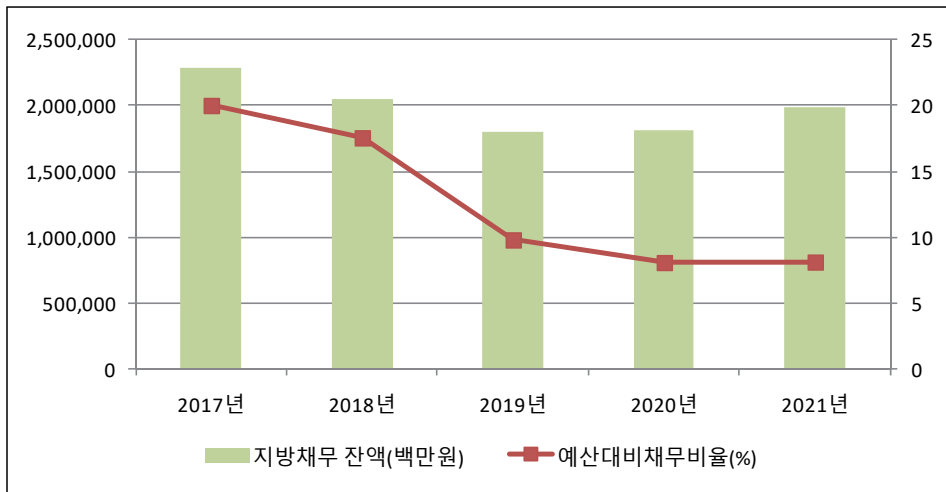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kr)

- 지방채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채무 잔액과 예산대비채무비율을 통해 재정 여건을 살펴볼 수 있음
 - 2021년 기준 인천광역시의 지방채무 잔액은 1조9,887억원 수준이며 예산 대비채무비율은 8.15%임
 - 인천광역시의 지방채무 잔액은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음

[표 4-45] 인천광역시 채무현황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방채무 잔액	2,287,859	2,048,871	1,801,800	1,810,343	1,988,661
예산대비채무비율	20.03	17.58	9.83	8.11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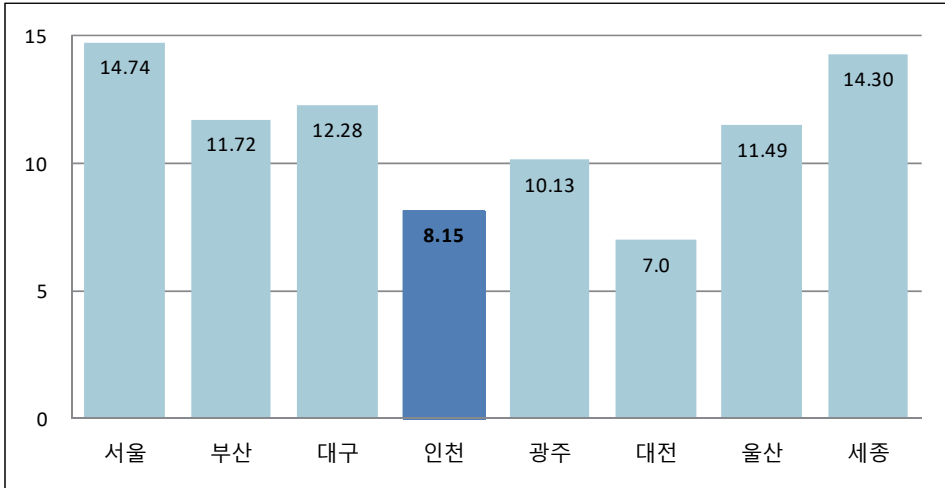
출처: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 예산대비채무비율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인 특·광역시와 비교하면 인천광역시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대전광역시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7%로 가장 낮고 인천광역시가 8.15%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표 4-46] 시도별 예산대비채무비율(2021년)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예산대비채무비율	14.74	11.72	12.28	8.15	10.13	7.00	11.49	14.30



출처: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 주요 재정지표 분석

- 지방재정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 재정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지방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22년(FY2011) 분석 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요 재정지표를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에 포함된 재정분석지표의 의미와 도출 산식, 해석, 지표 성격은 다음과 같음

[표 4-47] 주요 재정지표

재정분석지표	내용	지표 성격
통합재정수지비율	<p>의미: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 측정</p> <p>산식: $\{(\text{세입}-\text{지출 및 순융자}) / \text{통합재정규모}\} \times 100\%$</p> <p>* 총수입·총지출: 예산,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규모로 회계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p> <p>*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p> <p>*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p> <p>해석: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p>	상향지표
실질수지비율	<p>의미: 자치단체의 재정적자 여부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수지균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재원결산액 대비 실질수지액의 비율 측정</p> <p>산식: $(\text{실질수지액} / \text{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p> <p>* 실질수지액: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금 - 보조금집행잔액</p> <p>* 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자치구 및 시군조정교부금</p> <p>해석: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이 건전하다고 판단</p>	상향지표
경상수지비율	<p>의미: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측정</p> <p>산식: $(\text{경상비용} / \text{경상수익}) \times 100\%$</p> <p>* 경상비용: 인건비 + 운영비 + 자치구조정교부금 + 시군조정교부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p> <p>* 경상수익: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 지방교부세 +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 + 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p> <p>해석: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수지와 비용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건전성이 낮다고 판단</p>	하향지표
관리채무비율	<p>의미: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p> <p>산식: $(\text{지방채무잔액}*(\text{BTL포함}) / \text{세입 결산액}) \times 100\%$</p> <p>* 지방채무잔액: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지급액</p> <p>해석: 지방채무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p>	하향지표

재정분석지표	내용	지표 성격
관리채무부담비율	의미: 경상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량(stock) 지표 산식: (지방채무잔액(BTL포함) / 경상일반재원) × 100% * 지방채무 잔액: 지방채 증권 + 차입금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 경상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자치구 및 시군조정교부금 해석: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	하향지표
관리채무증감률 (신규)	의미: 자치단체 채무의 급격한 증가 정도 또는 안정성 측정 산식: {(지방채무잔액 - 전년도 지방채무잔액) / 전년도 지방채무잔액} × 100% * 총채무 기준(다만, 도(제주 제외)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에서 관할 시·군에 용자해 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제외(중복분 제거)한 순채무를 적용) 해석: 지방채무의 연간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관리가 안정적이라고 판단	하향지표
가용재원비율 (신규)	의미: 자치단체의 재량적 재원 수준 측정 산식: (가용재원 / 당초예산액) × 100% * 가용재원: 53개 통계목의 자체사업비 합계(당초예산 기준) 해석: 당초예산액 대비 가용재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재량적 사업추진 역량 및 경직성경비 절감 노력이 높다고 판단	상향지표

출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22)

- 인천광역시의 통합재정수지비율(상향지표)은 최근 5년 평균 5.61%로 유형평균 0.5%에 비해 높은 편이며, 2021년 기준 6.15%로 유형평균 2.45%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자치단체 재정활동에 따른 적자, 흑자를 측정하며 실질적으로 세입과 세출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0년까지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021년에는 수치가 개선되었으며 유형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실질수지비율(상향지표)은 5년 평균 10.13%로 유형평균 12.32%에 비해 낮은 편이며, 2021년 기준 7.67%로 유형평균 15.8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자치단체 실제 수입 대비 수지비율을 측정하는 실질수지비율은 일반재원이 급증할 경우 산식의 분모가 증가하여 수치가 낮아지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낮다고 평가됨
 - 인천광역시의 실질수지비율은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경상수지비율(하향지표)은 5년 평균 56.72%로 유형평균 67.16%에 비해 낮은 편이며, 2021년 기준 48.8%로 유형평균 66.27%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재정수지를 대표하는 지표인 경상수지비율은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상반된 추이를 형성하며 경상수익이 경상비용보다 빠르게 증가할 경우 경상수지 비율은 감소하고 재정건전성은 높아짐
 - 인천광역시의 경상수지비율은 2019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관리채무비율(하향지표)은 5년 평균 16.49%로 유형평균 16.24%보다 높은 편이나, 2021년 기준 12.14%로 유형평균 17.9%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관리채무비율은 자치단체의 채무 수준과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인천광역시의 관리채무비율은 5년 평균으로 볼 때 유형평균에 비해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유형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관리채무부담비율(하향지표)은 5년 평균 39.89%로 유형평균 38.68%보다 높은 편이나, 2021년 기준 29.23%로 유형평균 41.88%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관리채무부담비율이 급증하였으나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관리채무증감률(하향지표)은 2021년 기준 8.65%로 유형평균 14.7%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관리채무증감률은 자치단체 채무의 급격한 증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무 관리지표로서 인천광역시의 관리채무증감률은 유형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가용재원비율(상향지표)은 2021년 기준 9.44%로 유형평균 11.29%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가용재원비율은 자치단체의 재량적 사업추진 역량 및 경직성 경비 절감 노력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인천광역시의 가용재원비율은 유형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용재원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표 4-48] 주요 재정지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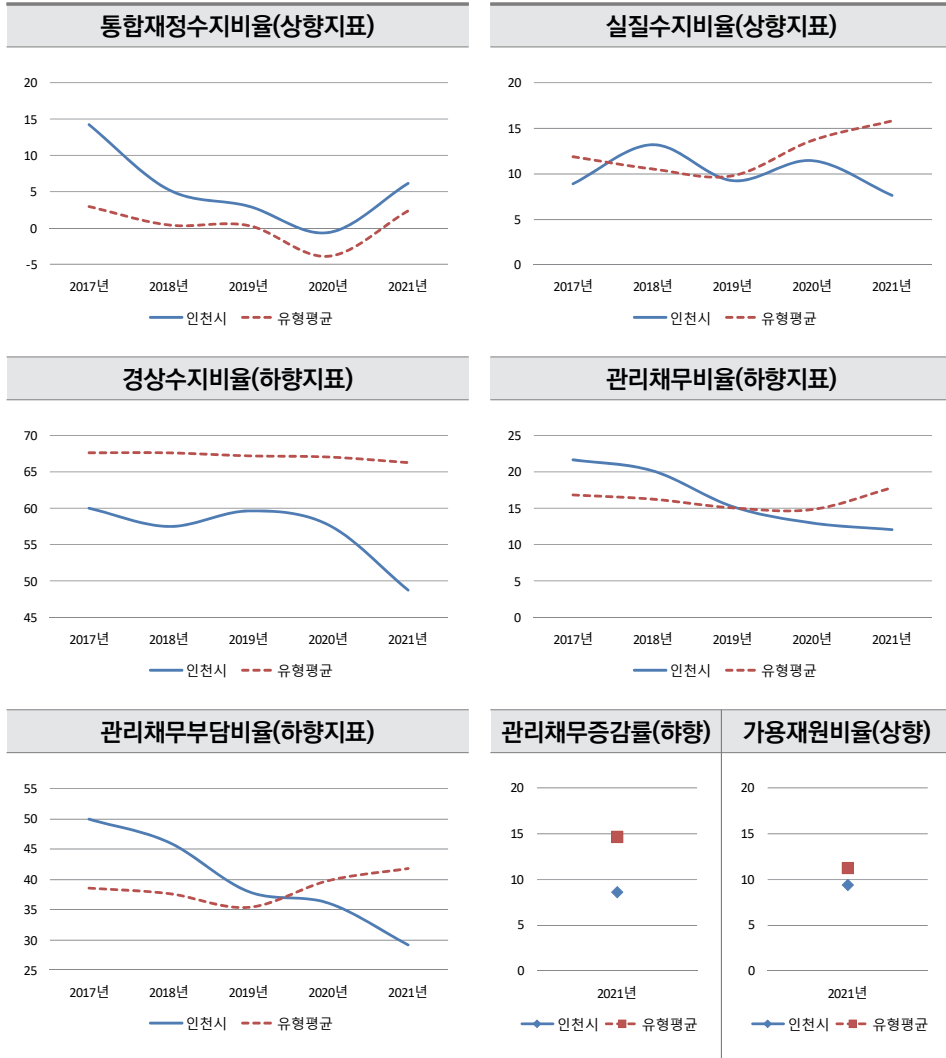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 평균
1. 통합재정수지비율	인천시	14.21	5.27	3.02	-0.6	6.15	5.61
	유형평균	3.05	0.48	0.4	-3.88	2.45	0.5
2. 실질수지비율	인천시	8.94	13.24	9.29	11.49	7.67	10.13
	유형평균	11.86	10.49	9.74	13.67	15.85	12.32
3. 경상수지비율	인천시	59.98	57.49	59.61	57.71	48.8	56.72
	유형평균	67.64	67.63	67.21	67.05	66.27	67.16
4. 관리채무비율	인천시	21.73	20.21	15.31	13.05	12.14	16.49
	유형평균	16.91	16.33	15.14	14.91	17.9	16.24
5. 관리채무부담비율	인천시	49.95	46.13	38.01	36.12	29.23	39.89
	유형평균	38.61	37.69	35.39	39.85	41.88	38.68
6. 관리채무증감률	인천시	-	-	-	-	8.65	8.65
	유형평균	-	-	-	-	14.7	14.7
7. 가용재원비율	인천시	-	-	-	-	9.44	9.44
	유형평균	-	-	-	-	11.29	11.29

출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18~2022)

[그림 4-14] 주요 재정지표 변화

(단위: %)



□ 재원조달 가능성

-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3년 예산 기준 (1안) 약 5,084백만원, (2안) 약 7,066백만원으로 추정됨
 - (1안)은 현행조직을 유지하되 조직의 일부 기능과 규모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며, (2안)은 독립재단을 신설하는 방안임
 - (1안)의 방식 채택하는 경우 소요되는 재원은 약 5,084백만원으로 추정되며 (2안)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소요되는 재원은 약 7,066백만원으로 추정됨
 - 현행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1안)은 약 8억 5천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2안)의 경우 약 28억 4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표 4-49] 사업계획 방안에 따른 소요 재원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사업비	경상경비		합계
			운영비	임대료	
(1-1)현행조직유지	1,135	2,810	284	0	4,230
(1-2)현행 조직 유지 +연구개발팀 신설	1,499	3,210	375	0	5,084
(2)재단 신설	2,693	3,362	675	337	7,066

주: 사업비는 소상공인 종사자수, 2023년 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임

- 각 대안별 향후 5년 소요 재원 추정 결과 (1안)의 총 소요 비용은 약 308.8억원, (2안)의 총 소요 비용은 466.8억원으로 분석됨
- (1안)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현행 방식과 비교하여 49억 9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조달되어야 하고, (2안)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20억 7억 9천만원의 재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0] 사업계획 방안에 따른 향후 5년 소요 자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현행 조직 유지	4,230	4,645	5,115	5,648	6,252	25,891
(1안) 현행 조직 유지+ 연구개발팀 신설	5,084	5,563	6,105	6,718	7,412	30,881
(2안) 재단 신설	7,066	8,318	8,921	10,798	11,581	46,684

-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전담 조직 설립에 따른 신규 사업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투자가용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11조 6,288억원, 2027년 13조 883억원으로 확인되며 연평균 신장률은 3%임
 - 사업수요분을 검토했을 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된 사업수요분은 11조 8,042억원에서 13조 3372억원으로 확인되며 연평균 신장률은 3.1%로 투자가용재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투자가용재원의 총계는 62조 4,214억원이며 사업수요의 총계는 63조 6,224억원으로 확인되어 투자가용재원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 계획된 사업수요분 대비 투자가용재원의 규모를 비교하면 투자가용자원보다 사업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천광역시 내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소상공인전담조직 설립 사업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4-51] 인천광역시 가용자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① 세입합계		15,625,964	16,182,592	16,406,687	17,136,334	17,419,431	82,771,008	
세입	자체 자원	지방세 수입	4,896,254	5,051,887	5,197,100	5,348,395	5,506,036	25,999,673
		세외 수입	1,864,086	2,438,585	2,328,370	2,508,532	2,523,567	11,663,140
	이전자원	5,386,455	5,671,116	5,863,989	6,148,011	6,357,216	29,426,787	
	기타	3,479,170	3,021,003	3,017,227	3,131,396	3,032,612	15,681,408	
② 세출합계		3,997,191	3,680,456	4,021,262	4,319,590	4,331,090	20,349,590	
세출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772,907	779,541	793,414	810,380	832,617	3,988,860
		기본 경비	36,262	36,465	36,670	37,107	37,454	183,959
	재무 활동	내부거래 지출	1,570,511	1,410,587	1,536,564	1,563,631	1,439,246	7,520,538
		보전 지출	1,497,271	1,334,716	1,485,547	1,680,634	1,824,897	7,823,065
	예비비	120,240	119,146	169,068	227,837	196,877	833,167	
③ 투자가용자원(①-②)		11,628,773	12,502,136	12,385,424	12,816,744	13,088,340	62,421,418	
④ 사업수요		11,804,173	12,761,036	12,644,324	13,075,644	13,337,240	63,622,418	
부족자원(④-③)		175,400	258,900	258,900	258,900	248,900	1,201,000	

출처: 인천광역시 2023~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2)

□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세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자체 재원인 지방세입이 증가하고 있어 세입여건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세출 분야 중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지출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향후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증가하는 세출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정운동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재정자주도는 특·광역시 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재정력이 강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유형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예산대비채무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유사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주요 재정지표 분석 결과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부담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관리채무증감률 또한 유형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채무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반면, 가용재원비율은 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가용재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 투자가용재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투자가용재원보다 사업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본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경우 재원조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향후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의 종합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 방안에 따른 타당성 비교·분석 실시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 추진을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음
 - (1안)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을 통한 위탁 사무 형태 유지
 - 현재 인천광역시는 출연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을 고민 중에 있음
 - (2안) 독립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 설립
 - 독립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현행 방식(1안. 현행조직 유지 및 확대)과 신규방식(2안. 독립재단법인 설립)의 타당성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이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의 중점 사항은 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법·제도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② 설립 계획의 적정성(조직 및 인력 운영) ③ 설립의 기대효과(주민복지증진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로 구분됨(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2021)
 - 그러나 현 단계는 (2안. 독립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검토 가능한 타당성 평가 항목은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법·제도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과 “설립 기대효과(주민복지 증진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가 있고, 두 개의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 유형별 타당성을 비교·분석함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현황 검토 결과 소상공인 종합지원 창구 필요하며, 종합 지원 사업의 운영·성과 관리 필요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기관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지원공단(남부·북부 센터)과 인천광역시 산하 인천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디딤돌센터) 및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 운영)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대상 사무 간 중복성이 높은 상황임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2023년 사업비 기준 331,130백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운영·성과 및 사후 관리 체계 전반에 관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일부 중복사업의 시행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초래됨(인천광역시 내부자료²¹⁾)

□ 소상공인 관련 지원 법규 검토 및 시도 지원사례 분석 결과 법률상 지자체에 책임이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무와 실제 시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무 간 괴리 존재

- 법률상 소상공인 지원사무에 관한 내용 검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법」, 「전통시장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현행 소상공인 관련 법률의 규정은 소상공인 사무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사무라 할 수 있음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전통시장법」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시책 수립·시행,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안정적 확보에 관한 책무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 혹은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21) 2023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실제 시·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무를 살펴본 결과 조직 규모별 그 내용이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창업지원, 경영지원, 폐업 및 재기지원, 금융지원, 연구(상권분석)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의 규모가 크고,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창업, 성장, 폐업·재기 전 과정에 대한 경영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자금 지원 등의 금융사업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영역임을 고려하였을 때, 법률상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정부의 사무 지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영역임
 - 향후 중앙과 지방의 사무 구분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의 필요성은 있음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2인) 독립재단법인 설치보다 (1인) 현행 조직의 확대·개편 방향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평가는 크게 법·제도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함
 - 법·제도적 타당성 분석 결과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독립재단의 설립은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무와 유사·중복 업무가 확인되며, 별도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인천신용보증재단 내 경영지원 업무를 신규 재단 고유 업무로 전환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증 등의 고유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 출자·출연기관 설립 이전 대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정량적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현행 조직을 유지할 시에는 총비용이 42.3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기에 연구개발팀을 신설할 경우 약 50.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단을 신설할 경우 비용은 70.7~79.4억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5년간 소요예정 비용을 추정해보면 현행조직을 유지할 시 2024~2028년 총 소요 비용은 258.9억원, 연구개발팀을 신설할 경우 308.8억원이 소요되며, 재단을 신설할 경우에는 최소 466.8억원에서 최대 524.2억원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설립의 기대효과 측면에서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효과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 설립 기대효과는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효과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분석 결과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 (1안)과 (2안) 모두 주민복리증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상공인 편의성 측면에서 (1안)을 통한 통합 지원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소상공인 사업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와 마케팅, 자금지원(보증지원, 이차보전, 직접 자금 지원 등) 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안)으로 가는 경우 자금지원(보증지원 및 이차보전²²⁾)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편의성·접근성 측면에서 (1안)의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22) 소상공인 사업자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고유사무 영역임. 또한 신규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기존기관과의 중복 사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금지원(보증지원 및 이차보전) 업무는 (2안) 신규 독립재단에서 수행할 수 없음

-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 지원을 위한 대상 사무를 기준으로 (1안)과 (2안)을 검토하였을 때, (1안)과 (2안) 모두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 필요로 하는 사무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세부 지원사업 계획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여야 함
- 분석 결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양호한 편으로 확인됨. 재정자주도는 특·광역시 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재정력이 강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유형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예산대비채무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유사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가용재원비율은 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가용재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 투자가용재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투자가용재원보다 사업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본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경우 재원조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향후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정책적 제언

□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유형의 조속한 의사결정 필요

- 시의성·실효성 측면에서의 전담 기구 조직 유형 결정이 필요하며, 조속한 조직 유형 결정과 세부 지원사업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구는 조직의 유형보다 전담기구에서 수행하는 지원 사업의 내용이 중요함

□ (1안)과 (2안) 모두 조직 유형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며, 유형 결정 이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1안) 출연기관에 사무 위탁 방식 유지에 따른 장점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됨
 - 공공기관으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 사무를 주는 경우 업무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담보됨
 - 위탁 사무의 성과가 높아지거나 조직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반대로 위탁 사무의 성과가 낮거나 조직이 축소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탄력적 대응이 가능함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경우 6개 지역 지점을 확보하고 있어 지역밀착형 지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구조임
 - 금융·비금융의 통합 지원으로 비금융(경영지원) 지원사업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음
- 다만 (1안) 출연기관에 사무 위탁 방식 유지는 다음의 단점을 포함함
 - 계약에 의한 사업 수행 및 시설 운영으로 책임 한계가 불명확함
 - 고유사무 외에 새로운 영역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이 부족할 수 있음
 - 민간과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함

- (1안) 출연기관에 사무 위탁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 될 수 있는 단점은 다음의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인천신보 위탁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인천 신보 조직으로 흡수·통합 (이사장 직속으로 센터 설치하고, 인천신보 일반직과 위탁사무 전문직 인력을 통합 배치)을 통하여 위탁 사무를 인천 신보 경영평가와 연계시킴으로써 위탁 사무 책임성 강화가 가능함
 - 현행 위탁 센터인 소상공인금융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신규센터 설치를 통해 전문직 구성원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기존 센터 직원의 경우 신규 채용 절차를 준용하되,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인천 신보 일반직 직원 중, 경영지원 사무 인력 구성을 통해 집중 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하고, 향후 인천 신보 일반직 채용에 경영지원 사무와 보증사무 지원 역량 평가를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권역 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민간(실제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상인)과의 지속적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안) 재단 형태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됨
 - 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만큼 전문성 높은 신규 인력 채용이 가능함
 - 세부 추진 사업을 결정할 때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관한 고려 요소가 적으므로 사업의 다양성 및 자율성 확보가 가능함
 - 법률적 지위 및 인천시의 재정적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 자율성이 높음
- 다만 (2안) 재단 형태 출연기관 설립은 다음의 단점도 포함하고 있음
 - 신규 기관의 설치로 임대료 및 기자재 구입 등의 비용이 소요되며, 사업부서 외에 경영지원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정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이 수반되어 소요 예산 부담이 가중됨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설립 기간이 소요됨

- 현재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중복 사무 문제가 있어 재단 설립 전 기관 간 사무 구분을 명확히 분리하여야 함
- 재단 설립의 궁극적 목적은 높은 전문성을 통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 지원이지만 재단 설립이 반드시 높은 전문성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움
- 소상공인 전담 조직 설립 시, 특정 이해관계자 및 집단으로부터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이 있음

○ (2안) 재단 형태 출연기관 설립 시 발생 될 수 있는 단점은 다음의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요 예산의 경우, 인건비 기준을 낮추고(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종합 비교를 통해 가장 낮은 임금테이블 적용), 사업규모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출 수 있음
- 중복사업의 경우 현행 조직에서 수행하는 사무와 신규 재단설립 시 수행하게 될 사무는 재단 설치 이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재단 설립 이후 성과관리는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과와 현장 관계자들과의 지속적 소통·관리를 통해 보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설립 기간의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절차 이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설립 기간 장기소요는 불가피한 상황임

[표 5-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대안별 특성

구분	(1안) 현행조직 유지(인천신보 위탁)	(2안) 출연기관(재단설립)
법적근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주체	市	市
성격	공익성(비영리성)	공익성(비영리성)
운영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지원+자체수입 • 수입은 자치단체 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지원+자체수입 • 수입은 자체예산 편성

구분	(1안) 현행조직 유지(인천신보 위탁)	(2안) 출연기관(재단설립)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책임성 확보 • 외부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응 가능 • 권역 지점 활용을 통한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 지원 가능 • 금융·비금융의 통합 지원으로 비금융(경영지원) 지원사업 효과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추진 사업의 다양성 확보 •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 • 법률적 지위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에 의한 사업 수행 및 시설 운영으로 책임 한계 불명확 • 전문성/창의성 부족 • 민간과의 소통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 예산 부담 가중 • 설립 기간 장기소요 • 소상공인 지원조직 사무 간 중복 사항 존재 함(독립재단 설치 시,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 사무와 중복성 높음) • 재단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담보 어려움 • 특정 이해관계자의 간접 통제 가능성 높음
단점에 따른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위탁 센터인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신규센터 설치를 통해 전문직 구성원 배치하여 전문성 확보 • 인천 신보 일반직 직원 중, 경영지원 사무 인력 구성을 통해 집중 역량 교육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 • 향후 인천 신보 일반직 채용에 경영지원 사무와 보증사무 지원 역량 평가를 통해 전문성 확보 • 권역 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면 지속적 소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 예산의 경우, 인건비 기준을 낮추고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종합 비교를 통해 가장 낮은 임금테이블 적용), 사업규모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출 수 있음 • 중복사업의 경우 현행 조직에서 수행하는 사무와 신규 재단설립 시 수행하게 될 사무의 조정 가능함 • 설립 기간의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절차 이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설립 기간 장기소요는 불가피

참고문헌

- 김정권·최주석·이미숙. (2017).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비용효과분석 적용방안 마련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2(3), 1-22.
- 도영호·유보람·위평량. (2020). 서울시 소상공인 중장기 변화추세 및 정책적 시사점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기본연구보고서.
- 민규량·강민근. (2022).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분석 및 추진방안. 2022년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1).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인천광역시. (2022). 2023~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 인천광역시. (2022).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 인천광역시. (2023). 2023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 인천광역시. (2023). 2023년 인천광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인천광역시. (2023). 2023년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 인천광역시. (2023).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 추진(안).
- 임성희·김진옥. (2021). 개인 창업사업체 생존율분석: 2010~2018 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연구, 26(2), 1-30.
- 정지원·오수영. (2021).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2021년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지방공기업평가원. (2021). 지방공공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매뉴얼.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2017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2017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FY201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행정안전부. (2021).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2021.2.10.개정).

OECD data(data.oecd.org)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www.semas.or.kr)

인천디지털시정(http://onsight.incheon.go.kr/ic)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클린아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1206521)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18~2022)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지방재정 통합공시

통계청(kostat.go.kr)

통계청(kostat.go.kr),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kostat.go.kr), 도시계획현황(한국국토정보공사)

통계청(kostat.go.kr), 소상공인실태조사(조사기반)

통계청(kostat.go.kr), 인구총조사

통계청(kostat.go.kr), 중소기업기본통계

한국세정신문. (2022.07.22.). [세법개정] 간이과세자 8천만원, 납부면제자는 4천800
 만원으로 기준금액 상향.

부 록

[부록1] 시·도별 소상공인 지원조직 현황

1. 유형별 검토(독립재단)

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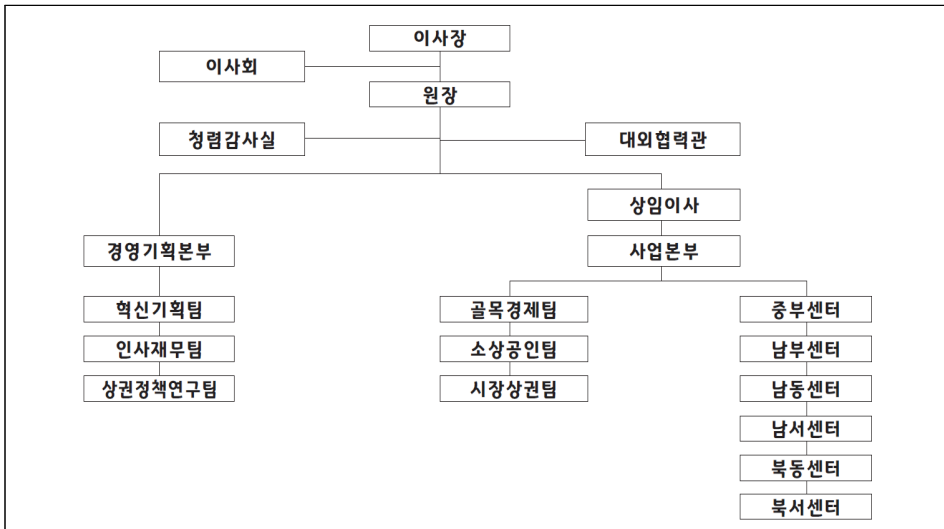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18년 8월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2019년 9월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출범하였으며,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합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 운영 현황

□ 조직 및 인력

- 조직구성은 2023년 기준 80명으로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본부가 1본부 3팀 6센터,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가 1본부 3팀으로 운영 중

(기준일: '23. 1. 31.)



자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

- 인력은 총 76명으로 임원 1명, 일반직 69명, 전문직 4명, 지원직 2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76	임원(1) 정규직(73) 비정규직(2)	임원(1) 일반직(73) 전문직(4) 지원직(2)

□ 주요 업무

- 경영기획본부에서 사업전략 수립과 상권분석을 수행하여 사업본부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운영

부서명		주요 업무
경영기획 본부	혁신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션·비전·전략목표 수립 및 세부전략 추진 • 효율적 조직운영 및 기관 발전방향 제시
	인사재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인재채용 및 인적 경쟁력 강화 •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복리후생 증진
	상권정책 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 상권정책·정책현안 연구 및 정보화 시스템 운영
사업본부	골목경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상권 공동체 및 매니저 지원 •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 운영
	소상공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생애단계별 지원사업 운영 • 소상공인 통합교육 및 혁신 소공인 육성지원
	시장상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 경기도형 상권진흥 모델발굴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회의소 운영 및 밀착형 현장지원 • 센터 관할 구역별 주요 사업추진

□ 예산

- 2023년도 예산은 433.4억원으로 경기도 출연금 287.3억원과 수탁사업 수입 132.7억원 등으로 구성됨

〈2023년도 세입·세출현황〉

(단위: 천원)

세입		세출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과목	예산액
총 계	43,341,630	총 계	43,341,630
사업	13,391,000	사업	30,227,000
수입	125,000	비용	16,561,000
자체수입 ¹⁾	125,000	사업비(출연금, 자체) ³⁾	16,561,000
사업수입 ²⁾	13,266,000	수탁사업비	13,266,000
수탁수수료	0	지원사업비 정산반납	400,000
사업외	29,128,020	사업외	11,729,510
수익	28,728,020	비용	11,605,510
도 출연금	28,728,020	기관운영비	11,605,510
지원사업비 정산반납	400,000	자본적지출	124,000
전기이월금	822,610	예비비	1,385,120

주: 1) 자체수입: 기금 및 기타자금운영(105,000천원), 푸드트레일러 자체수입(20,000천원)

2) 수탁사업(편성예정): 수탁사업수입(13종(세부사업 19종) 13,266,000천원)

3) 고유목적사업비: 도출연금사업(19종, 16,561,000천원)

자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

(2) 사업내용²³⁾

골목상권공동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공동체 조직 및 발달 단계별 지원 지역대학+임대인+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노후-희망” 등 상권공동체 중심 특성화 지원 정관 개정을 통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근거마련
소상공인 단계별 종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역량 강화로 실패 없는 성공 창업 유도 소상공인 실질소득 증대와 비용 절감 등 단계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숙련기반의 우수 소상공인 발굴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대표 브랜드 시장 육성, 상권 회생을 견인하는 특성화 지원 지역특화 콘텐츠 연계 등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사업추진 지원(경기시장매니저)
자영업자 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업 및 폐업예정자 충격완화 및 성공적 재기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재창업 성공률 향상

23)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

<p>'코로나 19' 극복 지속가능 모델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소비습관 고착화 대응을 위한 고객편의 플랫폼 운영 • 교육콘텐츠(비대면·온라인) 확대운영 • 온라인 등 디지털 판로지원 확대
<p>상권현황 연구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 조사기능 강화로 지역경제 컨트롤 타워 구축 •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영향 분석 시스템을 활용 → 과학적인 상권분석 정보 제공
<p>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및 경제 선순환 구축 • 경기지역화폐 내실화를 위한 홍보다각화 및 사용자 인식 개선 •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간편결제 도입 및 확대(장기)
<p>현장 중심의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촘촘한 현장지원 강화 • 권역별 상인회의소 운영 등 상인 간 거버넌스 거점 구축 • 지역별 특색을 감안한 상인 주도형 사업 모델 마련
<p>선진 경영인프라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협력 및 홍보 기능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회계 및 관리 구현 • 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사후평가 강화 등 외부고객만족도 제고 • 윤리 및 투명경영 내실화

(3) 2022년 주요성과²⁴⁾

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외식업 청년창업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단계별·실질적 창업패키지 지원

○ 청년사관학교 예비창업자 수요 중심의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종합지원체계: 역량진단(인터뷰 및 사전 간담회) -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창업역량평가 - 사업화 지원(홍보·인테리어 등)

□ 콜센터와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및 현장 맞춤형 지원

○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1:1 현장 컨설팅 진행

○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매출 및 점포 활성화 전략 등 컨설팅 종합지원 - 경영컨설팅 및 실태조사 등 1,963개사

2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

□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개선 및 현장 맞춤형 지원**

- 비상경제 상황 민생 특별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자부담금 경감 추진
 - 소상공인 자부담금 10% → 한시적 0%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 온라인 신청채널 고도화 및 현장 맞춤형 점포개선 컨설팅 진행
 - 신청 간소화 추진을 통한 편리성 및 현장중심 컨설팅을 통한 사업 만족도 개선

나. 소상공인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안정적인 폐업 및 재기 지원을 통한 충격완화와 재도전 발판 도모**

- 사업정리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분야별(창업, 금융, 심리, 경영, 직업) 전문 컨설팅 지원
 - 추진실적: 전문컨설팅 1,500개사 / 사업정리지원금 554개사(점포철거비 133개사, 재기장려금 421개사)
- 폐업소상공인 지원금 및 규모 현실화로 재기장려금 확대 지원
 - 추진실적: 재기장려금 1,913개사

□ **잠재력·기술력을 갖춘 도내 소공인 발굴로 지역산업 성장기반 마련**

- 숙련 기술과 아이템을 갖춘 소공인 특화기술 개발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구축

□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판로다각화 및 매출상승 도모**

- 전시회 참가비, 광고 수수료 등의 지원을 통한 판로 다각화 도모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 및 사업확장 기반 마련

다. 상권 특화요소 발굴을 통한 전통시장 新수요창출

□ 전통시장 내 점포 고객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소비자 유인

- 경쟁력 있는 점포를 경기도 대표 점포로의 육성을 통한 낙수효과 유도
- 상인회 필수 행정 인력 지원 통한 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 고객유입 촉진을 위한 특화요소 개발로 시장 브랜딩 및 상권활성화

- 시장(구역)별 환경개선 및 지하철 개통 등에 따른 상권 연결 거리디자인 조성
- 온라인마켓 거점 및 앵커스토어 점포 조성, 지역특화 플래마켓·야시장 운영 등

□ 전년도 사업성과 사후관리 및 신규사업 성과창출 제고

- 전년도 종료사업 사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으로 사업성과 확산 지원
- 상권진흥구역별 상권발전전략 및 연구용역 등 자생력 기반 마련, 자체 조직 (재단 설립, 협동조합, MOU 등) 설립 검토
- 상권영향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지원사업별 성과관리 및 정량적 수치 확보 노력

라. 골목상권 공동체 연차별 로드맵을 통한 체계적 상권지원

□ 골목형 상점가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골목 공동체 사업역량 축적

- 골목상권 공동체 연차별 사업추진 및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개별 소상공인 30명을 기반으로 구성된 골목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육성 (누계 376개소**)
 - * (1단계: 신규조직화) → (2단계: 공동체 성장지원) → (3단계 골목상권 특화지원)
 - ** 19년 203개소, 20년 102개소, 21년 46개소, 22년 25개소
 - 골목상권 판매·배달·유통을 통합 지원하는 고객센터 설치(2개소)등 소비 환경변화 대응

- 道 대표 우수골목상권을 선정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타 상권 확산 도모(19개소, 22년 시범)
 -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강화를 통한 골목형 상점가 등 지정: 총 18개소(전통시장 4개소, 상점가 4개소, 골목형상점가 10개소)

마. 업종별 맞춤형 교육 제공 및 실습위주 과정 확대 운영

□ 역량강화·현장적용성 중심의 소상공인 교육지원과정 질적 향상 추진

-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다각화 및 교육콘텐츠 운영

바. 코로나 19 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 역량 집중

□ 찾아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SOS 현장지원단」운영

- 도내 권역별 경영컨설팅,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 1:1 맞춤형 현장 종합상담 지원

□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코로나 19 위기극복 촉진

- 도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착한임대인 '혜택제공'

사.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동향 보고서 발간

□ 월간, 분기별, 연간 경기도 시군별, 업종별 소상공인 경제이슈 및 동향 보고서 발간

아. 경기지역화폐 정책 추진 집중 홍보를 통한 도민 인식 제고

□ 경기지역화폐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및 소통채널 구축

- 21년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재구축
 -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연계하여 다양한 홍보 창구의 허브역할 제공
 -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428,171개소) 찾기 기능 강화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한 가맹점 등록 플랫폼 구축 및 신규 오픈 (22.9.21.)

- ‘경기지역화폐 공식 SNS*’ 활용한 신속한 정보제공
 -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밀착형 콘텐츠 발굴로 공감대 형성 및 소통창구 확대
 - * ①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온라인 등록 방법, ② 경기도 축제·문화행사 안내, ③ 경기도의 맛 소개
 - 목표: 484건, 실적: 588건으로 121% 달성
- 전통시장·골목상권상인회 등 적극적 협력 및 콘텐츠 생산·확산 도모
 - 상인회 및 골목상권 중심 명절맞이 경기지역화폐 소비촉진 현수막* 홍보 적극 독려
 - * (22년 추석) 실적: 211개소 390개 게첨/ (23년 설) 실적: 171개소 352개 게첨
 - 경기지역화폐 주요 정책(① 가맹점 집중 등록, ② 시군별 인센티브 정책 수당, ③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신규 제작 및 배포) 발표 시점에 맞춰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기여

2. 유형별 검토(지역신용보증재단 위탁 유형)

1)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 자영업지원센터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는 4개 권역에 흩어져있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합해 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운영 형태로 개소함
 - 서울시가 2012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4개 권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위탁했으며, 2016년에는 4개 권역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로 개소함

(1) 운영현황

□ 조직 및 인력

- 자영업지원센터의 본점·지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포함하여 약 90여명 규모로, 자영업지원센터(8개 팀), 지역본부(25개 지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4개 팀)로 구성됨



출처: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검색일: 2023.5.20.)

○ 인력은 총 37명으로 일반직 10명, 전문직 16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37	정규직(26) 비정규직(11)	일반직(10) 전문직(16) (센터 내: 4, 지역본부: 12) 지원직(11)

□ 주요 업무

- 사업을 총괄·기획하는 사업기획팀, 세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운영팀과 4개 지역본부에서 창업자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지원

부서명	주요 업무
사업기획팀	• 사업 총괄·기획
사업운영팀	• 세부 사업 운영·기획
창업지원팀 (4개 지역본부별 창업지원팀 존재)	• 예비 창업자 상담/컨설팅

(2) 사업내용

- 창업준비부터 사업의 안정적 운영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창업자금, 멘토링, 정보제공, 사후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중임

구분	사업소개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창업 상담	• 창업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 예비창업자 •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컨설팅	• 사업계획 수립, 사업운영현황 점검, 상권 입지 분석 등 창업 전·후 1:1 컨설팅 지원	•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 이내 소상공인
자영업 클리닉	• 경영애로 해소 및 영입활성화 지원(경영지도, 전문지도)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현장 멘토링	• 성공사업자의 사업 현장체험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1:1 멘토링 기회 제공	• 예비창업자 • 서울시 소상공인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 빅데이터 기반으로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여 맞춤형 컨설팅 및 솔루션 이행을 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 고객 중 위기 징후가 포착되어 관할지점에서 사업 안내를 받은 서울시 소상공인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컨설팅, 솔루션 이행비용 300만원 지원	• 서울시 소재 중장년 소상공인

구분	사업소개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 대상 경영 진단과 컨설팅, 최대 3백만원이내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점포형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5년간 환급지원(분기별 지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사업	• 시설개선 비용 100만원 지원	• 25개 자치구 지역협의체를 통한 선정된 소상공인
지역밀착 종합지원사업	• 경영애로 해소 및 영업활성화 컨설팅 지원, 사업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자치구별 선발된 소상공인

자료: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국내 최초, '실사구시형' 소상공인 전문 연구 & 지원기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2019년 6월 설치됨

□ 조직 및 인력

- 조직도는 자영업지원센터와 동일함
- 인력은 총 20명으로 전문직 20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20	정규직(15) 비정규직(5)	일반직(0) 전문직(20) 지원직(0)

□ 주요 업무

- 소상공인 정책분야를 상권, 파산 등 팀으로 나누어 연구하며 상권분석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팀이 존재

부서명	주요 업무
정책 연구팀	• 정책 효과 분석 및 연구
상권 연구팀	• 골목상권 관련 연구
금융 연구팀	• 파산 등에 관련 연구
빅데이터팀	• 상권 분석 서비스에 사용될 데이터 수집 및 정제 • 기타 연구에 사용될 데이터 수집 및 정제

(2) 사업 내용

- 서울 내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과 지역밀착형 사업추진 우선
-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창업~성장~퇴로기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발전
- 지역밀착형 사업은 체계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
- 무분별한 창업과 특정업종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생활밀접 업종 과밀모형을 개선하는 등 지역상권분석 고도화
-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분석
 -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 및 업종, 상권별 정기적 실태조사와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미래 유망업종 및 소상공인 트렌드 분석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비롯해 소상공인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 상권지원센터

- 서울시 상권지원센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2022년 설치됨

□ 조직 및 인력

- 조직도는 자영업지원센터와 동일함
- 인력은 총 15명으로 일반직 12명, 지원직 3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15	정규직(12) 비정규직(3)	일반직(12) 전문직(0) 지원직(3)

□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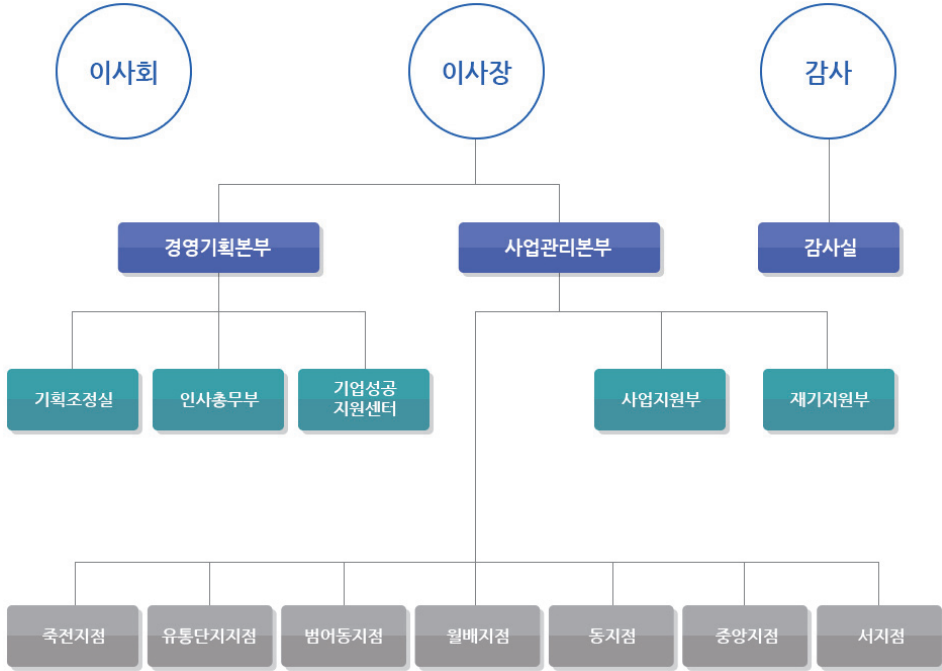
- 상권단위 지원과 개별 창업자 지원을 구분하여 팀을 구성하고, 전반적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팀을 설치

부서명	주요 업무
상권기획팀	• 상권 단위 경영 지원 사업 기획
골목창업팀	• 예비 창업자 교육 기획·운영
상권 르네상스팀	• 상권 르네상스 사업 -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 테마구역 설계·운영 등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도모

2)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출연기관인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성공을 돕기 위해 2017년 11월에 설립
 - 2021년 위치를 이전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성공지원센터 명칭을 기업성공지원센터로 변경

□ 조직 및 인력



자료: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인력은 총 8명으로 일반직 6명, 지원직 2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8	정규직(6) 비정규직(2)	일반직(6) 전문직(0) 지원직(2)

□ 주요 업무

○ 창·폐업 교육, 컨설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

부서명	주요 업무
기업성공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수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 소기업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 소상공인 햇살론 업무 • 명사초청 강연회 • 경영자문/폐업지원 컨설팅

(2) 사업 내용²⁵⁾

교육	CEO경제 아카데미	• 경영전략, 마케팅, 산업시찰 등 CEO 역량강화 교육
	유망예비창업자 창업교육	• 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미만 사업자 대상으로 창업 전반 교육
	맞춤형교육	•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
	소셜네트워크(SNS) 교육	•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SNS 종류, 활용방법 등 실전 교육 제공
	재기지원교육	• 사업실패자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
컨설팅	경영자문·폐업지원 컨설팅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25) 대구신용보증재단 홍보 리플렛

(3) 사업 성과²⁶⁾

가.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 현황

□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계획 대비 추천 실적

(단위: 건, 백만원, %)

자금구분	2022년 9월말 실적				2021년			
	추천계획	건수	금액	추천율	추천계획	건수	금액	추천율
소상공인지원자금	179,000	3,840	174,221	97.3	196,000	5,733	194,602	99.3
일반창업자금	225,000	806	222,621	98.9	211,000	880	208,281	98.7
성장기업자금	773,000	1,888	755,923	97.8	647,900	1,770	635,441	98.1
명절경영안정자금	100,000	426	98,790	98.8	45,100	295	44,937	99.6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0	58	19,836	99.2	50,000	212	49,721	99.4
수출기업지원자금	36,000	47	33,660	93.5	50,000	67	50,000	100.0
중견기업지원자금	27,000	7	27,000	100.0	50,000	14	50,000	100.0
소상공인임차료자금	40,000	1,155	39,999	100.0	78,500	2,737	77,778	99.1
중저신용지원자금	60,000	3,278	59,274	98.8	21,500	1,225	20,949	97.4
일상회복드림자금	30,000	2,320	23,200	77.3	-	-	-	-
희망플러스지원자금	-	-	-	-	40,000	3,840	38,400	96.0
소 계	1,490,000	13,825	1,454,524	97.6	1,390,000	16,773	1,370,109	98.6
유망창업자금(신보)	5,000	15	4,990	99.8	5,000	18	4,580	91.6
기술형창업자금(기보)	5,000	39	5,000	100.0	5,000	26	4,810	96.2
총 계	1,500,000	13,879	1,464,514	97.6	1,400,000	16,817	1,379,499	98.5

□ 대구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 계획 대비 추천 실적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추천계획	추천		추천율
		건수	금액	
2021년	55,000	53	56,949	103.5
2022년 9월말	55,000	56	58,877	107.0

26) 대구광역시의회, 2022년도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부록)

나. 교육 및 컨설팅

□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교육 및 컨설팅 실적

(단위: 회, 명)

구분	내 용	2022년 9월말		2021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교육	유망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재기지원교육, CEO 경제아카데미 등	8	130	11	201
컨설팅	경영자문, 폐업지원 컨설팅 등	137	413	126	426
합 계		145	543	137	627

다. 이동보증재단 현장보증팀 보증 상담 실적

(단위: 회, 명)

구 분	2022년 9월말		2021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전통시장 및 상가밀집지역	10	314	12	120
민생안정 현장상담	10	35	-	-
기업애로 방문상담 등	4	38	-	-
합 계	24	387	12	120

※ 기타지원: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1회(하반기 1회 예정)

3)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 울산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는 울산시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2019년 2월부터 운영

□ 조직 및 인력



출처: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인력은 총 5명이며 일반직 5명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5	정규직(5) 비정규직(0)	일반직(5) 전문직(0) 지원직(0)

□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경영 아카데미 사업 •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

(2) 사업 내용²⁷⁾

□ 창업·경영 아카데미 사업

- 창업절차, 마케팅, 세무·재무 전략, 업종별 전문과정, 온라인 마케팅 실습 등
 - 소요예산: 100백만원
 - 총 목표: 510명 (과정별 정원 30명 × 17회(年) = 510명)

구 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실습과정	합 계
횟수	4회	4회	9회	총 17회
인원	120명	120명	270명	총 510명

□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

-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들을 현장에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소요예산: 100백만원
 - 총 목 표: 170개 업체 (SOS컨설팅 150개 업체 + Jump-up컨설팅 20개 업체)

구 분	“SOS” 경영컨설팅	“Jump-Up” 경영컨설팅
지원목표	150개 업체	20개 업체 * 사후관리
컨설팅일수	3일 이내	1일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 옥외광고물 제작, 인테리어 공사, 영업시설 교체, 홍보·광고 등 경영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소요예산: 400백만원
 - 총 목 표: 160개 업체

27) 울산광역시의회, 2022.7.19, 제23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울산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운영계획

- 비대면 소비 시대에 대응한 배달 중심의 판로전환 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 홍보·광고비 등을 지원
 - 소요예산: 180백만원
 - 총 목표: 160개 업체

□ 남구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및 환경개선 사업

- 소상공인 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으로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옥외광고물 제작, 인테리어 공사, 영업시설 교체, 홍보·광고 등 경영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소요예산: 300백만원
 - 총 목표: 100개 업체

(3) 사업 성과²⁸⁾

□ 연도별 창업·경영 아카데미교육 지원사업 실적

(단위: 개사,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5월 말
지원목표	1,080	125 ^{주)}	625	510
지원실적	1,133	132	641	205
목표 대비 달성률	105	106	103	40

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을 취소, 월 3회(기본·전문·실습과정)에서 1회(실습과정)로 축소 운영

28) 울산광역시의회, 2022.7.19, 제23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울산신용보증재단))

□ 연도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실적

(단위: 개사,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5월 말
지원목표	200	160	170	170
지원실적	223	160	206	80
목표 대비 달성률	112	100	121	47

□ 연도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실적

(단위: 개사,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5월 말
지원목표	100	152	120	160
지원실적	116	168	120	50
목표 대비 달성률	116	111	100	31

□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 실적

(단위: 개사, %)

구 분	'20년	'21년	'22년 5월 말
지원목표	실적없음 ※ 2021년 신규사업	160	160
지원실적		162	24
목표 대비 달성률		101	15

□ 연도별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실적

(단위: 개사,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5월 말
지원목표	실적없음 ※2021년 신규사업	105	100
지원실적		107	1
목표 대비 달성률		102	1

4)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 경남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내의 기업지원부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운영 중

□ 조직 및 인력



출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인력은 총 11명 내외로 일반직 8명 내외, 전문직 3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11~12	정규직(8~9) 비정규직(3)	일반직(8~9) 전문직(0) 지원직(3)

□ 주요 업무

○ 컨설팅, 멘토링 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지원

부서명	주요 업무
기업지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사업 • 컨설팅 • 멘토링 • 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지원

(2) 사업 내용²⁹⁾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

구분	사업명	지원목표	
Track 1. 성공도약드림	교육지원	예비창업자 4회	500명
		기존소상공인 13회	
		온라인마케팅 4회	
Track 2.	창업지원	100개소	
	성장지원	350개소	
	소계	450개소	
Track 3.	폐업·재도전 지원	150개소	
합 계		600개소	

□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호망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의 30%, 3년간 지원	1,100명
산재보험료 지원	산재보험료의 최대 50%, 3년간 지원	600명
합 계		1,700명

29) 경남신용보증재단, 2022,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업계획

(3) 사업 성과

□ 소상공인 희망드림패키지³⁰⁾

○ 사업비: 920백만원

(단위: 개소, %)

지원규모		접수	완료	합계	달성률
경영밀착	창업지원(100)	17	74	91	91.0
	성장지원(380)	95	270	365	96.1
		판로지원	70	68	
소계(480)		112	344	456	95.0
리스트ार्ट	폐업 및 재도전자원(100)	28	86	114	114.0
	폐업지원	27	78	105	
계(580)		140	430	570	98.3

□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 사업비: 50백만원

○ 사업내용: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단위: 명, %)

구분	사업계획		지원현황		달성도 (지원실적 기준)
	교육횟수	지원규모	교육횟수	지원실적	
예비창업자	4	100	4	120	120.0
소상공인	16	400	13	404	101.0
계	20	500	17	524	104.8

□ 반올림 컨설팅

○ 사업비: 120백만원

30) 경상남도의회, 2022.11.10.,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경남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성과 기준일: 2022.09.30.)

○ 지원내용: 수요자 맞춤형 전문 컨설팅 최대 5 회

(단위: 개소, %)

지원규모	접수	완료	합계	달성률
150	30	86	116	77.3

□ 함께가게 멘토링

○ 사업비: 30백만원

○ 지원내용: 성공사업주의 멘토링 5회 이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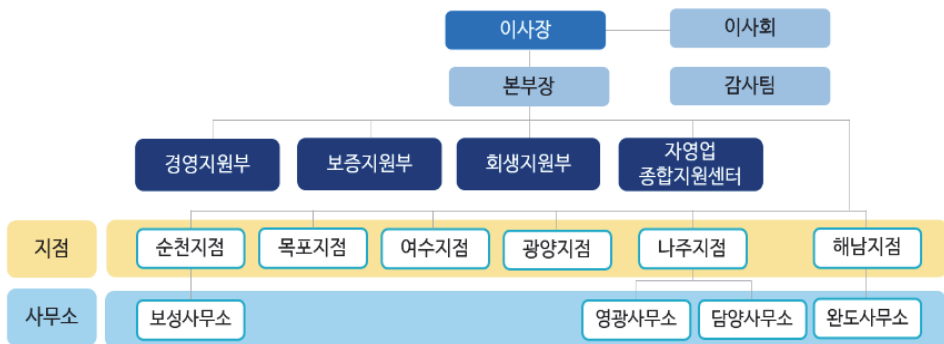
(단위: 개소, %)

지원규모	접수	완료	합계	달성률
20	4	12	16	80.0

5) 전남신용보증재단 자영업종합지원센터

○ 전남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2018년 8월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운영 중

□ 조직 및 인력



출처: 전라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호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 인력은 총 5명이며 일반직 5명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5	정규직(4) 비정규직(1)	일반직(5) 전문직(0) 지원직(0)

□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자영업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종합지원(교육, 컨설팅, 멘토링) • 불공정피해상담

(2) 사업 내용³¹⁾

□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으로 경영 노하우, 신사업 관련 트렌드 공유
 - 마케팅, 세무, 노무, 고객서비스, 신용관리 → 과목별 주 1회 실시
- 비대면 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택트 교육 제공
 -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접근성 확대 및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Skill-up 실습 프로그램

- 이론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난 업종별, 수준별 실습 교육 제공
 - 한식, 커피·디저트 등 메뉴 개발
 - 소상공인 제품 홍보영상 제작 (유튜브, 인스타그램, 동영상)

□ 컨설팅

-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애로 진단 및 솔루션 지원
 - 마케팅, 메뉴개발, 고객관리, 세무·노무 등 사업운영 지원
- 전담직원의 사후 점검을 통해 컨설팅 과제 이행 확인 및 성과측정

31) 전라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호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 멘토링

- 도내 성공사업자와 연계하여 경영 노하우 및 성공비법 전수
 - 도내 소상공인 중 업종·지역별 경영멘토단 구성
 - 레시피 개발, 점포운영, 매장관리 등 현장감 있는 실전경험 전수

□ 리마인드 컨설팅·멘토링

- 컨설팅·멘토링 수요업체 대상 과제 이행에 대한 피드백 및 경영 개선
 - 기존 미진한 부분 피드백 및 새로 직면한 경영애로 솔루션 제공

□ One-Stop 비즈니스

- 「온라인 비즈니스」교육 및 전문 컨설팅 원스톱 지원
 - (교육) 온라인마케팅, 세무, 노무, 고객관리 등
 - (컨설팅)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스마트스토어, 홈페이지 구축 및 SNS 마케팅 등 1:1 전문 코칭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운영

- 불공정거래(가맹사업,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불공정약관, 임대차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 지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피해 해결

□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지자체 위탁사업)

-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컨설팅-멘토링 제공
 - 지자체 사업목표와 요구사항에 부합한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22년) 전라남도 창업교실, 광양시, 무안군 위탁사업 추진

(3) 사업 성과³²⁾

(단위: 명, 건, %)

사업명	'21년	'22년 9월			
		연간계획	실적	달성률	
고유사업	소상공인 교육	1,990	1,800	1,729	96.1
	Skill-up 실습 프로그램*	-	80	90	112.5
	컨설팅	385	386	376	97.4
	멘토링	73	60	54	90.0
	리마인드 컨설팅·멘토링	10	10	10	100.0
	One-Stop 비즈니스	125	80	145	181.3
	불공정피해상담	20	20	13	65.0
지자체 위탁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136	70	130	185.7
합계		2,739	2,506	2,547	101.6

3. 유형별 검토(지역경제통상진흥원 위탁 등 기타)

1)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위탁했던 소상공인희망센터와 부산경제진흥원 부서 민생경제팀을 통합하여 부산경제진흥원에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위탁, 2022년 7월 개소함

□ 조직 및 인력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 지원단 내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두어 운영

32) 전라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호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출처: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인력은 총 19명으로 일반직 명, 전문직 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19	정규직(6) 비정규직(13)	일반직(19) 전문직(0) 지원직(0)

□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장비 대여 - 디지털 전환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 유망 소상공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업종 공동·특화마케팅 - 디자인 품질개선 및 지식서비스 지원 - 스타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지원 • 매출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배달앱 동백통 운영 -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지원 • 수제맥주 마스터스 챌린지 개최 • 경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서비스 지원

부서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경영전략 컨설팅 - 소상공인 통합교육 - 사업정리 도우미

(2) 사업 내용

□ 온라인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선 및 서비스 품질개선 지원
 - 사업목적: 디자인 및 지식서비스 개선지원을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
 - 사업내용: 소상공인과 지역전문가 매칭 및 디자인 개발, 지식서비스 지원
-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온라인마케팅 비용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부담완화
 - 사업내용: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업체당 500천원 이내) → '23년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출 소상공인 대상

□ 경영개선 교육 및 컨설팅

- 소상공인 통합교육
 - 사업목적: 소비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실무교육 및 역량강화
 - 사업내용: 소상공인 희망아카데미, 디지털마케팅 실무교육, 전문가(명사) 특강
- 경영전략컨설팅
 - 사업목적: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소상공인 문제 진단 및 솔루션 제공
 - 사업내용: 경영, 마케팅, 법률·노무, 세무·회계 등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및 권익보호
 - 사업내용: 무료 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등

□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사업정리도우미 운영

- 사업목적: 안정적 사업정리와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폐업 충격 완화
- 사업내용: 폐업 예정 업체 대상 사업정리 도우미, 철거비용 지원

○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

- 사업목적: 생계를 위해 휴식 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장사하기 좋은 행복한 부산 구현
- 사업내용: 소상공인 건강검진비용 지원

○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

- 사업목적: 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편입 활성화
- 사업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납부보험료의 30%,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 납부보험료의 30~50% 지원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지원

- 사업목적: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의 공동체 조직화로 15분 생활권 소비자 유치 및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주체로서의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조직화 지원: 전담매니저 골목상권 공동체 발굴 및 조직화 유도
 - 기본 패키지: 역량강화, 인식개선 교육, 골목발전 컨설팅, 방역물품 지원 등
 - 성장 패키지: 브랜드 발굴, 공동마케팅, 지역대학 협업, 리빙랩 운영 등

○ 부산다운 골목도움 지원

- 사업목적: 개성, 다양성, 삶의 질이 조화된 머물고 싶은 골목의 브랜드化
- 사업내용: 골목상권공동체 중 지역자원 연계 발전가능성 있는 골목 발굴, 지원

-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지원
 - 사업목적: 대학생 아이디어와 소상공인 현장 노하우를 접목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자립화 기여
 - 사업내용: 골목 소상공인과 대학생 1:1 매칭, 소상공인 경영지원 활동

□ 업종특화 및 혁신소상공인 육성

- 유망업종 공동·특화 마케팅
 - 사업목적: 지역 유망업종 발굴 및 육성으로 업종별 동반성장 유도
 - 사업내용: 신규 유망업종 발굴 및 선정, 브랜드 리뉴얼 등 특화 마케팅
- 소상공인 업종 해결사 지원
 - 사업목적: 업종개선 솔루션 제공을 통한 골목상권 회복
 - 사업내용: 업종별 전문가가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스타소상공인 지원사업
 - 사업목적: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 선정하여 선도모델로 육성
 - 사업내용: 스타 소상공인 10개사 선발, 성장패키지 지원
- 부산수제맥주 마스터스챌린지 개최
 - 사업목적: 수제맥주업체 판로지원 및 자체 브랜드 홍보의 장 마련으로 부산 대표 브랜드 육성
 - 사업내용: 수제맥주 품평회, 수제맥주 쇼케이스, 팝업스토어 등

□ 소상공인 역량 강화

-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운영
 - 사업목적: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진출과 디지털 전환 지원
 - 사업내용: 소상공인 디지털 비즈니스 역량 강화,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지역 특화사업 연계 디지털 커머스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배달앱 동백통 활성화

- 사업목적: 유통환경과 소비패턴 변화(온라인 매출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의 대응력 제고 및 온라인 판로 확대
- 사업내용: 가맹비·광고비·중개수수료 무료로 운영되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 관리 및 활성화 추진

□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지원

- 사업목적: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구축한 제로페이 도입 및 인센티브 발굴을 통한 이용확산
- 사업내용: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대로 인하를 위한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유도

(3) 사업 성과³³⁾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15기 48명 양성

○ 체험점포 운영 및 사업화 지원

- 꿈이룸 점포 범일점 입점(24명), 사업화 지원금 42명 지급

지 원 내 용	목 표	실 적
교육생 양성	50명	48명(접수 99명)
교육과정 수료	80% 이상	100%(48명 전원)
교육과정 운영	6주 50시간 이상	7주 60시간

33) 부산시의회, 2022.1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록(부산경제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소상공인 통합교육 운영

○ 소상공인 통합교육 운영: 17회, 469명 참여

지 원 내 용	목 표	실 적
소상공인 희망 아카데미	9회, 216명	7회, 204명
디지털 마케팅 실무교육	14회, 296명	8회, 164명
명사 특강	3회, 200명	2회, 101명

□ 소상공인 경영전략 컨설팅

○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100개사 지원

□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 소상공인 법률 전문위원 31인 위촉

- 부산지방변호사회 20명, 한국공인노무사회 2명, 대한가맹거래사협회 2명, 부산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명, 부산지방세무사회 1인

지 원 내 용	목 표	실 적
법률상담 서비스	400건	220건
분쟁지원금	10건	1건

□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

○ 지역별 소상공인 건강검진 거점병원 지정(16개 구·군, 18개 기관)

지 원 내 용	목 표	실 적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400개사	400개사

□ 영세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지 원 내 용	목 표	실 적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1,100명	1,351명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500명	452명

□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

-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지 원 내 용	목 표	실 적
점포 철거 컨설팅 지원	30건	30건
점포 철거비용 지원	30건	30건
재취업, 재창업 지원	87명	33명

□ 부산형 착한임대인(장기안심상가) 홍보 운영

- 홍보영상 제작 및 지하철 역사 내 PDP 등 송출
- 홍보 현수막 제작·설치 완료
- 포스터, 리플렛 제작 및 지자체, 관계기관 배송·게시
- 부산시 내 주요상권지역 오프라인 방문홍보 진행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 디지털커머스 지원: 총 276개사

지원내용	목표	실적
(초기단계) 디지털커머스 역량강화	110개사	23개사
(실행·판매단계) 라이브커머스 및 제품촬영	570개사	153개사
(기관 연계사업) 특가 판매전 등	160개사	100개사

□ 소상공인 브랜드 및 지식서비스 품질개선 지원

- 소상공인 디자인·브랜드 개선 239건 지원
 - 디자인 223건, 세무회계 16건 지원

□ 공공배달앱(동백통) 운영

- 공공배달앱 '동백통' 부산전역 출시 및 운영('22. 01. ~)
 - 가맹점 모집 및 입점, 홍보이벤트/프로모션별 추진, CS센터 운영 등

- 동백통 출시 후 가맹점 확대 및 서비스 안정화 추진(계속) ※ '22. 9. 27 기준
 - 가맹점 7,141개(음식점 6,709, 전통시장 168, 중소기업 264), 매출누계액: 26.2억원

□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운영**

- 제로페이 부산 상품권 115억원 발행
 - 발행액 중 67.4억원 판매, 31.7억원 결재

□ **온라인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지원: 1,100개사 지원(신청접수 744건)

□ **참고정보연계시스템 운영**

- 시스템 구축 및 지역 창고 76개소 DB 구축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귀금속 소공인 역량강화, 마케팅 등 지원

지 원 내 용	목 표	실 적
소공인 특화교육 운영	6개 과정(62명)	3개 과정(55명)
제품 마케팅 지원	80개사	30개사
공동 인프라 운영	30개사 지원	30개사 지원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골목상권 활성화 대상지 10개소 모집(9. 1.~9. 30.)
-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42팀 운영

□ 유망업종 소상공인 공동·특화마케팅 지원

- 유망업종 선정(반려동물 수제간식) 및 관련 소상공인 16개사 지원
 - 공동 특화 마케팅 12건, 플리마켓 판매전 1회 개최

□ 스타소상공인 발굴·지원

- 스타 소상공인 10개사 선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음식점업 3개사, 도소매업 3개사, 제조업 4개사 선정

□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 밀키트 및 HMR 전환 관련 6개사 지원

지 원 내 용	목 표	실 적
22년도 신규업체 선정	7개사	6개사
밀키트 전환 컨설팅 지원	18회	12회
시제품 개발 지원	7개사	-

□ 수제맥주 마스터즈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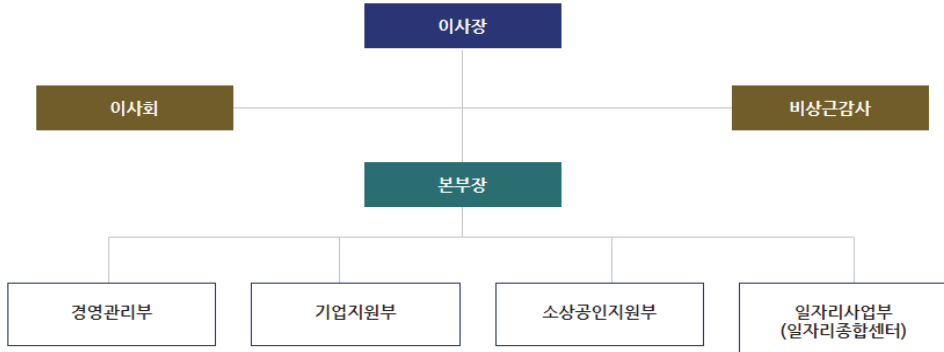
- 부산 수제맥주 마스터즈 챌린지 개최(9. 23.~25. / 자갈치시장 물양장)
 - 부산 수제맥주 및 부대행사 등 총 106,930천원 판매

수제맥주 참가 업체	총 판매실적			방문자 수
	비어가든	플리마켓 및 부대행사	계	
9개사	61,280천원	45,650천원	106,930천원	약 13,000명

2)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 광주시에는 별도 위탁 없이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내 소상공인지원부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운영 중

□ 조직 및 인력



자료: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 인력은 총 8명으로 일반직 4명, 지원직 4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8	정규직(4) 비정규직(4)	일반직(4) 전문직(0) 지원직(4)

□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소상공인지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주치의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 소상공인 신규인건비 지원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 임대료 지원 • 광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 • 양동전통시장 상권르네상스사업 • 중소기업 온라인입점 지원 • 빚고을론 이자 지원 •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 빚고을론 •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2) 사업 내용³⁴⁾

-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 사업내용: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지원대상: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내용: 2023년 1~12월 부과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지원
 - 지원대상: 광주 소재 고용·산재보험에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중 고용·산재 보험료 전액지원(최대 3년)
 -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운영
 - 사업내용: 소상공인의 문제해결 창구로써 맞춤형 컨설팅(전문·종합·현장 컨설팅)
 - 제공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 사업내용: 유망아이템을 지닌 우수 소상공인 및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교육·사업화·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광주 소재 가맹본부 및 소상공인
- 광주 공공배달앱 운영
 - 사업내용: 낮은 중개수수료와 지역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배달앱 제공
 - 지원대상: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비자

34)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계간기 겨울호, 2022.2 (2023년도 분야별 사업소개)

- 중소기업 온라인 입점 지원
 - 사업내용: 국내 유망 온라인몰 할인 프로모션진행,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광고·홍보지원 등
 - 지원대상: 온라인몰 입점을 희망하는 광주 소재 제조업체
-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활성화
 - 사업내용: 제로페이 가맹점 및 소비자 유인확대를 위한 제로페이 신규가맹점 대상 이벤트 진행 및 온·오프라인 홍보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3) 사업 성과³⁵⁾

□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운영사업

- 컨설팅 지원현황

(단위: 건)

구분	전문컨설팅	종합컨설팅	현장컨설팅	지원정책 안내 등
상담건수	157	150	293	730

- 유관기관: 광산구청 등 126개 기관 방문 홍보
- 상인회: 총장로상인회 등 27개 전통시장 방문 홍보

□ 광주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

- 광주공공배달앱 가맹점 및 매출현황

구분	가맹점수	매출액	거래건수
실적	7,867개	10,035백만원	387,796건

□ 광주 대표음식 브랜드화 육성 지원

- 광주대표음식 취급업소 영업컨설팅(22개사)
- 오매광주 사이트 대표음식 소개 리뉴얼 및 맛지도제작(6,500부)

35) 광주시의회, 2022.1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2022 업무현황 보고(실적기준일: 2022.9.30.))

○ 대표음식 홍보 이벤트(온·오프라인 각 1회) 운영완료

○ BI삽입 현판 제작 및 설치완료(29개사)

□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

○ 승인현황: 카페감미 등 260개 업체, 332명 승인

○ 지원현황: 오성기확인쇄 등 256개사, 1,510백만원 지급완료

□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신청현황: 동인FA 등 133개사, 164명 신청

○ 승인현황: 세미디자인 등 103개사, 132명 승인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신청현황: 도윤과외교실 등 347개사 신청

○ 지원현황: 고용보험225개사19,117천원/ 산재보험93개사7,866천원

□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 교육지원: 프랜차이즈 입문자과정 갖포호사 등 20개사 수료

○ 사업화지원: 행파 등 5개사 선정, 시스템구축 등 사업화개발 진행

○ 마케팅지원: 서울깍두기 등 4개사 선정, 홍보물 제작 진행

□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 역사문화공간 조성

- 역사스토리벽화 조성 및 문화거점공간 조성

○ 시장음식 특성화 사업

- 테마음식 핵점포 추진, 공유주방 및 공유카페, 옥상정원 및 음식점 조성

○ 양동큰장 페스티벌

- 양동큰장축제, 홍보, 시장특성별 소축제 운영
- 상설공연, 버스킹 이벤트홀 공연물 기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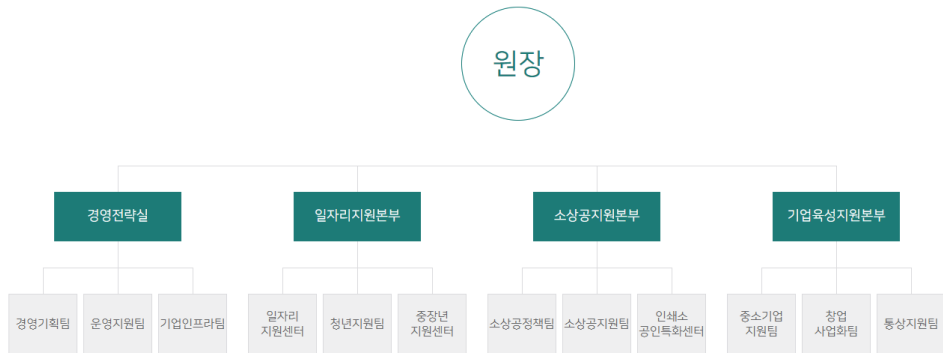
□ 중소기업업 구조 개선자금 지원

- 승인업체/금액: 32건/17.7억원(2022. 9. 30. 기준)
- 대출실행/금액: 9건/4.5억원(2022. 6. 30. 기준)

3)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본부

- 대전시에는 별도 위탁 없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내 소상공인지원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운영중

□ 조직 및 인력



- 인력은 총 13명이며, 일반직 13명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13명	정규직(9) 비정규직(4)	일반직(13) 전문직(0) 지원직(0)

□ 주요 업무

-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화 지원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정책팀, 컨설팅, 사업비용 지원 등 사업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지원팀, 소상공인지원 공단의 소공인특화센터 사업을 운영하는 인쇄소공인특화센터팀으로 구성됨

부서명	주요 업무
소상공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민생경제 분석서비스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 - 행안부·대전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운영 - 상권 데이터 수집·환류·현행화 등 •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개발 및 고도화) 상품개발 및 상품생산에 대한 공정 개선 등 - (브랜드 지원) BI,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컨셉 등 개발 지원 - (판로지원) 새로운 브랜드명을 갖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 (홍보지원) SNS, 인스타 파워 블로거 등 연계 전국 홍보 •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법률 종합상담 - 분쟁조정 및 소송시 전문가 선임비용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운영 • 대전형 유급평가 지원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지원 신규사업 발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컨설팅 운영 • 자영업닥터제 운영 • 우수 소공인 오픈마켓 운영 • 소상공인 성장자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 온통 행복한 대전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브커머스 전용 플랫폼(라이브 대장)을 통한 방송 판매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육성 시범사업 •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 및 정부행사(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과 연계한 소비 진작행사 추진 - 지역업체 전용 온라인몰 할인이벤트 및 오프라인 이벤트

부서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온라인몰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수수료 지원 - 할인 이벤트 지원(신규구매 지원, 재구매 지원, 가치소비 지원, 배달료 지원) - 홍보지원(뉴미디어 홍보 전략, 유관단체 홍보 강화) •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 문화공연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SNS 홍보 내부활동가 육성
인쇄소공인특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디자인 역량강화, 스마트 교육 • 컨설팅 지원사업 • 인쇄기술기반 소공인 협업 지원 • 맞춤형 인증 획득 지원(특허, ISO 인증 등) • 디자인 품질향상 지원(디자인 서체 및 이미지 소스 등 구매 지원) • 공용장비(컬러디지털인쇄기) 활용지원사업 • 공동창고 운영

(2) 사업 내용³⁶⁾

□ 차별화된 대전형 소상공인 정책 추진

-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대전형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으로 민생경제 활력 촉진
 -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6대 추진전략, 27개 정책과제 발굴(740억원)
 - 경영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경영서비스 고도화 등 신규 사업(17개) 추진
- (민생경제 분석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 및 전문 컨설팅 제공
 - 상가업소 DB, 매출데이터, 소득정보, 인구데이터, 임대시세 등 데이터 구축·개방
 - 원스톱 소상공인 지원 창구 및 맞춤형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제공
-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의 문화와 창의적 콘텐츠로 대표 골목상권 육성
 - 기 조성 골목상권의 상인회, 조합, 법인 등 지원(10억원 / 개소당 1~2억원)
 - 골목길 혁신가를 통한 차별화된 상권 발굴·조성(1.5억원 / 개소당 0.5억원)

36) 대전광역시의회, 2023.2.6,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과학국))

- (맞춤형 특례보증 시행) 3高(금리·물가·환율)위기의 소상공인 선제적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경영부담 완화(2,000억원)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시행(1,700억원)
- (잘나가는 동네 상권 조성)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상권 조성
 - 소비환경변화에 신속 대응을 위한 경영 활성화 공간(가칭소상공인복지회관 등) 조성(60억원)
 - 동네상권 육성을 위한 상권이미지 개선·지역특화·경영개선사업 추진(20억원)
- (생활경제 플랫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카드 활용, 생활경제 서비스 지원 강화
 - 전통시장 특화몰, 라이브커머스몰 등 지역사랑상품권앱 연계로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
 - 정책적 발행 활성화, 시정 직접지원시책 전달 창구로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기능 전환

□ 성장과 혁신으로 자생력을 갖춘 강한 소상공인 육성

- (디지털 역량강화) 비대면 소비·유통 환경변화에 대응 디지털 전환 적극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추진(0.2억원)
 -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추진(3억원)
- (성장·판로지원) 경쟁력 중심의 소상공인 혁신 성장 집중 지원
 - 우수 상품 보유업체 발굴 및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오픈마켓 운영(2억원)
 - 유망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으로 골목상권 브랜드 가치 향상과 매출증대 제고(2억원)
 - 창업 트렌드 정보 및 컨설팅 등 준비된 창업을 위한 ‘창업박람회’ 개최(0.7억원)
 - 자영업 닥터제 확대로 컨설팅 및 시설개선, 금융지원 등 맞춤형 종합 지원(20억원)
 - 인쇄 및 금속가공, 기계장비소공인 공동인프라(공용장비, 창고 등) 지원(4.2억원)
- (사회안전망 강화) 영세 소상공인의 건강권 보호 등 생업 안전망 확충
 - 1인 영세 자영업자의 입원 진료시 유급병가 수당 지급 (최대 11일)
 - 인건비, 고용·산재 보험료, 노란우산공제가입장려금, 법률서비스 등 경영 지원(31.8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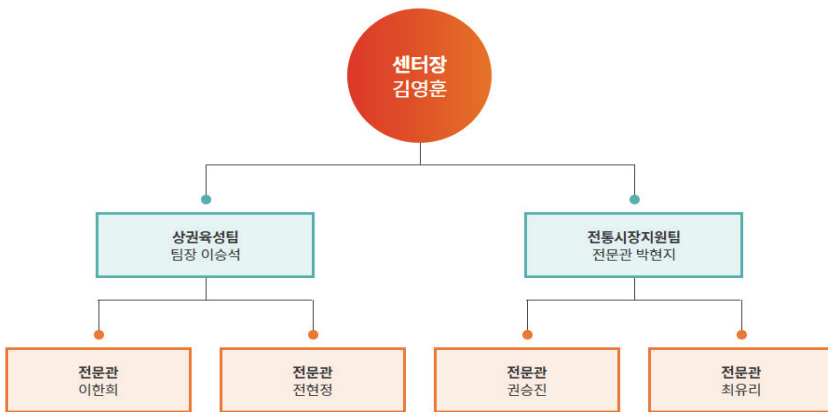
□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대 및 경영서비스 고도화 경쟁력 강화**

-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 시설환경 개선 및 안전망 확보로 상권 활성화
 -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아케이드 폭염 저감시설, 안심 판매대 등 210억원)
 -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진단(28개 전통시장 / 2.1억원)
- (전통시장 경영서비스 고도화) 유통·소비환경 변화 신속 대응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상인역량 강화 지원(5억원)
 -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구축(전담인력 배치 및 홍보 강화 / 2.5억원)
-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각종 축제(0시 축제, 7일간의 동행축제 등) 연계 시장별 소비촉진 이벤트(10억원)
 -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수립 연구용역('23. 2월 완료), 활성화 전략 마련

4) 강원도경제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

- 강원도는 별도 위탁없이 강원도경제진흥원 내에 상권활성화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운영 중

□ **조직 및 인력**



출처: 강원도상권활성화센터 홈페이지

○ 인력은 총 7명으로 일반직 7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7	정규직(7) 비정규직(0)	일반직(1) 무기직(6) 전문직(0) 지원직(0)

□ 주요 업무

○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상권육성팀, 전통시장을 전문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지원팀으로 구분

부서명	주요 업무
상권육성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사업 컨설팅 • 라이브커머스 운영 • 명동상권 활성화 • 강원형 골목상권 조성 사업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포럼 • 지출예산회계 및 계약업무 • 홈페이지 및 SNS관리
전통시장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운영 • 전통시장 특화사업 지원 등 • 주말 야시장 조성 및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 판매대 제작 지원(10대 이내) - 야시장 디자인개선 및 환경조성, 교육지원 • 약자지킴 전통시장 마케팅 • 제로페이 이용활성화 홍보지원 • 공유점포 운영관리

(2) 사업 내용³⁷⁾

□ 강원도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 전통시장 대표(우수)상품 및 지역 농·산물 홍보, 전시·판매
- 회차별 30점포 내외 직거래 장터 운영(회차별 2~3일 운영)

37) 강원도상권활성화센터 홈페이지(http://gwmarket.or.kr/bbs/content.php?co_id=1_3)

- 현장컨설팅: 점포진열(VMD) 개선지원, POP지원 등
- 도내 생산자단체 연계 직거래 장터 공동개최 등

○ 지원내용: 장소제공, 판매부스 및 전기시설 등 설치 지원

□ 약자지킴 전통시장 마케팅

- 문화행사지원: 대상시장 시군자체 선정(1시군 1시장)
 - 지역축제, 문화, 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 시군(시장)
 - 대상시장 시군자체 선정(1시군 1시장)
- 마케팅 특화지원: 공모사업
 - 시장홍보를 위한 영상제작 및 연계행사 등 마케팅 지원

□ 야시장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주말야시장으로 매주 주말운영 → 금, 토, 일요일 야간 운영
- 지역주민(주부, 청년, 시니어 등)의 참여 공간 제공으로 상생 협력의 어울림 공간으로 운영
- 이동식 판매대 등을 제작 운영하여 수공예품, 즉석요리 등 판매
- 문화공연 및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 유입 촉진으로 시장 활성화

□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 라이브커머스 방송(강원더몰, 네이버 쇼핑라이브 등)을 통한 상품 홍보 및 판매지원
 - 상품소개 및 시연 등 진행을 위한 쇼호스트 지원
 - 상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디자인 제작
 - 제품 판매 촉진 기념품 및 할인비 지원 등

□ 강원형 골목형상점가 육성

- 골목형상점가 고유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개선
 - 지역적 특색과 연관된 컨셉 및 테마 개발
 -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브랜드화를 통한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

- 마케팅 콘텐츠 발굴
 - 문화행사, 체험행사, 특화행사 등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 골목상권 자원 활용 콘셉트 개발을 통한 인지도 제고 및 상권 경쟁력 강화

(3) 사업 성과³⁸⁾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일단시켜(18개시군): 가맹점 5,721개 점포, 회원 96,798명, 매출 9,467백만원
- 일단떠나: 가맹점 571개 업소, 매출 437백만원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활용: 102개기업(라이브커머스 67, 소상공인 홍보촬영 및 교육 35)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 43명, 수료 및 창업 17명
- 평화지역 관광벤처 기업육성: 교육 2명, 사업화 13명
-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 교육 24회 144명, 상표출원 126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주말야시장: 3개소, 매출 138백만원
- 제로페이 이용활성화 행사: 2회, 매출 15백만원
- 왓자지껄 마케팅: 13회(문화 7,페이백 6), 매출 357백만원
- 라이브커머스: 37회 매출 255백만원, 강원원정대: 6회, 매출 529백만원
- 강원형 골목상권 조성: 원주 상지대길 상점가 선정 및 기반환경·마케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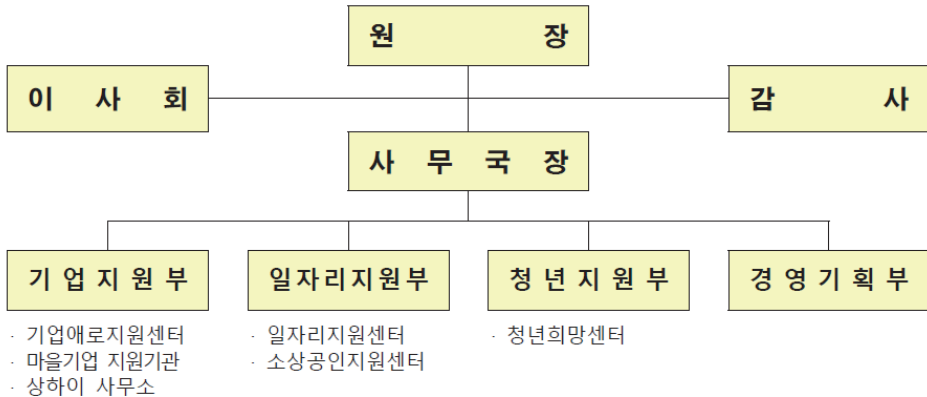
38) 강원도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강원도경제진흥원 업무보고)

5)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 충북은 충북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를 2021년 7월 개소함

□ 조직 및 인력

- 충북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2022.11.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인력은 총 7명으로 일반직 7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7	정규직(3) 비정규직(4)	일반직(7) 전문직(0) 지원직(0)

□ 주요 업무

- 창업교육, 컨설팅, 점포 지원사업 등을 운영

부서명	주요 업무
소상공인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경영교육 · 경영 컨설팅 ·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 창업응원금 지원 ·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업 내용³⁹⁾**□ 창업·경영교육**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창업절차, 사업 자금조달 방안, 마케팅 교육 등
- (경영교육) 3개 분야(법률, 경영일반, 마케팅) 특화 교육

□ 경영 컨설팅

- 6개 분야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 온라인 스토어(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컨설팅
- 스토어 내 상세페이지 제작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 창업응원금 지원

- 최근 3년간 부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

□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 공급가액 기준 80%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원(2백만원 한도)
 -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CCTV, POS 및 키오스크

39)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3) 사업 성과⁴⁰⁾**□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도비 190백만원)**

- 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 운영
 - 애로상담, 정보지원, 지원사업 발굴 등 소상공인 지원

□ 창업·경영개선 아카데미 운영 (도비 54백만원)

- 창업교육: 40명(예비 소상공인 창업자, 초기 창업자 교육)
- 경영개선 교육: 218명(세부 분야별 전문교육)

□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 (도비 65백만원)

- 사전진단 컨설팅: 20건
- 분야별 1:1 맞춤형컨설팅: 195건(인사노무, 법률, 세무, 창업 등)

□ 전통시장·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도비 120백만원)

- 전통시장 및 일반 소상공인 20명 모집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국비 1,35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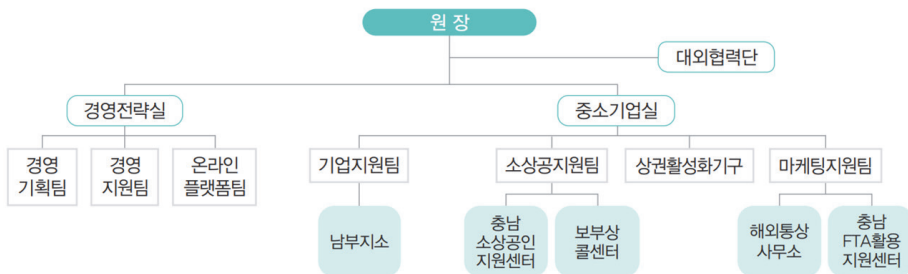
- 교육 32h, 컨설팅 인당 12회, 사업화자금 지급(최대 20백만원)
- 교육 32h(경영개선 28명 / 재창업 3명, 총 31명 완료)
- 컨설팅(멘토링) 인당 2회, 총 12회

40) 충청북도의회, 2022.11.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6) 충남 소상공인지원센터

- 충남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를 2019년 4월부터 운영 중

□ 조직 및 인력



자료: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2023년 주요사업

- 인력은 총 8명으로 일반직 6명, 지원직 2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8	정규직(6) 비정규직(2)	일반직(6) 전문직(0) 지원직(2)

□ 주요 업무

- 소상공인의 정부지원사업 유치를 지원하고, 마케팅 등 지원사업을 운영

부서명	주요 업무
소상공인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시 경영환경개선사업 • 가업승계(충남노포) 지원사업 • 보부상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애로사항 상담 - 정부·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 분야별 전문가 자문 연계지원 - 소상공인 관련 제도개선 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2) 사업 내용

□ **가업승계(충남노포) 지원사업**

- 경영지원금 지원
 - 사용분야: 시설개보수, 장비·프로그램 구입 등 8백만원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으로 지원, 초과비용 및 부가세는 자부담
- 전문가 자문 지원
 -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위원 매칭·자문 진행
- 충남 행복가게 인증현판 수여

□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 진출단계: 디지털 마케팅 지원금(최대 1백만원, 부가세 제외), 디지털 마케팅 교육(4시간)
- 활성화단계: 디지털 마케팅 지원금(최대 3백만원, 부가세 제외)

□ **보부상 콜센터**

-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 건의사항을 접수

(3) 사업 성과⁴¹⁾

□ **충남소상공인 육성지원 운영**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수요 맞춤형 지원

(단위: 개사)

세부 과제	목표	추진실적	주요 내용
합계	542	488	
역량강화교육	65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온라인마케팅 관련 교육 지원 • 지원규모: 권역별 순회교육 5회

41) 충청남도의회, 2022.11.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충청남도경제진흥원 업무보고)

세부 과제	목표	추진실적	주요 내용
경영환경개선 지원	105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노후 환경개선 및 홍보비 지원 지원한도: 2백만원 한도(90% 이내)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	3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온라인 마케팅 소요비용 지원규모: 40만원 이내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72	(1차) 44개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협업(3개사이상) 마케팅 비용 지원한도: 2백만원 한도(90% 이내) 2차: 42개사 접수 완료 및 평가예정

○ (사회적 안전망 구축) 복지향상 및 소상공인 애로 해결

(단위: 개사)

사업명	목표	추진실적	주요사업내용
합계	105	105	
보부상 콜센터 운영 (전문가 자문)	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애로상담 전담 콜센터 운영 전문가 자문 연계 지원 등
행복충만 힐링캠프	15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합회 15개 시군 임원 대상 역량강화 및 소상공인 네트워크 강화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70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 소요 비용 지원규모: 25만원 이내(50% 한도)

○ (성장지원) 지속 성장이 가능한 지역형 우수 소상공인 육성

(단위: 개사)

사업명	목표	추진실적	주요사업내용
합계	27	7	
장수기업승계 (충남행복가게) 지원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경영지원금 지원조건: 특수한 기술 및 전통을 승계·계승한 2대이상 기업승계 업체 지원한도: 8백만원 선정완료: 10개사 지원완료: 2개사
충남행복가게 재인증 지원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경영 및 홍보지원 지원조건: 가업승계기업 만료 업체 지원한도: 2백만원 이내 재인증완료: 10개사
소상공인의 날 행사	1회	11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홍보 및 판매전 운영
청년상인 판매전	12	12 (모집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지원내용: 판매전 참가 지원

□ 소상공인 애로사항 현장지원

- 전문가 / 지원업체 모집 및 선정(214개사 접수, 72개사 선정)
- 사전 인터뷰 및 전문가 매칭
- 전문가 자문 및 지원금 지급(자문 57회, 지원금 5개사 완료)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납부 확인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지원
 - 누적지원 인원: 4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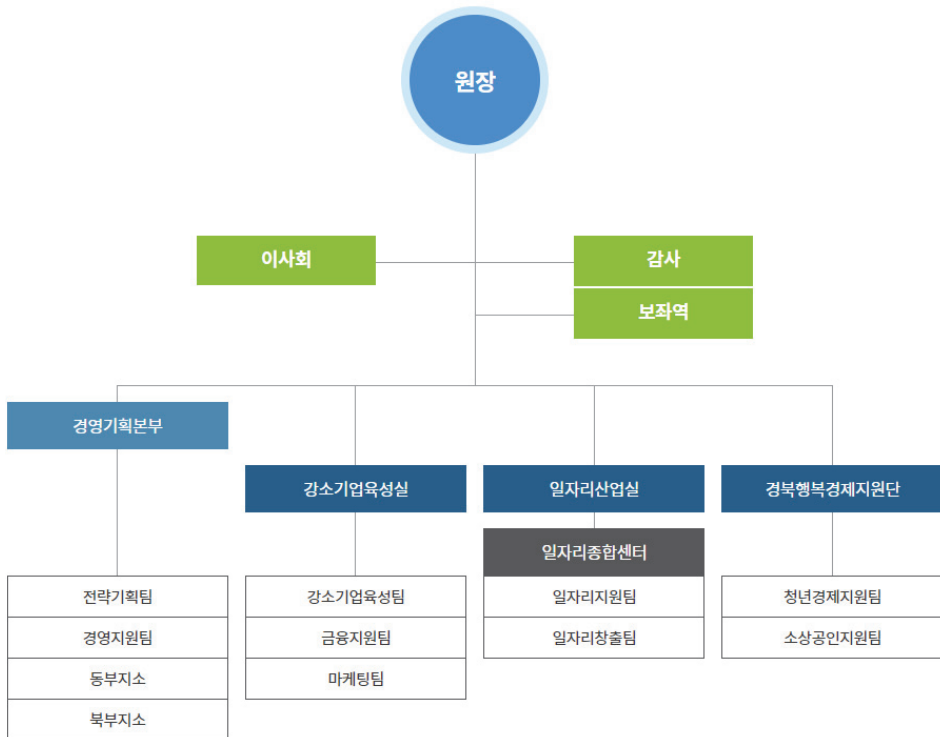
□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 대상업체 선정(100개사)
- 현장방문 205개사(1차,2차)
- 역량강화교육: 인사노무, C/S, 점포운영관리, 마케팅(100개사)
- 경영개선지원금 지급 76개사
 - 환경개선, 시설/집기, 내·외부 인테리어 등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경북은 별도 위탁 없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내에 소상공인지원팀을 설치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운영

□ 조직 및 인력



출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epa.kr>)

- 인력은 총 5명으로 일반직 4명, 지원직 1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5	정규직(4) 비정규직(1)	일반직(4) 전문직(0) 지원직(1)

□ 주요 업무

○ 맞춤형 컨설팅, 환경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

부서명	주요 업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컨설팅 • 맞춤형 환경개선 • 홍보 지원 • 안전위생 지원 • 스마트화 지원 • 오프라인 마케팅 행사 지원 • 전통시장 디지털전환 활성화 사업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 사업

(2) 사업 내용⁴²⁾

경북소상공인 새바람체인사업	도내 소상공인 대상 전문 컨설팅 및 경영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자생력 강화 및 사기진작 도모
민관협력형 배달업운영	민간배달업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독과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
경북소상공 행복점포 육성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핵심포를 '행복점포'로 선정 및 육성하여 성공모델로 확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여건 개선
경북소상공인 온라인희망마켓	비대면 소비전환 시대에 따라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경쟁력 제고, 유통채널에서의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 및 온라인 판로개척
안동시소상공인 네트워킹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역민, 창업기업과 안동 이슈 공유 및 상권 경쟁력 제고
상주시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사업	상주 전통시장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을 통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 유도
안동시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전통시장 디지털전환 활성화	경북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42) 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23, 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23 주요사업안내

영주시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고향시장 행복어울림 마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특성에 맞는 공동마케팅 이벤트를 통한 판로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3) 사업 성과⁴³⁾

□ (경영안정지원 확대) 현장과 애로 중심 경영개선 및 상권활성화 지원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스타점포 발굴 및 점포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자생력강화
 - 지원내용: 전문컨설팅, 점포환경 개선, 안전위생, 홍보물 등
 - * 경북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지원(212개소 지원),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 (22개소 지원)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확대 운영
 - 전통시장 내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상주시, 5개점포 지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3개시, 10,932개점포, 26.6억원 *계속 진행 중) 지원 및 재창업·폐업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현장 애로를 직접 해소
- 울진 산불재해 지역 추가지원
 -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을 통한 재해점포 집중지원(106백만원)
 - 대구은행 모금회 지정기탁 사업(50백만원, 배달앱 쿠폰지원)

□ (온라인시장 진입지원) 온라인·비대면시장 대응 소상공인 역량강화

- 경북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활성화('21.9.9. 오픈)
 - 소상공인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해주기 위해 중개수수료 완화(1.5%) 및 소비자 할인혜택(지역사랑상품권 연계 10%) 확대, 쿠폰할인 등
 - 지원대상: 배달서비스를 이용 중인 20개 시·군 소상공인
 - * 누적회원 16만명, 가맹점 수 8,740개, 매출액 226억(당해 164억), 주문건 수 100만건(당해 74만)

43) 경상북도의회, 2022.11.9,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경상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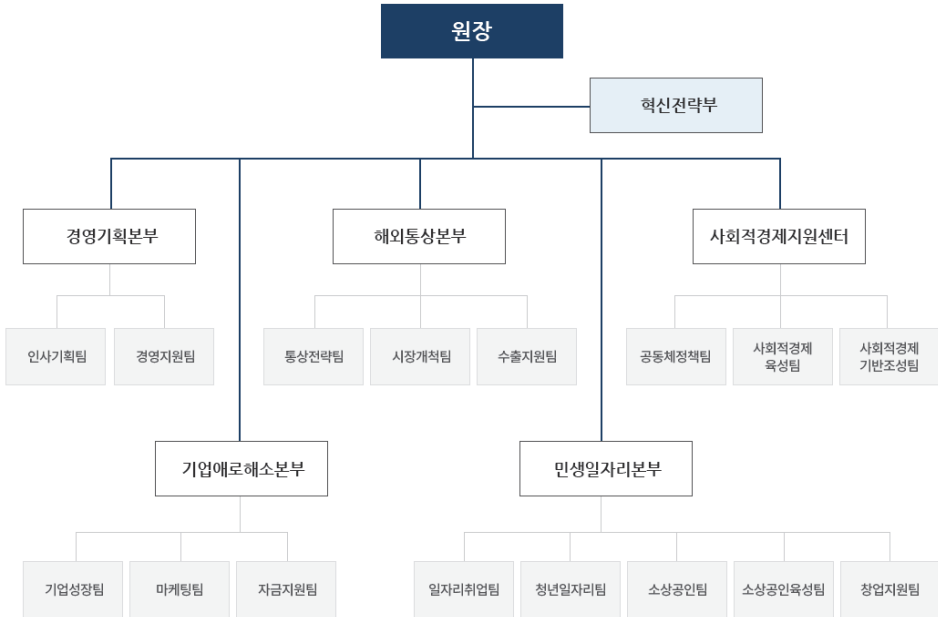
- 소상공인 온라인희망마켓 지원
 - 비대면시장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진출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매출증대의 기회 제공
 - 온라인플랫폼 프로모션을 통한 상점당 300만원 지원(233개소)
 - * 상시할인전(할인 및 무료배송 쿠폰), 바이럴·타겟 마케팅 등 지원
 -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클라우드펀딩 지원(10개소)
 - 유명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판촉행사 지원(20개소)
- 전통시장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온라인 입점은 시도하였지만 활용경험이 부족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시장 자생력 강화
 - 온라인특판행사 및 라이브커머스, 배송비 지원 등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전통시장 10개소, 전국배송 상점 25개소)
 - 네이버 전통시장 홍보기획전 페이지 개설 및 동네시장 장보기 입점시장 대상으로 체험단 마케팅 지원(진행 중)
 - 경상북도 홈페이지 내 전통시장 홍보 및 장보기 사이트 개설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위한 채널 확대(진행 중)

8) 전북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전북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여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와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로 나누어 운영 중이며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내 소상공인팀이 운영 중
 -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종합지원 허브센터로 소상공인 창업-경영-폐업(재창업)생애주기별 3단계 지원센터를 운영

□ 조직 및 인력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민생일자리본부 소상공인팀에서 소상공인광역 지원센터를 운영



출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sc.or.kr/>)

- 인력은 총 8명으로 일반직 1명, 전문직 3명, 지원직 4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8	정규직(4) 비정규직(4)	일반직(1) 전문직(3) 지원직(4)

□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운영 스타소상공인육성

부서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천년명가 육성 • 폐업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 •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 운영 • 소상공인 제로페이 활성화 •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 운영 • 소신닷컴 프로젝트 •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콜센터)운영 •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대외 홍보

(2) 사업 내용

사업기간	• 2022. 1. ~ 12.
사 업 비	• 951백만원(도비851, 시군비 100)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콜센터 운영: 소상공인 불편사항 청취 및 지원사업 안내 • 스타소상공인 육성: 유망 소상공인 발굴·성장지원 • 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창업·경영활성화 전문교육 • 전북천년명가 육성: 동일업종 30년 이상 영위 업체 지원 • 민생현장솔루션팀 운영: 14개 시·군 현장 방문 애로해소 컨설팅
세부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소상공인 육성: 6개사 선정 및 방송홍보 • 경영개선교육: 20회(시·군 현장 및 경영개선교육), 1,300명 • 전북천년명가 육성: 10개사 선정 및 경영지원, 방송홍보 지원 • 민생현장솔루션팀: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임실 등 24회

(3) 사업 성과⁴⁴⁾

○ 소상공인광역센터(콜센터)

- 재난지원금 안내 및 만족도 조사 8,765건

44) 전라북도의회, 2022.11.15, 2022년 행정사무감사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 비대면 경영전환지원
 - 사진·상세페이지, 영상, 라이브커머스 173개사
- 우수소상공인육성
 - 스타소상공인 6개사, 천년명가 10개사 선정
- 폐업 (예정)소상공인 재기지원
 - 행정적, 물리적 폐업정리지원 118개사

9) 전북 소상공인희망센터

- 전북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여 2011년 7월 ‘소상공인희망센터’를 설치하고, 시설 중심으로 기업 입주공간 제공 및 일부 지원사업을 추진중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민생일자리본부 소상공인육성팀에서 소상공인희망센터를 운영

□ 조직 및 인력

- 조직 구성은 전북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와 동일함
- 인력은 총 6명으로 일반직 4명, 지원직 2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6	정규직(4) 비정규직(2)	일반직(4) 전문직(0) 지원직(2)

□ 주요 업무

-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운영

부서명	주요 업무
소상공인희망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창업보육 -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2) 사업 내용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사업비	• 420백만원(도비 390, 기타 30)					
지원대상	•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 초기 창업자					
사업내용	• 보육지원, 보육업체 네트워킹, 역량강화교육 등					
	보육실	공용시설				
		교육장	회의실	공용기기	창고	기타
84실 (88업체)	2실	5실 (화상회의실 포함)	3실	6동	• 제품촬영실 • 샤워실	
세부추진계획	• 보육지원(88업체):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 보육지원 • 네트워킹(4회): 협업 활성화와 유관기관 교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역량강화 교육(6회): 초기 사업계획, 마케팅, 자금운영 등					

(3) 사업 성과⁴⁵⁾

- 소상공인희망센터운영
 - 창업보육 85개사, 성장지원 11개사, 세무컨설팅 16개사
- 소상공인경쟁력강화
 - 역량강화컨설팅 198개사, 민생현장솔루션 24회
- 순창장류소공인특화지원센터
 - 교육 5회, 판촉지원 30개사, 현대화 포장재 지원 53개사

10) 제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2019년 6월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개소 후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위탁 운영 중

45) 전라북도의회, 2022.11.15, 2022년 행정사무감사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운영 현황

□ 조직 및 인력

구분	담당자	업무
센터장	고*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총괄
차장	강*석	소상공인지원 총괄
주임	강*녕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지원사업
주임	한*혜	골목상권 시설개선, 현장경영멘토링 지원사업
주임	박*인	홍보, 예산, 민관협력형 배달앱
주임	김*훈	경영아카데미, 재기지원, 건강검진 지원사업
주임	장*진	온라인마케팅, 상시콜 상담 서비스 지원사업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jejusc.kr)

○ 인력은 총 6명으로 일반직 1명, 전문직 5명 등으로 구성

총 인원수	고용형태	직제
6	정규직(1) 비정규직(5)	일반직(1) 전문직(0) 지원직(5)

□ 주요 업무

○ 창업교육, 경영환경 개선, 멘토링, 마케팅 등을 지원

부서명	주요 업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지원사업 • 재기 지원사업 •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정리 지원 • 경영아카데미 • 현장 경영 멘토링 • 전통시장 택배비지원 • 예산, 홍보, 배달앱 • 상시콜 상담 서비스

(2) 사업 내용⁴⁶⁾

- 소상공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적극 지원 추진: 794개 업체
 -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교육을 통한 위기 극복 기반 구축
- 지역 상권별 맞춤형 경영 지원: 145개 업체
 - 지역 상권별 맞춤형 경영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지원 및 택배비 지원 등
- 지역 중심 혁신 창업 활성화: 예비창업자 100여명 등
 - 창업공간, 체험점포 및 사업화 지원

(3) 사업 성과⁴⁷⁾

- (창업·경영아카데미) SNS홍보기법, 마케팅, 고객서비스 등 교육: 9회 230개 업체
- (현장·종합 컨설팅, 상시콜상담) 경영 환경점검, 문제점 진단·개선방안 제공: 321개 업체
- (원상복구 지원) 사업정리업체 원상복구 철거비 지원: 28개 업체
- (골목상권 시설개선) 골목상권 점포 시설 개선: 88개 업체 선정
- (재기 지원) 사업장 재구축 및 홍보 비용 등 지원: 15개 업체 선정
- (온라인마케팅 지원) 키워드 광고, 디자인 제작, 오픈마켓 입점비 등 지원: 82개 업체 선정
- (건강검진비용 지원) 영세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118명 수검완료
- (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44개 업체
- (창업자 지원) 창업교육, 경영체험, 사업화 자금 지원: 27개 업체
-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특화거리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13개

4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2.10.1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계위원회 회의록(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4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2.10.1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계위원회 회의록(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